

## 모시는 글

---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원년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부터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성인지 예산 웹사이트(<http://gb.kwdi.re.kr>) 참고).

성인지 예산은 재정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한 결과를 분석·수정함으로써 국가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이해의 폭은 좁은 편입니다.

제57차 여성정책포럼에서는 보육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사업 등과 같이 우리생활과 밀접한 사회재정지출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김 태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행사 일정

14:40~15:00	등	록	
15:00~15:10	개	회	식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사	회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실장)
15:10~15:50	주	제	발 표 1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김현숙(송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50~16:30	주	제	발 표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정성균(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16:50~17:30	주	제	발 표 3 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병목(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30~18:00	종	합	토 론 및 폐 회



# Contents

---

## 발표 1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1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문

김현숙(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 73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정성균(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 발표 3

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 119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병목(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2005년~2009년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서론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II. 보육예산의 추이분석: 2005-2009 / 6
1. 2005-2007 보육정책예산의 추이 및 특징 / 6
2. 2008-2009 보육정책 예산의 추이 및 특징 / 10
III. 보육예산의 여성 취업에 미친 영향 분석 / 16
1. 연구목적 및 방법 / 16
2.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여성 취업 / 23
3. 보육료지원과 보육서비스 구매 / 29
IV. 보육예산의 젠더관계에 미친 영향 분석 / 34
1.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적 사항 / 34
2. 보육료 지원의 성별영향 / 36
3. 보육료 지원의 성별영향 차이의 원인 / 40
V. 보육예산의 돌봄부문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 46
1. 보육교사의 증가와 처우개선 없는 보육예산의 증가 / 47
2. 모성보호정책의 역설 / 54
3. 기본보조금 / 56
4. 평가인증제 / 57
VI. 잠정적 결론 / 59
참고문헌 / 60





#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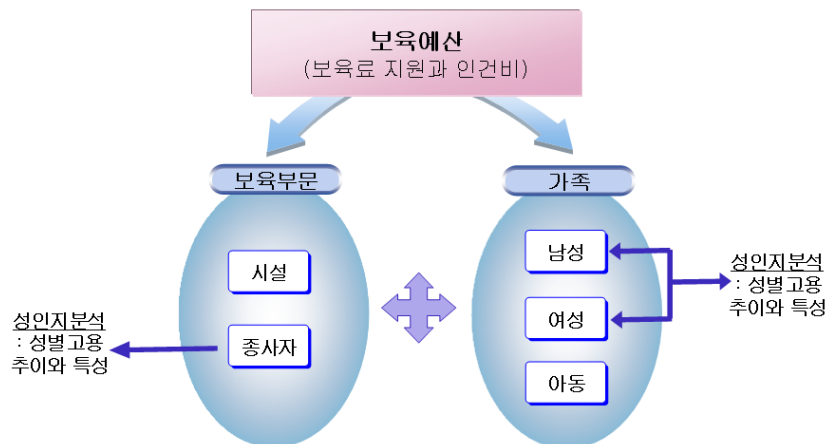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보육정책은 1조 6천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예산규모가 크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국정과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으로, 여성정책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은 여성정책 담당기관에서 다루어진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성정책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정책대상이 가구와 가구성원 모두라는 점에서 별도의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정책이다. 2004년에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과 보육의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여성정책으로 다루어졌으나 다시 2008년에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다. 보육정책은 여성과 남성, 때로는 아동, 부모, 가족 등과 같이 특정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그것의 목적이 여성의 지위변화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수반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서비스는 비용지불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분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보육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아동이 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부모와 정부가 지불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정부의 보육예산의 종착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가 성별로, 가족내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를 단위로 하는 예산의 영향 이외에 성별영향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이 가능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육예산의 최종 종착지를 보면, 크게는 보육부문과 가족이며, 이를 세분화하면 보육부문에는 시설과 종사자, 가족에는 남성, 여성, 아동이 이에 속한다. 둘째, 예산의 최종 종착지를 기준으로 하여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가족내의 여성과 남성, 보육부문 내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때이다. 셋째, 성인지 예산분석의 내용은 1)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2) 남성과 여성의 젠더관계에 미치는 영향, 3) 보육부문에서 종사자의 고용추이에 대한 성인지 분석(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보육예산의 성인지 분석의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보육예산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료지원과 인건비로 한정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예산은 시설별지원과 아동별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기타 인프라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별지원에는 인건비를 비롯해 차량, 교재비 지원이 포함되며, 아동별 지원에는 저소득층보육료, 5세아무상보육, 장애아무상보육,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해당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보육예산의 시기별 추이와 특성 분석(2005-2009)

본 연구의 대상 시기는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이다. 2005년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과 출산률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보육정책을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정립하여 여성가족부를 신설한 해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보육정책이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해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예산의 추이와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예산의 추이분석에는 예산규모, 성질별 예산구분에 따른 추이와 특성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며, 더불어서 보육예산의 추이와 연동하여 보육종사자의 고용추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률의 추이를 함께 분석하여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육예산의 추이와 특성을 밝히기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보육예산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육과 여성고용에 관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였다.

### 나. 복지패널 분석을 통한 보육예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육료 지원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료의 성별영향을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으나, 조세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현금 이전 정책이 한 가구의 실질 소득을 올려 가구 구성원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현 시점에서나 잠재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때, 보육료 지원의 여성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은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의 중요한 지점된다.

이 연구내용은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되어온 보육료 예산의 수급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와 여성의 특성을 밝힌다. 복지패널은 가구의 제반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원 개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복지 욕구, 아동 보육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보육료 지원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를 밝힌다. 보육료 지원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양 방향 (정적, 부정) 관계를 횡단면적으로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가구 단위와 소득에 연동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내용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7,000여 가구를 조사한 복지패널 2006-2008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다. 보육예산이 젠더관계(남녀의 지위 및 생활세계 변화)에 미친 영향

본 연구내용은 패널자료 분석에서 다루지 못하는 질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육예산은 한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히 보육료 지원의 절대적 양만으로 여성의 기회비용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표준보육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비용(전체보육비용)에 대한 보육예산 분배정도와 보육서비스 환경(국가중심, 시장중심 등) 등을 가구형태(홀벌이, 맞벌이, 모자/부자 가정)에 따라, 그 구성원 남성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현재 보육예산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009년 부분적으로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녀양육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의 부모와 제공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간에 자녀양육을 포함한 생활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육예산의 젠더관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시간과 역할을 토대로 보육서비스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의 젠더관계는 보육료 지원 전과 후의 부부 경제활동 영향, 가구소득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분석이 가능하고 보육료지원의 가구형태별(모자가구, 부자가구) 효과를 통해서도 젠더관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내용은 부모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부모 심층면접의 대상은 보육료 지원의 유무와 보육시설의 형태, 가구형태에 따라 표집되었으며, 구체적인 면접대상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보육료 지원 받음		보육료지원 받지 않음	계
	국공립	민간		
홀벌이	1	1	1	3
맞벌이	1	1	1	3
모자가정	1	1	1	3
부자가정	1	1	1	3
계	4	4	4	12

#### 라. 보육예산의 시설종사자의 고용에 미친 영향

기존에 축적된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보육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실시하였고, 보육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보육서비스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은 한국의 보육교사를 비롯한 차량운전사, 조리사 등의 보육노동자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노동자의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육예산의 증가와 보육부문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추이를 연관시킨 성인지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내용은 보육교사의 고용추이, 임금추이, 근로시간추이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이분석을 하며, 더불어 보육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종사자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부모대상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보육을 위탁하는 국공립육시설, 민간보육시설(법인, 비법인) 종사자를 각각 2명씩 총 4명 조사하였다. 면접 내용은 보육예산의 증가가 자신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경험을 묻는 것으로, 반구조화된 질문들로 구성되었고, 자료의 보완을 위해 보육노조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접을 실시하였다.

## II. 보육예산의 추이 분석: 2005-2009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5년간의 보육정책 예산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정책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되었고, 2005년에 여성가족부가 신설되면서 보육정책의 소관부처가 되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육정책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보육정책의 소관부처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보육정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뿐 아니라 여타 부처에서도 보육시설의 설치나 영유아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 연구에서 보육정책예산은 소관부처와 여타 부처에 산재해 있는 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취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의 기틀을 갖춘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5-2007년과 2008년-2009년 두 시기로 나누어 보육정책 예산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2005-2007 보육정책예산의 추이 및 특징

#### 가. 급증한 보육정책 예산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2006년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2001년과 대비하여 1조 4,150억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예산은 1,614,397백만원으로 2008년 1,361,997백만원보다 252,400백만원 증가하였다. 그 이전 시기를 보더라도 2003년 3,120억원에서 2004년 4,038억원으로 29.4% 증가하였고,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한 후인 2005년도 보육예산은 국고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48.0%(1,930억원) 증가한 5,956억원(문광부와 농림부 예산 제외)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lt;표 II-1&gt; 보육예산의 추이(2005년~2007년)

(단위: 백만원)

해당 부처	회계	사업명	'05년	'06년	'07년
문화관광부	특별	공연장보육시설 설치운영	-	-	200
농림부	특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22,362	15,742	26,783
여성가족부	일반	저소득모부자가정 보증보험료지원	-	105	146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	-	325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	-	-	310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운영	-	-	20
		저소득모부자가정이차보전	60	45	178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	29,298	30,005
		중사자인건비	262,242	202,991	247,158
		민간영아기본보조금	-	94,203	132,729
		기본보조금사업평가	-	-	100
		민간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	-	2,777
		차등보육료지원	169,858	273,284	409,004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76,895	128,430	130,307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14,220	27,720	32,403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6,114	9,120	21,891
		보육시설확충	58,070	22,400	33,227
		보육시설환경개선		11,868	8,502
		보육사업관리	-	267	262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1,224	315	315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		1,163	1,163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300	415	665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1,179	1,235	1,235
		보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	300	300	285
		한국보육시설연합회	60	60	60
		보육행정시스템구축	-	1,000	250
		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600	1,580	3,160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	-	4,218
		교재교구비	10,044	10,841	9,679
		차량운영비	1,467	4,084	4,084
합계			624,995	836,466	1,101,441

보육정책 예산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I-2>과 같다.

보육정책 예산의 부문은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저소득가정보육지원, 보육인프라구축, 보육연합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은 보육시설운영지원과 보육행정시스템구축사업(2006년 요구 조정된 예산안에 포함됨)이 포함된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범 실시 지원되고 있는 '기본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사업은 차등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2005년부터 신설) 등이 해당된다.

한국 보육의 재정 지원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시설, 법인의 시설 중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과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법인은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법인외(지원)는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의미하며 법인의 시설은 인건비만을 지원한다.<sup>1)</sup> 시설별 지원에는 인건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포함된다.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장의 인건비 80%(읍면 농어촌지역은 100%)를 지원(21인이상 시설)한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은 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이다.

보육교사는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영아반교사는 영아반 2개 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2/3, 3/5, 4/7, 8/15, 11/20명)를 지원한다 (농어촌지역 및 1세 이하 영아반은 1개반이라도 80% 지원)

<표 II-2> 보육 예산(국고) 추이 ('02~'07)

(단위:백만원, %)

부문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육예산 총액	209,190 (100.0)	310,684 (100.0)	402,642 (100.0)	595,625 (100.0)	791,008 (100.0)	1,043,474 (100.0)
보육시설운영지원	109,178 (52.2%)	185,742 (56.6%)	227,848 (56.6%)	273,754 (46.0%)	313,118 (39.6%)	396,777 (38.0%)
보육시설기능보강	2,070 (1.0%)	6,587 (2.1%)	20,822 (5.2%)	50,420 (8.5%)	34,268 (4.3%)	41,729 (4.0%)
저소득가정보육지원	97,445 (46.6%)	117,143 (37.7%)	152,445 (37.9%)	267,088 (44.8%)	438,554 (55.4%)	593,605 (56.9%)
보육인프라구축	330 (0.2%)	1,155 (0.4%)	1,470 (0.4%)	4,303 (0.7%)	5,008 (0.6%)	11,303 (1.1%)
한국보육시설연합회	167 (0.1%)	57 (0.02%)	57 (0.01%)	60 (0.01%)	60 (0.01%)	6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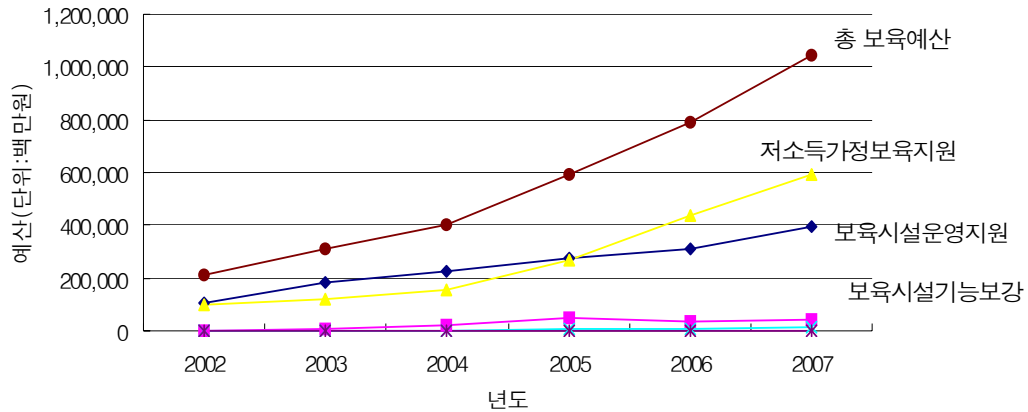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각년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설명자료

## 나. 높은 비중의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보육정책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부문별 구성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부문별 예산 구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그것은 다른 부문에 비해 저소득가정 보육료 지원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 II-2>과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가정 보육료지원 사업이 가장 높은 예산 비중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된 내용은 차등보육료지원을 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 지원 법인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나)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다)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라)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마)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바)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97년,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사)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설치한 보육시설

보육예산 추이('02~'07)



<그림 II-1> 보육 사업별 예산 추이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 정부지원 예산과 대상아동수

(단위: 억원, 명)

저소득층 차등보육료1)							
구분	'99	'01	'02	'03	'04	'05 *	'06 *
예산	287	600	490	612	937	1,699 (2,125)*	2,733 (3,591)
지원대상	75,683	146,878	105,780	118,897	182,408	272,436 (286,828)	407,250 (424,463)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2)							
예산	29	59	61	485	509	534 (848)	1,284 (1,180)
지원대상	14,700	14,700	14,474	86,982	86,982	86,982 (104,825)	154,349 (141,815)
장애아 무상보육지원3)							
예산	-	-	-	50	53	142 (202)	277 (222)
지원대상	-	-	-	4,285	4,285	9,000 (12,791)	15,000 (12,013)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4)							
예산	-	-	-	-	-	61 (173)	91 (225)
지원대상	-	-	-	-	-	30,000 (84,891)	30,000 (73,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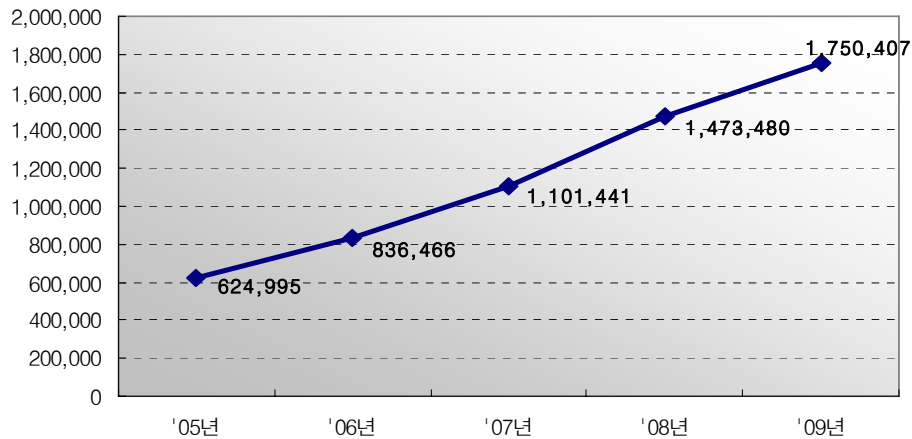
주: \* 2005,2006년은 예산과 ( )은 실제 집행액(결산액)이다. 그리고 실제지원 지원아동수이다.

- 1) '05년도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수준까지 지원, 06년도는 4층까지 확대 4층은 4인가족 247만원 이하소득가구의 보육비용 40%지원한다.
- 2) '05년도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06년도는 90%(농어촌 100%)수준이하가구 지원한다.
- 3) '05년도부터 장애등급(중증/경증)에 따른 지원단가 일원화
- 4) 대상자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지원한다. 연령별 정책지급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통계자료(2006), 2005,2006 여성가족부 연차보고서(해당년도)

## 2. 2008-2009 보육정책 예산의 추이 및 특징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에서 2009년에 이르기까지 보육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II-2> 보육예산의 추이(2005년~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보육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정권교체 이후 달라진 보육정책의 내용은 크게 소관부처의 변화와 보육료지원 방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보육관련 예산을 지출하는 부처는 농식품부, 노동부, 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를 제외한 세 부처의 보육예산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예산은 총예산을 보면 2009년에는 2008년과 비교하여 16.5% 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보육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등보육료지원에 의한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 공공성 확충이 특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보육사업의 방향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수준을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2009년 7월부터 0-1세아 11만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변화된 내용은 보육료 지원방식이다. 그것은 첫째,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없애고 차등보육료 재원에 통합하였다.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으로 이원화했던 보조금의 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되어, 유아에 대한 보조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아이사랑 카드라는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에게 카드형태로 제공되고, 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를 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다. 셋째, 국비 324억원



으로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의 만 0-1세 영아들에게도 양육수당으로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기본보조금까지 통합하여 차등보육료로 일원화된 보조금의 현재 소득계층별 수혜대상을 변화시켜 2009년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 80%까지 무상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다(김현숙, 2008: 127-133).

2008년부터 보육정책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지만, 그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제시하면서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네 번째 주요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적 분담 과제는 첫 번째 세부계획인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를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돌봄과 관련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돌봄관련 사업과제 개요

주요과제	계획	세부계획	사업과제개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가구 학부모 유아학비부담 완화</li> <li>-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무상·차등교육비 단계적 지원</li> <li>- 기본보조금 제도도입</li> <li>- 차등보육·교육비 지원확대</li> <li>-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li> <li>-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li> <li>- 다자녀 보육·교육비 지원확대</li> </ul>
		2. 수요자 중심 보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li> <li>- 보육시설 확충으로 군복무와 가정간 양립지원</li> <li>-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li> <li>- 시간연장보육 활성화</li> <li>- 장애아 보육활성화</li> <li>- 택지개발 시행시 보육시설용지 공급확대</li> <li>- 주공임대주택단지 보육시설 지속 건립으로 저소득층 여성 직장생활 지원</li> </ul>
		3. 보육서비스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보육과정 이해</li> <li>-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부모에게 보육 시설 정보제공</li> </ul>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1.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2. 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3.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4. 가정내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 사업확대 및 서비스 질적 수준제고</li> <li>- 민간베이비시터 관리체계 마련검토</li> <li>- 아동양육 종합지원서비스 체계구축</li> <li>-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확대</li> <li>-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li> <li>-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제도</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프랄 확충 및 서비스 다양화</li> <li>- 소외계층 가사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li> <li>- 장애아가족의 돌봄 휴식지원서비스</li> <li>- 가족간호휴직제 노력의무규정 시행</li> </ul>

주요과제	계획	세부계획	사업과제개요
	3. 일-가정 양립	1.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2. 남성의 육아 및 가사 활동 참여 3.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수준 확대 - 대기업 산전산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양립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남성 및 맞벌이 부모 자녀교육 참여기회 확대

<표 II -5> 보육예산의 추이(2008년~2009년)

(단위: 백만원)

해당 부처	회계	사업명	'08년	'09년
농식품부	특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1,108	40,648
노동부	기금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2,675	2,675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10,287	11,304
국방부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설치 추진	1,630	1,560
복지부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47,926	83,942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125,512	135,600
		민간영아기본보조금	229,763	-
		민간유아기본보조금	15,000	-
		민간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10,000	-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299,383	324,673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	7,556
		차등보육료지원	603,132	1,013,586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31,281	49,040
복지부		농어촌취약지역소규모 보육(신규)	-	91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2,390
복지부		농어촌보육시설교재교구비	10,153	10,153
		보육사업관리	364	1,153
		보육시설기능보강	15,534	21,147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1,314	1,314
		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3,560	3,401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8,427	-
		보육시설환경개선	8,505	-
		보육실태조사	-	1,000
		보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	250	250
		보육행정시스템구축	800	400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665	665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400	400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	1,540	1,640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211	4,940
		한국보육시설연합회	60	60
합계			1,473,480	1,750,407

2008-2009년 동안 보육관련 예산 추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Ⅱ-5>.

보육예산 총액의 측면에서 보면, 2009년 보육관련 예산은 1,966,625백만원이며 2008년 1,601,854백만원에 비하여 364,771백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은 정부조직 개편이전 여성부에서 수행하던 것으로 보육사업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 보육예산분포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이 가장 많으며 농식품부, 노동부, 국방부의 순으로 나타난다. 2009년 보육관련 총예산 1,966,625백만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예산 비율이 88.9%, 노동부 8.9%, 농식품부 2.0%, 국방부 0.7%이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취지에 비추어 보육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관련된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보육돌봄서비스(중사자인건비),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차등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등 9개가 있으며, 2009년 예산은 1,614,397백만원으로 2008년 1,361,997백만원보다 252,400백만원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민간유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등은 2008년에 종료된 사업이며 민간영아기본보조금사업은 차등보육료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수요자중심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부청사 어린이집설치추진,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취약지역 소규모 보육,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등 5개이며 2009년 예산은 34,860백만원으로 2008년 1,630백만원에서 33,230백만원 증가된 금액이다. 농어촌취약지역 소규모 보육과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을 2009년에 새로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이 영역의 예산증가율이 높아졌다.

보육서비스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 보육시설교재교구비, 보육사업관리, 보육시설기능보강, 보육시설중사자 보수교육, 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및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15개이며 2009년 예산은 46,523백만원으로 2008년 55,783백만원에서 9,260백만원 감소하였다.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사업)과 보육료실태조사사업은 2009년에 신설된사업이며,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되었고,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사업은 2008년에 종료된 사업이다.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지원사업이며 예산은 두 해 동일하게 26백만원이다. 농식품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것으로, 2009년 예산은 40,648백만원으로 2008년 41,108백만원에서 460백만원 감소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지원(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2007년에는 예산이 177,587백만원이었으나, 이후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보육정책예산의 증감 및 신설 등을 기준으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사업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며, 2008년과 2009년 예산이 동일한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관리,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시설중사자보수교육(보조) 등이다. 2008년에는 실시

했으나 2009년에 없어진 예산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보조), 보육시설환경개선(보조) 등 보조금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가운데 2008년에 신규로 설치된 것이 많으며, 2009년에 실시될 신규 사업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제공, 보육료지원체계 개선(전자바우처), 보육실태조사 등 4개이며 41,85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동사업관리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이 50%이상 증액되었다. 이러한 증액은 장애아 보육, 다자녀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사업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맞춤형보육서비스와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로서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확보가 중요하나 보육교사의 월평균임금은 유치원교사 임금의 62.2%~73.6%, 사회복지나 9급공무원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근무시간은 유치원교사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 설명자료, 2008). 시간연장 및 장애아 통합보육 등 취약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에는 전년도 보다 252억 9,000만원(8.4%)을 증액하였다.

보육 사업 가운데 가장 예산이 큰 것은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4세이하 영유아 보육비용을 연령별, 소득 수준별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13,587백만원('08년 603,13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년대비 68.1%로 크게 증가되었다.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08년까지 별도사업이던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사업을 흡수·통합하였으며 전년 대비 21.7%가 증액되었다. 차등보육료와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을 합산하여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09년하반기부터는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차등지급 계층을 3단계로 나누어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방향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신규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것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으로 예산은 323억 9,000만원이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그 동안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 시설이용아동에게 집중됨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보육관련 사업을 사업수단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6> 보육관련 사업예산의 사업수단별 예산현황

사 업	2008(%)	2009(%)
1. 인건비지원 사업(2개)	309,670(19.3%)	335,977(17.1%)
2. 시설마련 사업(14개)	62,157(3.9%)	50,741(2.6%)
3. 수당지급 사업(13개)	1,227,283(76.6%)	1,567,062(79.7%)
4. 서비스 제공 사업(6개)	523(0.04%)	1,713(0.1%)
5. 연구나 제도 운영관련 사업 (9개)	2,221(0.14%)	11,132(0.5%)
합 계	1,601,854(100%)	1,966,625(100%)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와 관련된 관련 사업 43개에 배정된 예산을 비율로 보면 인건비지원사업의 경우, 2개사업에 17.1%, 시설마련 관련 14개 사업에 2.6%, 연구나 제도운영관련 9개 사업에 0.5%, 서비스제공 관련 7개 사업에 0.1%로 나타난다. 또한 해당조건의 인적대상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관련 14개 사업에 보육관련 예산의 79.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나 인프라구축보다는 보육료, 양육비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사업수단별로 2008년과 2009년 보육예산의 증감현황을 보면 2009년 보육예산은 서비스 관련 및 제도운영관련 신규사업 등이 많아지고 수당지급항목 및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2.4% 증가하였다. 사업수단별로 2008년과 2009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시설마련과 관련된 항목 이외에는 대부분 절대금액이 증가하였다. 총액대비 비율을 보면 인건비지원과 시설마련 항목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수당지급, 서비스제공, 연구나 제도 운영관련사업은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수당지급 관련 항목이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핵가족화 진전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 확대되고는 있으나 국공립 정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8.3%정도로 수요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을 보면 보육시설마련, 보육사업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보다는 수당 등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른 금액지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 제도적, 근본적인 대응책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III. 보육예산의 여성 취업에 미친 영향 분석

#### 1. 연구목적 및 방법

##### 가. 연구 목적

여성의 취업을 전제 조건으로 보육료를 보조하거나 가구 소득이나 여성 취업과 무관하게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육료를 지원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의 취업과는 무관하게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 점차 지원 대상을 차차 상위 이상으로 확대시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 여성 취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지닐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구 단위로, 양육 책임자인 부모, 주로 모의 취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하에서는, 보육료 지원은 여성 취업에 양 방향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아동 양육의 책임으로 취업 의지와 욕구가 있던 여성에게 보육 시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육 비용을 낮추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보육비용과 여성노동공급의 관계를 밝히는 기존의 연구는 자녀보육비용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함을 보여주고 있어, 보육비 지원은 이러한 자녀보육비용의 부정 영향을 상쇄하여 여성 노동 공급을 장려할 가능성이 있다(Blau, 2000). 반면 보육료 지원이 여성 취업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가구 단위의 소득 수준에 연동되어 있을 때, 부가(2차) 노동자로서의 여성 취업으로 인한 소득 향상은 보육료 지원 수급 자격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취업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내용은 보육료 지원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료의 성별영향을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육료 지원이 성별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되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조세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현금 이전 정책은 한 가구의 실질 소득을 올려 가구 구성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때,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기혼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되어온 보육료 지원과 여성 취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별 영향평가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현행의 국가의 보육료 지원은 공식 부문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조건부로 하고 있으므로, 비공식 부문의 보육 서비스 이용 보다는 공식 부문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공식 부문의 보육 서비스 이용이 친·인척에 의한 무급 혹은 저렴한 돌봄 노동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때, 공식 부문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부모가 아닌 또 다른 돌봄 조력자로서의 여성들의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의미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 부문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성별 영향의 지점이라 볼 수 있다.

## 나. 연구 자료와 기초 분석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7,000여 가구를 조사한 복지패널 2006-2008 자료를 사용한다. 복지패널은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고 있어 유의미한 표본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3개년 밖에 축적되지 않지만 보육 예산이 급격하게 확대된 시기를 포함하여, 확대 과정에서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면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지패널은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 여부를 응답자에게 묻고 있다. ‘기타 정부보조금’ 항목에는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모·부자가정수당, 가정위탁금, 학비지원, 국가요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기타 보조금 등과 함께 영유아보육료 항목이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운데 기본보조금은 시설에 직접 지급되므로 실수요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등보육료가 아닌 기본보조금 형태의 보육료 지원만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복지패널에 나타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기본보조금이 아닌 차등보육료에 대한 것이라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기타 정부보조금’ 항목은 지난 한 해, 즉 2006년 조사일 경우 2005년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연간 액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설문도 해당 한 해 동안의 평균적 상황에 대해 묻고 있다. 여성의 빈번한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에 비추어 볼 때, 1년이란 기간은 보육 상황에 있어서도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Ⅲ-1> 가구 유형별 영유아 보육료 수급 분포

		2006		2007		2008	
복지패널에 표집된 총 가구 수		7,072		6,580		6,314	
그 중 6세 미만 아동 거주 가구 수		1,068		945		966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보육료 지원	72	36 (50%)	53	37 (70%)	60	34 (57%)
양부모 가구	양부모 가구 중 보육료 지원	996	224 (22%)	892	310(35%)	906	323 (36%)

총 가구 수는 복지패널 각 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총수를 의미한다. 분석 대상 가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인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로 제한했다. 총 가구 가운데 6세 미만의 아동이 적어도 한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2006년 1,068 가구, 2007년도 945, 2008년도 966 가구이다.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은 비중은 양부모 가구보다 한부모 가구에서 두 배 이상 높았다. 그 이유는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2007년에는 한부모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2008년도에 다시 비중이 약간 낮아졌지만, 표본 수가 적어 추이에 대한 신뢰 있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그러나 2006년도와 2008년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 수 규모가 자연적으로 약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조사

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보육료 지원 자격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Ⅲ-2> 소득 분포별 영유아 보육료 수급 가구 분포

	2006			2007			2008		
	보육료 비수급	보육료 수급	수급 비중(%)	보육료 비수급	보육료 수급	수급 비중(%)	보육료 비수급	보육료 수급	수급 비중(%)
경상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	52	34	39.5	18	38	67.9	22	30	57.7
100-120%	37	20	35.1	10	21	67.7	11	17	60.7
120-150%	72	53	42.4	26	40	60.6	23	25	52.1
150% 이상	647	153	19.1	544	248	31.3	525	283	35.0
합계	808	260	24.3	598	347	36.7	581	355	37.9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공시된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가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100-120% 사이, 120-150% 사이, 150% 이상인 가구로 나누어 영유아 보육료를 수급한 가구 분포를 살펴보았다. 복지패널에서 소득 자료는 월별 소득액 대신 연간 경상소득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계산되는 최저생계비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소득 구간을 설정하였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재산 등을 감안한 '소득인정액'을 추정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차상위와 차차상위(각각 120과 150%이상) 라는 기준선이 실제 지원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의 소득분포에 대한 대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시한다. 6세 미만 아동과 부모가 사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 표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의 보육료 수급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2008년도에는 150% 이상되는 가구의 수급 비중이 약간 높아졌는데, 수급 자격에 있어서 소득 기준의 완화의 결과인 듯이 보인다.

보육비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액과 개별 가구 지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지원액 자료는 2007년도부터 수집되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액은 연간 200만원 미만이며 소득 구간별로 큰 차이가 없다. 최저생계비 150% 이상 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있어서, 보육료를 수급하는 경우 전체 보육비용(정부지원액+개별 가구 지출액)은 연간 300만원정도이고 보육료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267만원보다 다소 크다(<표Ⅲ-3>). 2008년도에는 150% 이상 가구에 있어, 보육료를 수급하는 가구가 받는 지원액과 비수급가구가 지급하는 연평균 보육비지출액이 200만원 정도로 비슷하다. 그러나 수급하는 가구는 추가로 134만원 정도를 더 지출하고 있어 보육료를 지원받더라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전업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가구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 소득 수준별 총 보육비 지출과 보육료 지원액

2007							
		보육료 수급			보육료 비수급		
		가구 수	연평균 (만원)	월평균	가구수	연평균 (만원)	월평균
경상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	총 보육비 지출	27	68.4	5.7			
	보육료 지원액	34	188.7				
100~120	총 보육비 지출	12	45.0	3.8			
	보육료 지원액	20	200.7				
120~150	총 보육비 지출	21	61.7	5.1			
	보육료 지원액	37	209.0				
150~	총 보육비 지출	171	118.7	9.9	310	267.6	22.3
	보육료 지원액	246	185.7				

2008							
		보육료 수급			보육료 비수급		
		가구 수	연평균 (만원)	월평균	가구수	연평균 (만원)	월평균
경상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	총 보육비 지출	24	74.5	6.208			
	보육료 지원액	30	194.5				
100~120	총 보육비 지출	15	68.8	5.733			
	보육료 지원액	17	184.4				
120~150	총 보육비 지출	22	105.3	8.773			
	보육료 지원액	25	226.4				
150~	총 보육비 지출	267	134.5	11.21	429	205.1	17.09
	보육료 지원액	283	201.8				

참고. 보육료 비수급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는 표본수가 적어 보고 안함. 보육비 지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에 가구 수 합계는 <표 III-3>과 다름.

다음은 보육료 지원 여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실태를 보도록 하자. 복지패널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표 III-4>에 열거된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각 자녀에 대해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보고하도록 하여 한 가지 형태 이상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보육료가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복수로 응답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보육 형태(1~6) 을 나머지 형태에 대해 우선하여 다루어 한 자녀 당 한 가지 형태의 이용이 포착되도록 변수를 구축했다. 표에서 범주화한 아동 수 1,2,3 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 어떤 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1명인 경우가 49 건이고, 2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모든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14 건, 즉 28명의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6년 보육료를 수급받는 가정의 77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였고, 175명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했다고 보면 된다. 복지패널의 영유아 보육료 수급에 관한 자료로는, 한 가구에 복수의 자녀가 존재할 경우 정확히 어떤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해 지원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에 제시된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서 학원, 학습지, 방과 후 교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구분된 자녀는 보육료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형제자매라고 보여진다.

보육료 수급 여부에 따른 시설 이용 실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에 사는 자녀 가운데 반일제 유치원과 학원에 다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전업모들이 보육이 아닌 교육 차원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06-2008년 자료에 나타난, 즉 2005년과 2007년 사이 보육시설의 이용 형태의 변화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자녀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비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 예산의 양적 확대가 국공립 시설 확보가 아닌 민간 부문 어린이집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즉 보육재원은 공적으로 충당하나,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시장에 맡기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확대는 여성 취업과 취업을 통한 저소득층 빈곤 탈피에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 IV장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구입비, 현장활동비, 야간보육료 등 추가경비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보육비용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민간 부문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의 시설과 질이 국공립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점은 보육 예산의 양적 확대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동반하여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4> 보육료 수급별 보육시설 이용 실태

	보육료 수급				미수급			
	1명	2명	3명	총	1명	2명	3명	총
<b>2006년</b>								
1.국공립 어린이집 (국립,시립,구립 등)	49	14	0	77	89	15	0	119
2.민간어린이집	102	35	1	175	175	22	0	219
3.사설놀이방 (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이방)	5	1	0	7	17	4	0	25
4.직장보육시설 (사업주설치한 육시설)	0	0	0	0	4	1	0	6
5.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치원	8	0	0	8	36	3	0	42
6.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23	2	0	27	101	8	0	117
7.학원	48	14	0	76	209	63	0	335
8.개인, 그룹과외	0	0	0	0	8	1	0	10
9.학습지(온라인 포함)	9	0	0	9	40	9	0	58
10.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9	2	0	13	1	0	0	1
11.방과후 교실	4	0	0	4	7	1	0	9
12.친,인척	0	0	0	0	9	0	0	9
13.이웃이나 아이돌보미	0	0	0	0	7	1	0	9
14.기타	2	0	0	2	7	2	0	11

	보육료 수급				미수급			
	1명	2명	3명	총	1명	2명	3명	총
<b>2007년</b>								
1.국공립 어린이집 (국립,시립,구립 등)	57	11	0	79	40	4	0	48
2.민간어린이집	141	44	4	241	131	11	0	153
3.사설놀이방 (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7	0	0	7	20	0	0	20
4.직장보육시설 (사업주설치한 보육시설)	0	0	0	0	7	1	0	9
5.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18	5	0	28	30	1	0	32
6.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38	4	0	46	73	5	0	83
7.학원	83	24	0	131	155	39	2	239
8.개인, 그룹과외	1	0	0	1	12	1	0	14
9.학습지(온라인 포함)	14	2	0	18	43	3	0	49
10.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9	1	0	11	5	0	0	5
11.방과후 교실	4	2	0	8	2	0	0	2
12.친,인척	0	0	0	0	10	0	0	10
13.이웃이나 아이돌보미	0	0	0	0	8	0	0	8
14.기타	0	0	0	0	7	0	0	7
<b>2008년</b>								
1.국공립 어린이집(국립,시립,구립 등)	40	14	2	74	26	1	0	28
2.민간어린이집	167	46	1	262	89	10	0	109
3.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11	0	0	11	12	0	0	12
4.직장보육시설(사업주설치한 보육시설)	0	0	0	0	0	0	0	0
5.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26	3	0	32	33	3	0	39
6.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45	7	0	59	67	4	0	75
7.학원	92	18	0	128	169	94	6	375
8.개인, 그룹과외	3	0	0	3	10	1	0	12
9.학습지(온라인 포함)	11	2	0	15	53	5	3	72
10.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4	5	0	14	13	2	0	17
11.방과후 교실	7	0	0	7	6	1	0	8
12.친,인척	2	0	0	2	8	1	0	10
13.이웃이나 아이돌보미	0	0	0	0	1	0	0	1
14.기타	0	0	0	0	3	0	0	3

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표 III-5>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설명과 기초통계를 제시하였다.

<표III-5> 통계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설명과 기초통계

	2006 (n=1,027)		2007(n=911)		2008(n=910)		변수설명
	Mean	S. D.	Mean	S. D.			
보육서비스 구매	0.75	0.39	0.70	0.48	0.72	0.46	구매 여부 더미 (1=구매)
보육료 수급	0.27	0.43	0.32	0.48	0.33	0.48	수급 여부 더미 (1=수급)
월간 총 보육비지출 (만원)	14.81	18.02	14.78	15.45	13.61	17.29	가구당 모든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을 합계
모 나이	33.46	4.21	33.45	4.43	33.96	4.51	
모 대졸	0.52	0.50	0.53	0.50	0.52	0.50	대졸 여부 더미 (1=대졸)
모 취업	0.33	0.47	0.31	0.47	0.36	0.49	소득이 있는 임금근로자 (1=취업)
모 연간 근로소득 (만원)	571	958	583	1025	663	1163	모의 연간 상용, 임시, 일용근로 총급여액
모 건강상태 (1=나쁨)	0.04	0.22	0.03	0.20	0.03	0.20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혹은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라고 응답
부 건강상태 (1=나쁨)	0.05	0.22	0.05	0.21	0.05	0.21	이상과 같음
부 연간 근로소득 (만원)	3808	1742	3973	4685	4405	5112	임금근로자나 자영업/고용주의 근로소득
6세 이하 자녀 수	1.38	0.50	1.36	0.50	1.43	0.55	
막내 자녀 연령	3.04	1.82	3.36	1.86	2.64	2.13	
18세 이상 성인 수	2.12	0.46	2.12	0.46	2.11	0.47	
연간 가구 가처분 소득 (만원)	3952	4199	4024	4050	4470	4102	
연간 가구 재산 소득 (만원)	62	137	60	188	83	361	
서울/광역시	0.44	0.50	0.43	0.50	0.45	0.50	1= 서울/광역시 거주

참고. 2007년의 표본 수가 2006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2006년에 응답했지만 2007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와, 2006년에는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했지만 2007년에는 더 이상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지 않은 가구가 표본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한 기초 통계는 다음 장부터 나오는 모형의 추정에 활용된 표본, 즉 변수의 값이 미성(missing)인 표본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보육료 수급 분포 분석에 활용된 표본수보다 적다.

보육서비스를 구매한 가구는 70-75%로 큰 변동은 없다. 보육료를 반면 보육료를 수급한 가구의 비중은 27%에서 33%로 증가하였다. 이들 가구가 월간 지출하는 총 보육비는 약 14만원 정도이다. 모의 나이는 30대 초반이며, 절반 정도가 대졸 학력자이다. 30-36% 정도만이 취업 상태에 있으며 2008년도 자료에는 전년도에 비해 모의 취업이 증가했다. 연간 근로소득은 평균 570-660만원 정도이다. 평균 1.36-1.43명 정도의 6세 미만 자녀가 있고 막내 자녀의 평균 나이는 3살 정도이다. 2008년도에는 6세 미만 자녀의 수가 약간 증가했는데 막내 자녀의 평균 연령이 전년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아, 자녀의 추가 출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 정도가 서울/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기초통계를 비롯하여 이하 모든 실증 분석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결과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했다.

## 2.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여성 취업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취업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가? 보육료 지원과 여성 취업의 양방향 (정적, 부적) 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 분석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여성취업과의 추세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마르코프 이행확률 방법을 사용한다. 이행확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우선  $\pi_{ij}(\tau, \tau+t)$ 는  $\tau$ 는 특정 시점(period)의 상태 i에서 기간 t가 지난 후에 j에 상태 j에 있을 확률로 정의한다. 마르코프 과정의 가정에 의해 이행확률은 시점에 영향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

$$p_{ij}(t) = \pi_{ij}(\tau, \tau+t) \forall \tau$$

예를 들어  $p_{01}(t)$ 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없이 모가 비취업 상태에 있던 어떤 가구가 t 기간이 흐른 뒤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없지만 모가 취업 상태로 발견될 확률을 보여준다. 이때 확률은 전자의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후자의 상태로 이행한 가구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상태를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측정한 시점 t에서 후자의 상태로 머물게 된 가구까지를 포함한다. 보육료지원과 여성 취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 가구 내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고 정의한다. 4가지 상태는 비취업/보육료 비수급, 비취업/보육료 수급, 취업/보육료 비수급, 취업/보육료 수급을 포함한다.

총 2012 개의 이행이 발견된 가운데 모의 4가지 상태 간 이행 확률은 다음과 같다. 세로축은 2005년의 상태, 가로축은 2006년의 상태이며, 두 번째 표에서 세로축은 2006년 의 상태, 가로축은 2007년의 상태를 나타낸다. 취업 상태는 조사가 제시하는 기준일, 예를 들어 2006년도 자료는 2005년 한해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근거해 정의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보육료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기초해 변수를 만든 '수급/비수급'과 '취업/비취업'은 월단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Ⅲ-6> 취업상태와 보육료 지원 수급 상태의 이행 확률

<2006⇒2007>

		비취업/비수급	비취업/수급	취업/비수급	취업/수급
	비취업/비수급	0.5996	0.1948	0.1589	0.0468
모	비취업/수급	0.3933	0.3419	0.1465	0.1183
	취업/비수급	0.3416	0.1097	0.4203	0.1284
	취업/수급	0.4389	0.1629	0.1493	0.2489
		비취업/비수급	비취업/수급	취업/비수급	취업/수급
부	비취업/비수급	0.1889	0.1444	0.5	0.1667
	비취업/수급	0.0779	0.2597	0.4156	0.2468
	취업/비수급	0.0259	0.0244	0.7386	0.2111
	취업/수급	0.0394	0.0375	0.5272	0.3959

<2007⇒2008>

모		비취업/비수급	비취업/수급	취업/비수급	취업/수급
	비취업/비수급	0.6627	0.202	0.095	0.0404
	비취업/수급	0.2329	0.5797	0.0506	0.1367
	취업/비수급	0.1471	0.0299	0.6808	0.1421
	취업/수급	0.1256	0.1407	0.2211	0.5126
부		비취업/비수급	비취업/수급	취업/비수급	취업/수급
	비취업/비수급	0.3594	0.2031	0.3125	0.125
	비취업/수급	0.1325	0.5542	0.1325	0.1807
	취업/비수급	0.0176	0.0104	0.767	0.2051
	취업/수급	0.0117	0.0235	0.2994	0.6654

분석 결과, 상태 간 의존성이 없다는 가설은 기각되어 1년 뒤의 상태가 전기의 상태에 크게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대각선의 셀을 따라가보면, 2006년에서 2007년으로 경과하면서 비취업/비수급 상태에 있던 모가 계속 같은 상태에 머무를 확률은 거의 60% 정도이며, 나머지 3가지 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이보다 낮다. 또한 위의 두 표를 비교해 볼 때 2006⇒2007 보다 2007⇒2008년에 상태의존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대각선의 셀을 보면, 후자의 표에서 대각선 셀들의 값이 커졌다).

보육료 수급 없이 비취업 상태에 있던 모가 지원과 함께 취업 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4%로 극히 적다. 모의 취업과 보육료 지원과의 연계가 느슨함을 암시한다. 60%(2007에서 2008년 사이에는 66%)의 모가 비취업/비지원이라는 상태를 1년 뒤에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취업/지원에서 취업/지원으로 갈 확률은 12%로 약간 높아 보육료 지원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보여준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14%로 약간 상승했다. 보육료 지원이 있을 경우, 보육료 지원이 없었으면 스스로 미취학 아동을 돌보았을 비취업 여성이 미취학 아동을 보육 시설에 맡기면서 교육 훈련이나 일자리 탐색에 시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취업/지원에서 취업/비지원의 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5%로 모가 취업할 경우 소득 증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보육료 지원 없이 비취업 상태에 있던 부가 취업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확률이 16%이다. 취업과 더불어 보육료 지원의 수급 자격을 상실할 확률은 41%로 보육료 지원 상태를 유지할 확률 24%보다 높다. 반면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해도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할 확률은 11%로 자격을 상실할 확률 14%보다 높다. 남성의 취업과는 달리, 여성의 취업은 보육료 수급 자격을 잃을 만큼 상당한 소득 증가를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 혹은 보육료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의 선택적 취업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 IV장에서 실시한 여성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행 확률 분석은 대략적인 상태 이동성을 보여줄 뿐 인과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위에 표에서 정의한 취업 여부와 보육료 수급 여부를 나타

내는 변수는 조사 시점에서의 조건을 포착한 것이다. 즉 언제부터 보육료 지원을 수급했는지, 언제부터 취업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취업을 했다면 한 일자리에 쫓 일했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여러 일자리에 이탈과 복귀를 반복했는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의 여성 취업에 대한 효과는 선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실질적인 유보 임금 수준을 낮추어 취업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는 여성의 취업 여건이 현격히 개선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시간'적 측면에서 여전히 현존하는 보육서비스의 유연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근로시간대가 아닌 야간 업무 시간대의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이 지배적인 남성중심적인 근로문화에서 여성이 시장노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처지에 놓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돌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비공식적인 형태의 보육에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보육료가 실제적인 '아동 수당'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에게 '여유' 시간을 지원하여 여성이 취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가사노동과 비근로 경제활동 (예, 주식 투자) 을 통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보육료 지원의 여성 취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한다.

$$E_{ij} = C_j + S_j + I_{ij} + X_{ij} + H_j$$

$E_{ij}$ 는 j 가구의 i 여성이 취업했으면 1, 비취업이면 0으로 여성의 취업확률이 종속 변수인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다.  $C_j$ 는 개별 가구의 총보육비 지출 변수이다. 보육비 지원을 받아도 실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보육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S_j$ 는 개별 가구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I_{ij}$ 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여성이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인 의중임금으로 다룬다.  $X_{ij}$  여성 개인의 노동능력에 관한 변수와 임금률, 학력과 경력 등의 인적 자본 변수를 포함한다.  $H_j$ 는 인구학적 (아이의 수와 연령) 가구 특성 변수를 포함한다.

이 모형을 추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X_{ij}$ 에 포함될 여성의 임금율은 오직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만 관찰되는 변수라는 사실이다. 취업한 여성의 임금률을 가지고 추정할 경우 표본 선택의 편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는 Heckman 이단계 추정법(Heckman two-stage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한다. 이 기법은 취업과 임금율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예측 하에 두 단계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인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나온 추정치를 이용하여 mills' ratio의 역수를 구해 표본의 편의를 교정한 후 임금 방정식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취업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률을 쓰는 것이 좋으나, 복지패널은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신 연간 소득과 연간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취업확률을 추정하기로 한다. 2007년 자료에는 연간 근로시간을 묻고 있지 않아 2007년에 대해 임금률을 산정할 때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전년도 근로시간과 동일하고, 신규로 있을 경우 반일제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연간 소득과 연간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임금률을 구해서 추정에 활용해 보았다. 그러나 추정의 결과가 상식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 분석에서 연간 근로소득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임금근로자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만을 표본으로 하여 개별 년도 자료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 비임금 근로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소득층만 제한하거나, 양부모 혹은 여성 가장 가구로만 표본을 제한할 경우 표본수가 너무 작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전체 표본에 대해서만 추정했다.

mill's ratio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표본 선택의 편의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한다. 우선 소득 방정식을 보면 대졸자, 상용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적지만, 2007년에는 유의성이 없다.

분석의 주요 목적인 취업 방정식 추정의 결과를 보면, 보육료 수급은 모두 정(+)의 영향이 있지만 오직 2007년과 2008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계수는 오직 (+)이나 (-)이나만의 의미만을 지니며, 계수의 절대치를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즉 (+)인 경우 취업에 정적인 영향, (-)인 경우 취업에 부적인 영향을 지닌다고 해석한다. 한편 보육서비스구매는 취업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2006년에만 그러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보육서비스 구매 자체보다는 보육료 수급을 받았는지 여부가 여성 취업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밖에 총보육료지출 (+), 6세 미만 자녀의 수 (-), 본인 연간 근로소득 (+)이 2006년과 2007년에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2006년과 2007년의 차이라면 남편의 연간 근로 소득 (-)은 2006년에만, 본인의 연간 비근로 소득(-)은 2007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효과의 방향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하게, 남편의 소득과 본인의 비근로 소득은 모의 취업 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2008년에는 총보육료 지출, 6세 미만 자녀의 수 등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2007과 200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사실이, 예산 확대로 수급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여성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취업하고 있던 여성들이 새로이 보육료 지원을 수급받게 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던 여만 잠정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모의 취업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결론 확대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모박육료보육료 수급의로 지취업에 대한확대생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확약점이 있었던 여성들이 새보육료 수급과 여성 취업 확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던 따라 된보육료 수급의로영향은 인과 관계라기보다는 상관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표 III-7> 보육료 지원의 여성취업 효과 (Heckman two-stage estimation)

	2006		2007		2008	
VARIABLES	연간 근로소득	취업 여부	연간 근로소득	취업 여부	연간 근로소득	취업 여부
보육료 수급 더미		0.13		0.53***		0.36**
보육서비스구매		0.64**		0.05		-0.09
총보육료지출		0.01**		0.02**		-0.00
모의 나이	9.13 (17.62)	0.04** (0.02)	27.18 (21.26)	0.02 (0.02)	6.46 (16.97)	0.04* (0.02)
대출	300.92* (174.66)	0.11 (0.14)	438.23** (195.04)	-0.18 (0.16)	721.50*** (153.67)	-0.14 (0.16)
6세 미만 자녀의 수	79.04 (183.48)	-0.64*** (0.17)	188.53 (200.56)	-0.34* (0.20)	-58.75 (143.82)	-0.08 (0.18)
막내 자녀 연령		-0.01		0.08		0.09
동거 성인의 수		0.24		-0.06		0.07

	2006		2007		2008	
VARIABLES	연간 근로소득	취업 여부	연간 근로소득	취업 여부	연간 근로소득	취업 여부
건강 상태 (1=나쁨)		-0.31		0.23		0.32
남편 연간 근로 소득		-0.00**		-0.00		-0.00
본인 연간 근로 소득		0.00***		0.00***		0.00***
서울/광역시		-0.23*		-0.31*		-0.03
상용직 더미	683.51*** (167.88)		586.36*** (176.56)		742.35*** (162.23)	
전문직 더미	204.89 (206.11)		190.11 (218.23)		91.65 (191.02)	
제조업 더미	-304.99* (180.82)		-346.98 (223.63)		-326.25* (182.32)	
연간 근로시간	0.03 (0.08)		0.20 (0.13)		0.42* (0.23)	
Constant	1,354.40* (700.78)	-2.75*** (0.69)	209.50 (895.37)	-2.17*** (0.79)	467.47 (853.60)	-3.08*** (0.87)
Lambda (mill's ratio)		-1,254.68*** (105.99)		-1,314.87*** (134.17)		-1,170.17*** (131.27)
Observations	896	896	783	783	772	772

보육료 지원이 직접적으로 여성 취업의 '원인'이 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어 연구 방법 상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즉 보육료 지원의 여성 취업에 대한 진정한 효과성 평가 측정을 위해서는 '만일 보육료 지원이 없었더라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이 취업을 했겠는가'라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에 근거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수급 여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속성에 있어서 보육료 지원을 받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속성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기준으로 무작위적(random)이지 않게 선별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대상 집단(treatment group)과 비교 집단의 제반 속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 즉 특정 속성을 가진 집단만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선택편의가 발생한다. 그 결과 관측되지 못하는 두 집단 간의 속성의 차이가 진정한 보육료 지원의 효과의 차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육료 지원을 받은 여성의 특성과 비슷한 비교집단을 구성할 수 있어야 보육료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교를 위한 완벽한 분석 방법이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보육료지원을 받은 여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보육료 비수급,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과의 취업의 평균적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보육료 지원의 여성 취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겠다. 성향점수매칭법은 선택편의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능한 한 많은 성향을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Rosenbaum & Rubin (1983, 1985)은 준실험방법에서의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 점수에 기반한 다변량 매칭(multivariate matching) 방법을 도입하였다. 성향 점수는 어떤 사람의 조건(condition)을 예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찰된 공변량들로부터 추론된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을 뜻한다. 모든 확률이 그렇듯이 성향 점수도 0~1 사이에 존재하며 각각의 사람들의 실제 성향 점수가 추정된다. 즉 보육료 지원과 여성취업이라는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공변량이라 두고, 그에 기반하여 보육료지원을 받을 성향 점수를 계산하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속성을 비슷하게 조정해 주는 것이다.

성향점수매칭법은 ‘정책참여의 강한 무관성의 가정(strongly ignorable treatment assignment assumption)’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가정은 첫째, 사업참여자에 관한 특성들이 주어졌을 때, 사업 참여여부는 결과 변수들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원들의 사업참여확률의 분포는 공통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Rosenbaum&Rubin, 1983; 이석원, 2003). 만약 이들 가정이 충족된다면,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충분히 존재할 경우 이들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선택편의가 없는 효과 추정치를 산출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석원, 2003). 즉 효과의 추정치는 통장의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며, 짝짓기를 성향 점수 에 기반하여 하는 것이 성향 점수 매칭법이다. 성향 점수에 근거해 동일한 비교집단을 사업 참여 집단(실험 집단)과 짝지어 비교할 경우 양 집단 간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은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작위 실험평가와 같이 선택편의가 없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분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모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모가 된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향 점수를 추정하는 작업이다.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이므로 로짓과 프로빗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성공적인 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균형(balance)’ 달성 여부-양 집단의 속성이 비슷해졌는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검증한 후 만족스러운 균형이 달성될 때까지 성향 점수를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추정된 성향 점수에 기반하여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관찰치마다 가장 가까운 성향 점수 값을 가지는 비교집단의 관측치를 짝지우는(matching) 작업

이다. 짝짓기 방법에는 하위집단 매칭과 일대일 매칭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까운 이웃 매칭법(k-nearest matching)을 사용했다. 효과의 추정치는 짝지워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결과변수의 차이를 구하여 이를 전체 표본에 대하여 평균을 구함으로써 얻어진다.

아래 표에서는 비조정 평균차와 표본을 성향점수법으로 조정한 후의 평균차를 제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은 보육료를 수급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한 결과변수의 평균치이며, 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두 집단 평균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각 년도별로 추정된 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즉 표본 선택 편의를 교정하지 않았을 경우, 2006년과 2007년에는 보육료를 수급한 모의 취업 확률이 약간 높았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향점수매칭법으로 표본의 선택 편의를 교정하고 난 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취업률의 평균 차이를 보면, 2006년에는 오히려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은 모의 취업확률이 높아지고(0.30 → 0.33), 2007년과 2008년에는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매칭 전보다 커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원래 표본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모의 취업률이 0.01 포인트 높았으나 매칭을 하고난 뒤, 보육료를 지원받은 모의 취업률과의 격차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	표본	실험	통제	차이	표준편차	T 값
2006	모 취업	원래 표본	0.31	0.30	0.00	0.04	0.05
		매칭 표본	0.31	0.33	-0.03	0.05	-0.54
2007	모 취업	원래 표본	0.34	0.31	0.03	0.03	0.79
		매칭 표본	0.34	0.29	0.05	0.05	1.08
2008	모 취업	원래 표본	0.38	0.39	-0.01	0.04	-0.28
		매칭 표본	0.38	0.32	0.06	0.05	1.15

### 3. 보육료 지원과 보육서비스 구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자녀 보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급 돌봄 노동의 이용보다 보육서비스 구매를 증가시켰는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관심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가정 내 여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보육 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취업모 대다수는 가족과 친지에 의한 무급 돌봄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확대하여 가족과 친지의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무급의 보육서비스의 주 제공자가 여성인 현실에서, 보육료지원이 보육서비스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 또한 성별 영향 평가의 중요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의 주된 대상인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 무료의 친인척이 제공하는 비공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패널은 이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친인척과 이웃에게서 보육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는 돈을 지불했을 경우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

친인척과 이웃이 무급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판별할 수 없다. 우회적으로 친인척에 의한 무급 돌봄 노동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동거 부모님과과의 왕래가 주 5회 또는 월 18회 이상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추적해 보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기적으로 유료 보육 서비스 대신 무급 돌봄 노동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공식 보육 기관(국공립(국립, 시립, 구립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정의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공식 보육 기관 이용을 100% 예측한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무의 공식 보육 기관 이용 효과를 횡단면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공식 보육서비스 구매의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을 통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의 효과에 초점을 둘 것이다. 공식 보육서비스 수요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한다.

$$E_{ij} = C_j + S_j + I_{ij} + X_{ij} + H_j$$

$E_{ij}$ 는  $j$  가구가 공식 보육 서비스를 구매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공식 보육 서비스 구매 확률을 예측하는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다. 보육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가구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액수, 실제 지출해야 할 보육비 액수, 모의 취업시 연간 소득(즉, 모가 공식 서비스를 구매하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거나 친인척에게 맡길 경우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 등에 직면한다. 즉  $C_j$ 는 개별 가구의 총보육비 지출 변수이다.  $S_j$ 는 개별 가구에게 지급된 영유아 보육비 액수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I_{ij}$ 는 여성이 취업했을 경우 버는 연간 소득이다.  $X_{ij}$ 는 모의 나이와 학력,  $H_j$ 는 인구학적 가구 특성 변수인 6세 미만의 자녀수, 막내 자녀의 나이, 동거 성인의 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포함한다.

앞서의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육비용과 보육료지원액, 그리고 여성 취업에 따른 연간 소득을 추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들은 오직 보육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았을 때, 그리고 모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만 관찰되는 변수들이다. 또한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항프로빗(multivariate probit) 모형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나온 추정치를 이용하여 mills' ratio의 역수를 구해 표본의 편의를 교정한 후 보육비용, 보육료지원액, 연간 소득 회귀식을 추정한다. 이 추정치들이 바로 앞에 제시된 모형에 들어갈  $C_j$ ,  $S_j$ ,  $I_{ij}$ 이다. 이 추정치들을 사용하여 공식 보육 서비스 수요 함수를 추정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은 오직 2007년과 2008년 자료에서만 수집되었으므로 표본은 두 개년도 자료에만 의존한다.

첫 번째 단계로 모의 취업, 보육료 수급 여부, 공식 보육 기관 이용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다항프로빗 무형을 추정한다. 아래 표의 결과를 보면, 모의 취업과 공식 보육기관 이용 여부, 보육료 수급과 공식 보육기관 이용 여부 간의 공분산이 각각 0.12와 0.81로 유의하며 월드(Wald) 검정결과 공분산의 값 rho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그러나 모의 취업과

보육료 수급 간에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독립적이지 않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모의 취업과 보육료 수급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모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식 기관이든 상관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일 경우, 막내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 성인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2007년 보다는 2008년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모가 취업할 확률은 낮아졌다. 보육료 수급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막내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2007년 보다는 2008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인당 연간 경상 소득이 높은 가구, 주택 값어치가 높은 가구는 보육료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두 변수는 보육료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이기도 하다. 만 6세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막내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공식 보육기관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지만 동거 성인 수가 많고, 배우자(부)의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공식 보육기관을 이용할 확률이 낮아졌다.

	모 취업	보육료 수급	공식 보육기관 이용
보육서비스 이용 (학원, 친인척 포함)	0.49***		
	0.16		
모 연령	0.04***		0.00
	0.01		0.01
모 학력 (1: 대졸)	0.48***		0.12*
	0.08		0.07
만 6세 이하 자녀수	-0.38***	0.76***	1.11***
	0.09	0.09	0.09
막내 자녀 연령	0.06**	0.13***	0.20***
	0.03	0.02	0.02
동거 성인 수	0.38***		-0.14*
	0.09		0.08
배우자 연간 소득	-0.00		-0.00*
	0.00		0.00
년도 더미 (1: 2008년)	0.22***	0.23***	-0.16**
	0.08	0.08	0.08
1인당 연간 경상 소득		-0.00***	
		0.00	
모의 연간 소득		-0.00	
		0.00	
차량 유무		-0.12	
		0.07	
금융 자산		-0.00	
		0.00	
주택 값어치		-0.00***	
		0.00	
상수	-3.06***	-0.91***	-1.38***
	0.43	0.19	0.36
rho21 (모 취업과 보육료 수급)	0.08		
	0.07		
rho31 (모 취업과 공식 보육기관 이용)	0.12**		
	0.06		
rho32 (보육료 수급과 공식 보육기관 이용)	0.81***		
	0.04		
표본수	1462	1462	1462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이 동시결정 프로빗 모형에서 imills1는 모의 취업식으로부터 구한 inverse mills' ratio, imills2는 영유아 보육료 수급식으로 구한 inverse mills' ratio, imills3는 공식 보육기관 이용식으로부터 구한 inverse mills' ratio를 구해 자녀보육비용, 보육료 수급액, 모의 연간소득 결정식에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	(3)
VARIABLES	연간 보육비 지출액	연간 보육료 수급액	연간 모의 근로소득
모의 연령	-0.70***	-4.62***	-20.98*
	0.14	0.94	11.76
모 학력 (1: 대졸)	-7.30***	-55.31***	-268.11**
	1.46	10.77	112.90
만 6세 이하 자녀수	-3.62	131.89***	-387.15
	5.24	40.85	336.97
막내 자녀 연령	-4.98***	6.28	-213.11***
	1.28	8.48	76.09
1인당 연간 경상 소득		-0.02*	
		0.01	
주택 값어치		-0.00***	
		0.00	
imills1	-24.80***	-100.86***	-1,585.54***
	2.91	17.28	234.74
imills2	9.35***	51.36	603.05***
	1.78	32.02	138.44
imills3	-36.98***	18.55	-1,597.05***
	9.32	63.21	586.76
년도 더미 (1: 2008년)	-1.13	1.31	-17.71
	1.25	10.53	95.10
상수	100.58***	158.41	4,699.36***
	20.32	134.35	1,256.08
표본 수	1462	1462	1462
R-squared	0.235	0.206	0.238

주: \*\*\* p<0.01, \*\* p<0.05, \* p<0.1

imills1는 모의 취업식으로부터 구한 inverse mills' ratio, imills2는 영유아 보육료 수급식으로 구한 inverse mills' ratio, imills3는 공식 보육기관 이용식으로부터 구한 inverse mills' ratio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항프로빗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표본선택편의 조정항은 보육비지출액 추정식과 근로소득 추정식에 크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보육료 수급액 추정식에서는 오직 모의 취업 여부로부터 도출된 표본선택편의 조정항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육비 지출 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보면,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총보육비 지출액이 적어진다. 보육료 수급액 추정 결과에서는, 6세 이하의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액수가 많아진다. 1인당 경상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하는 주택의 값어치가 높을수록 보육료 수급액 지원이 적어진다. 모의 근로소득 추정치에서는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간 근로소득이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위에서 도출한 보육비용 추정치, 보육료 수급액 추정치, 모의 연간소득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공식보육기관 이용
모의 연령	-0.03
	0.03
모 학력 (1: 대졸)	-0.19
	0.21
만 6세 이하 자녀수	0.28
	0.70
막내 자녀 연령	0.02
	0.04
동거 성인 수	-1.25***
	0.16
연간 가처분 소득	-0.00
	0.00
보육비용추정치	-0.06
	0.08
보육료 수급액 추정치	0.03***
	0.00
모의 연간소득 추정치	0.00**
	0.00
년도 더미 (1: 2008년)	-0.72***
	0.17
상수	1.83**
	0.85
표본 수	1462

\*\*\* p<0.01, \*\* p<0.05, \* p<0.1

공식 보육기관 이용 방정식 추정의 결과를 보면, 보육료 수급액이 클수록 공식 보육기관 이용확률이 높아지고, 모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식 보육기관 이용 확률이 높아진다. ‘동거 성인 수’는 공식 보육기관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과 가정의 병립 문제(예를 들어, 장시간 노동 관행,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 여부)가 존재할 경우 공식적인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 친인척에 의한 무료 돌봄 노동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육료 지원의 효과의 실효성에 제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기타 독립변수 가운데, 총보육비 지출, 막내 자녀의 나이, 6세 이하의 자녀수 등은 공식보육기관 이용에 별다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보육예산의 젠더관계에 미친 영향 분석

이 장에서는 보육예산 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의 성별영향에 대한 질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료 지원의 성별영향 분석은 보육료 지원이 그 동안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던 양육을 경감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분업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성들에게 가용한 시간을 증가시켜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과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지만 잠재적인 수혜 가정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 1.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유형과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표집되었다. 보육시설 유형은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가구유형은 맞벌이, 홀벌이, 모자, 부자 가구로 구분하였다. 총 12명을 면접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 표집되었고, 나머지 2명은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으며 비교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은 <표IV-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부 2명, 홀벌이 가정의 3명, 모자가정에서 4명, 부자가정에서 1명, 그리고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의 1명, 홀벌이 가정에서 1명을 표집하여 총 12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10명이며, 40대가 1명, 20대가 1명으로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평균적인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참여자 10명은 여성이며, 나머지 2명은 남성이다. 젠더관계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남성에 대한 면접이 요구되었으나, 남성들이 면접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경우가 많아 남성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자녀 현황을 보면, 두 자녀를 둔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많고, 3명이 한 자녀를 두었으며, 나머지 1명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10명 가운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2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2명, 만5세아 무상지원을 받는 경우가 1명이며, 나머지는 월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는 3층과 4층 수혜자들이다.<sup>2)</sup>

2) 한국의 차등보육료 지원 가능한 조건은 정부가 고시한 소득인정액에 준한다.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6만원이하	144만원이하	168만원이하	193만원이하
3층	165만원이하	184만원이하	197만원이하	217만원이하
4층	231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69만원이하	288만원이하
5층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표Ⅳ-1>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연구 참여자	연령	직업	가구유형	자녀 연령	자녀수	어린이집 유형	보육료 지원	양육 조력자
A	29세	주부	홀벌이(모)	6살	2명	국공립	20만원	모
B		회사원(부)	" (부)					
C	38세	주부	"	7살	3명	가정	전액 만5세아	모
D	31세	주부	"	5살	2명	가정	전액지원 (2층)	모
E	40세	"	"		2명+임신 중	가정	17만원지원(3층)	모
F	31세	주부	모자가정	7살	1명	민간	약18만원	친정엄마
G	36세	보험T/M	"	4살	2명	가정	16만원(3층)	친정엄마+ 언니+시설
H	27세	보험F/C	"	4살	1명	"	30만원(2층)	시설
I	33세	초등학교 보조교사	"	7살	2명	국공립	10만원(4층)	시설
J	37세	조리사	부자가정	6살	1명	국공립	17만원 (3층)	부모+시설
K	36세	간호사	맞벌이	5살/3살	2명	가정	비지원	시부모
L	31세	주부	홀벌이	5살	2명	국공립	비지원	모

심층면접은 주로 커피숍이나 참여자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제활동 및 자녀관계, 자녀양육실태, 부모노릇, 보육료지원의 효과 인식, 인구학적 요소에 관한 것이다.

<표Ⅳ-2> 심층면접 질문 내용

질문영역	질문내용
I. 경제활동 및 자녀관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결혼기간과 출산 시점은? -앞으로 또 출산계획이 있는지?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 일을 그만두었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II. 자녀양육 실태	-자녀의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배우자와 자녀양육 분담은 어떻게 하는지? -조부모, 친척, 형제, 자매 등의 도움을 받는지? -자녀양육에서 어려운 점은?
III. 부모노릇	-자녀양육에 얼마나 몰두하는지? -자녀에 대한 바램은 무엇인지? -어떤 어머니/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자녀와 얼마나 친밀한지? -배우자와 자녀를 비교하여 친밀한 정도, 관계의 정도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영역	질문내용
IV. 보육료지원 정책의 효과	-보육(어린이집 위탁, 그 외에 사교육) 비용은 얼마나 되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육료 지원(정부)이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경제적/심리적 측면)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개선할 점, 바라는 점, 문제점 등)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현재 보육정책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보육정책이 어린이, 가족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V. 인구학적 질문	-성별, 나이, 학력, 소득수준, 가족관계, 직업(본인, 배우자)

## 2. 보육료 지원의 성별영향

### 가. 보육비용 및 심리적 부담 완화

보육료 지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육비용의 부담을 덜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지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가구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홀벌이 가정의 남성인 경우 보육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보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도움이 되었어요. 실질적인 돈 관리는 아내가 하는데요. 도움은 많이 됐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해도 보육료가 너무 부담이 되면 잘 못해주니까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됐어요.”(B, 지원, 홀벌이 가정 아버지)

부자가정의 남성도 마찬가지로 전액이 아니다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보육료 지원 효과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죠. 하지만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유롭다기 보다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제 월급가지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아이를 위해서 더 뭔가를 해준다는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K, 지원, 부자가정)

홀벌이 가정의 여성은 보육료를 지원받음으로써, 그 동안 집에서 하루 종일 돌보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어서 돌봄노동을 경감시켜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녀양육비용에 따른 남편의 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료 지원 받는 효과는 크죠. 반이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부담을 덜어주죠. 그리고 줄어든 만큼 아이 보험하고 적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C, 지원, 홀벌이가정)

즉 보육료지원은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이나 미래 준비자금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생활비로 활용되고 있다.

## 나. 제한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모자가정의 사례

무엇보다도 보육료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는 모자가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여성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절대적인 효과 있다고 말한다.

“전에 애기아빠랑 같이 살 때 같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 낸다고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월급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월급쟁이들 월급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같은 입장에서는 10만원이 아쉽죠. 큰 도움 돼요...(중략)...만약에 보육료 지원이 안됐으면 그만큼의 돈을 다른 돈을 못쓰잖아요. 지금은 그만큼의 돈을 다른데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마음에 여유가 더 있는 거죠.”(L, 지원, 모자가정)

그러나 보육료 지원이 모자가정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측면적인 지원의 효과가 있지만, 전액 보육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설 정규시간 이외의 양육과 그 비용 부담은 유연적인 노동형태를 선택하게 만드는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마미트랙’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저임금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은 특히 모자가정 여성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음의 면접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무실을 그만두었던 이유가 고정직이라 애랑 있으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이거는(보험 FC) 제가 하는만큼 받아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 (I, 지원, 모자가정)

모자가정의 여성은 보육료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중략).....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자 몫이고, 추가적으로 베이비시터라도 쓸려면 비싸고, 보육시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추가 신청시 추가 비용부담이 들고, 엄마는 안 쉬는데 어린이집은 쉬는 등 이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I, 지원, 모자가정)

결과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일정부분 여성의 돌봄노동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할 만큼의 충분한 제도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앞서 제시한 복지패널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보육료 수급없이 비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지원과 함께 취업 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4%로 극히 적고, 60%의 여성이 비취업/비지원이라는 상태를 1년 뒤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취업/지원에서 취업/지원으로 갈 확률은 10%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현재 조사결과로는 보육료 지원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육료 지원이 없다면 스스로 미취학 아동을 돌보았을 비취업 여성이 보육료 지원이 있을 경우 미취학 아동을 보육 시설에 맡기면서 교육 훈련이나 일자리 탐색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 다. 보육료 지원의 여성 경제활동 저해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돌봄노동의 사회적 분담과 고령화사회에서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보육정책의 틀을 갖추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보육료 지원이 자녀양육비용의 가구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김현숙, 2008; 표갑수, 2004; Gornick 외, 1998). Gornick 외(1998)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취업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료 지원 정책은 자칫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심층면접 참여자 여성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된다면 오히려 자녀양육과 일을 양립하기 보다는 자녀양육만을 하겠다”라고 단언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인 정규직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D씨의 경우 현재 두 아이의 보육비용으로 7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D씨는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지만 ‘소득인정액’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만약에 두 아이의 보육비용을 앞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자신은 잠시 일을 그만둘 의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보육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도 일을 병행하면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없이 불가능한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D씨는 현재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례비용,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엄마인 자신의 책임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인 것이다. D씨 처럼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양육에만 전념하는 홀벌이 가정의 여성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내가 그 생각은 했지요. 더 싸지면 내가 안벌어도 아빠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면 놀러 왔고 싶다. 이런거 이런 생각을 한적도 있어요. (보육료 부담이)없어진다면 내가 집에서 애들을 돌볼 여력이 있는거죠. 만약에 이게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내가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하는거고....

그래도 그냥 그런 돈의 차이가 없어도 저는 일을 할 거 같거든요. 제일을 할거 같은데 만약에 더 싸진다면 한번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꺼 같아요. 왜냐하면 보육비가 더 저렴하다거나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사교육비가 조금 적어진다면....”(E, 지원, 홀벌이가정)

보육료 지원이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보육료 지원 이외 추가 비용부담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액지원을 포함한 모든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받아서 도움이 되긴 하죠. 조금은....심리적인 안도감이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요. 16만원 지원을 받으면 10만원 보육료와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 또 비용이 들어요.”(G, 지원, 모자가정)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 야간보육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보육료 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00%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으로 부담된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은 2층이라 100%지원 받는데 7시에 데려 갈 수 없고 누가 봐줄 사람도 없어서 야간보육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사실 100%지원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죠. 일을 남들 보다 더 해야겠고 아이는 누가 봐 줄 사람도 없는 데.....”(H, 지원, 모자가정)

이러한 추가비용 부담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그 부담이 크기때문에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기 보다는 자녀양육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복지패널 자료 분석 결과와 조응하고 있음을 심층면접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행확률을 보면, 6세 미만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이 비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심층면접 참여자 중 세 자녀를 둔 여성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살짜리 막둥이(셋째)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두기도 그렇고, 갑갑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너무 갑갑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애들 아빠도 싫어하고.....그리고 큰 애는 중학생이라 학원비도 나가고 둘째, 셋째아이는 맡기는 비용과 교육비 등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일을 그만 두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도 안심이고 맡기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C, 지원, 홀벌이가정)

둘째,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일의 지속 또는 선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보육료 지원 수급자격의 현실성이 낮은 문제 때문이다.

G씨는 자신의 월소득이 낮지만 생계를 위한 ‘자가용’을 소유했거나 동거하는 가족의 재산을 이유로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H씨는 전액지원이 아닌 일부만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다’라고 격분하였다.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급급한데도 자산 평가액이 높게 나와 낮은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되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말한다.

“제가 처음에 모자가정이라 신청하러 갔는데 차가 있어서 5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면 주고 안주려면 말지. 5만원은 하면서 나와 버렸어요.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아무리 새 차라도....납득이 안가더라고요....”(G, 지원, 모자가정)

즉 보육료 지원의 수급자격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현실성이 결여된 자산평가 등으로 정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앞서 제시한 복지패널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비취업/지원에서 취업/비지원의 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12%로 어머니가 취업할 경우 소득 증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이 취업해도 지원 자격을 유지할 확률은 30%로 상실할 확률 20%보다 높다. 왜냐하면 여성의 취업이 자격을 잃을 만큼 상당한 소득 증가를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선택에도 영향을 끼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경우,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일을 선택하는 방향을 선호하게 되어, 결국 여성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 보육료 지원이 안된다면 ....글쎄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못 받잖아. 그러면 너무 보육료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죠. 아무튼 이상한, 맘에 안드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D, 지원, 홀벌이가정)

결국 보육료 지원 그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나 성역할 분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육료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이 현실성,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돌봄노동의 부담 해소, 정규보육시설 이외에 시간 외의 양육에 대한 대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보육료 지원의 성별영향의 차이를 낳는 것으로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 보육료 지원의 성별영향 차이의 원인

#### 가. 자녀양육과 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

심층면접 참여자들 중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홀벌이 가정의 여성들 대부분은 자녀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홀벌이 가정의 여성의 경우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우선 그만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이 낳고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3개월만에 그만뒀어요. 이유는 복합적인데 먼저 퇴근 시간이 늦어 애들도 덩달아 늦게 자게 되고, 또 시부모님이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꼬질꼬질 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사일이 많아 넘 힘들어서 남편도 그만두라고 하고 하여 그만두었어요.”(E, 지원, 홀벌이가정)

마찬가지로 홀벌이 가정의 다른 여성은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A, 지원, 홀벌이가정).

모자가정의 경우에도 결혼 또는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 후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을 다시 선택하였지만 자녀양육을 이유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 또는 특수직 고용을 선택하는 경로를 밟고 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직장경력 단절의 이유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이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전국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2004년 보육·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 IV-3>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4%에 달한다. 또한 취업중단 사유로 자녀양육이 6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3> 여성의 결혼 이후 취업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취업 중단 경험율	모의 결혼 후 취업중단 이유							계	(수)	x <sup>2</sup> (df)
		자녀 양육	가사일 전념	건강상 이유	남편 및 식구 반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출산에 따른 직장 불이익	기타			
전체	38.4	64.9	8.4	5.2	1.3	3.2	12.6	4.3	100.0	(1,504)	
미취학아동	41.4	66.1	6.4	3.5	1.1	2.9	16.6	3.4	100.0	( 909)	58.2(6)**
취학아동	34.5	63.3	11.4	7.7	1.5	3.7	6.6	5.7	100.0	( 594)	

출처: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92).

남성과 여성은 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에게는 자녀양육이 이직이나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여성들에게 자녀양육은 노동시장 참여에 큰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자가정의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시간 이외의 양육조력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남성은 확고하게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일과 자신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한다.

“저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모르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과 아이인생은 일단은 별개라고 생각해요....네 별개고 대신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른척할 수는 없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들은 충실히 해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내인생과 아이의 인생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든지 나몰라 하는게 아니라 꼭 아이만을 위해서 내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거죠.”(K, 지원, 부자가정)

반면 여성의 경우 일보다는 자녀양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일곱살짜리 막둥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두기도 그렇고, 갑갑하니까. 그렇잖아요.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너무 갑갑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애들 아빠도 싫어하고.....”(C, 비지원, 홀벌이가정)

이처럼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과 태도가 다른 것은 남녀 모두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모성이데올로기가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과 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고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심층면접의 결과는 보여 준다.

“애들 아빠나 나도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등학교 가기 전까 지라도 엄마가 잘 키워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성격인 결벽증에 가까워 제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깔끔해요. 그리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줄 수 있고 할머니에게 맡기면 그런 건 못하잖아요.”(E, 지원, 홀벌이가정)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는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애기 아빠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냥 다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만 하죠. 제가 막 유치원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유치원 갔다 왔는데 이런 데가 있는데 뭐가 나은 것 같냐고 물어보면 그냥 제 얘기만 들어요. 제가 막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여기를 보내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러면, 여기 그냥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를 보내라 여기는 어떻게 뭐 이런(의견을 제시하거나), 같이 가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집안 일에 대해서 모든 걸 거의 다 나한테 맡기는 스타 일이어서 항상 모든 집안 일은 다 제가 알아서 하는 편이에요.”(D, 지원, 홀벌이가정)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홀벌이 가구에 비해 남성들이 양육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엄마의 역할과 시간 투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비공식 양육조력자에 대한 의존

본 연구의 결과는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이외에 친인척, 형제 자매, 지인, 유급의 양육보조자의 고용 등을 통해 양육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규시간의 보육시설 위탁 이외의 시간에 필요로 되는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보육료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서비스만으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각 가정의 개별적인 이유에 따라 보육시설만을 전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게 양육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의존도는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04년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 <표 IV-4>에 따르면 엄마가 비취업 상태에서는 엄마가 주 돌봄제공자였고, 엄마가 취업상태인 경우 미취학아동의 돌봄제공자는 엄마가 57.2%, 친조부모 18.5%, 외조부모 12.3%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모두 돌봄제공자는 주로 엄마인 여성이라는 점이다. 본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 양육자는 엄마이지만 홀벌이가구를 제외한 맞벌이, 모자, 부자가정 모두 비공식 돌봄제공자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아동구분별 현재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 자매	부의 형제 자매	모의 형제 자매	친조부 모	외조부 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계	(수)
전체	2.6	83.9	1.7	0.3	0.4	7.1	3.1	0.1	0.7	100.0	(6,412)
미취학아동											
영아	1.4	82.8	-	0.1	0.9	7.2	5.5	0.3	2.0	100.0	(1,172)
유아	1.8	82.5	1.6	0.6	0.5	8.4	3.5	0.1	1.1	100.0	(1,792)
소계	1.6	82.7	0.9	0.4	0.6	7.9	4.3	0.2	1.5	100.0	(2,963)
전체	1.6	82.7	0.9	0.4	0.6	7.9	4.3	0.2	1.5	100.0	(2,963)
모취업											
취업	2.6	57.2	2.7	0.8	1.7	18.5	12.3	0.2	3.9	100.0	( 984)
미취업	0.7	98.0	0.1	0.1	0.1	0.6	0.2	0.2	0.2	100.0	(1,916)
모부재	14.8	7.4	-	5.6	-	66.7	1.9	-	3.7	100.0	( 54)

출처: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88-90).

먼저, 부자가정의 경우 전적으로 비공식 돌봄제공자에게 양육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공식 돌봄제공자는 부자가정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결정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제 직업이 호텔 조리사라서 2교대로 일을 하거든요 새벽에 출근해서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고 아침 늦게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서는 애기랑 같이 있는데 오후에 출근할 때는 집에 늦게 오면 아기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아이 돌보는 일은 어머니가 주로 하고 아버지와 내가 시간되면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래요....”(J, 지원, 부자가정)

다음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비공식 돌봄제공자에게 양육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조부모가 이사를 단행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이사까지 단행함으로써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비공식 돌봄제공자는 주로 여성이라는 점과 혈연관계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 있어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의존은 장시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장시간 자신의 아이들만이 남겨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복지패널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취업 모인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부모 세대와 같이 살면서 그들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하기 때문에, 동거 성인의 수가 보육서비스 구매 확률을 감소시켜 보육 공급에 대한 수요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의한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공보육 발달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벌이 하는데 저는 3교대고 아이 아빠는 아침 6시 출근해서 밤 늦게 오니까.....애는 돌이고 그래서 용산에 사시는 시부모님에게 부탁드려 이쪽(신길동) 저희 집 옆 아파트로 이사해드렸어요. 물론 집값은 저희가 빚을 내서 마련하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에 오면 할머니 집에서 시어머님이 보시죠.”(K, 비지원, 맞벌이가정)

그리고 모자가정의 경우, 친정식구들과 주거를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정부모 또는 여동생 등이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과 경제활동참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동생이 28살인데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면 아이를 돌봐줘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할 거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어 할거고...그래서 동생한테 넘 미안해요. 이거 제과학원 끝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되요. (F, 지원, 모자가정)

반면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 이용하였다.

“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오빠만 있어서 제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밤까지 맡기고 있어요.”  
(H, 지원, 모자가정)

이러한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양육 의존은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구 경제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비공식 돌봄제공자가 있는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댓가로 부모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녀양육비용으로 보육료 이외 추가 양육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는 맞벌이라 할머니가 옆 아파트에서 보시는데 오후 4시쯤 오면 그 때 부터 할머니가 보세요. 애 봐주시는 댓가는 처음에는 우리 힘들다고 안 드렸어요. 드리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에요. 용돈조로 20만원....시아버지가 버시니까 안줘도 된다고.....물론 아이는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시죠....어머니도 뭘 바라시는 것은 아니에요.....이렇게 회사일이라는 것이 세미나나 회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애 아빠가 안되는 경우 주로 어머니가 있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빨리 와야할 것 같고.....또 시댁에 애들이 어질러 놓은 것 치워드리고 와야하고 .....그래서 참 힘든것 같아요...”.  
(K, 비지원, 맞벌이 가정)

하지만 비공식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데 이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 부담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직업이 시간이 자유롭긴 해도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육료 100%지원을 받지만 저녁 9시쯤 데려오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있어요.”(I, 지원, 모자가정)

결국 자녀양육에 있어서 견고한 성별분업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양육은 여성의 책임하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다양한 가족 형성에 따른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양육 의존은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한계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높은 양육 의존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구조적 환경과 보육정책이 성별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한계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한 보육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 보육료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가시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성별분업 중심의 강한 모성 이데올로기와 비공식 돌봄제공자에게 의한 높은 의존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자녀양육 환경과 제한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육과 일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자녀양육만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조운영(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공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이 성별, 연령, 경력단절 등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 지급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체계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 지원이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총 보육비용은 부모부담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추가 부담의 경우는 현장학습비, 재료구입비 등이라든가 야간보육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보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좀 더 보육료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과 시설형태, 즉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따른 보육비용이 상이하여 시설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현장학습비, 재료구입비 등은 추가비용이 고스란히 부모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일제를 기준으로 한 표준보육비용은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이 이후 보육서비스 비용 역시 부모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는 친족 등에 의해 추가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돌봄을 위해 공식적인 보육시설 비용이외의 추가보육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5> 2005년 표준보육비용과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비교

(단위: 천원)

연 령	표준보육비용	국공립시설보육비용	민간시설보육비용
만 0세	789	739	500
만 1세	524	570	440
만 2세	403	446	348
만 3세	267	208	198
만 4세	248	199	198
만 5세	249	199	198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게 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

둘째, 차등보육료 지원 기준은 임금소득이 아닌 정부가 절대적 기준선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이 여성경제활동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부자가정,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를 위해 친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월 소득이 낮아도 배제되거나 낮은 금액만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의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가구 소득의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패널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였주었듯이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홀벌이 가구가 많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기 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표준보육비용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와 소득인정액 기준의 공보육 수급권은 성인지예산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는 성별분업 해체에 한계로 지적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보육지원 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인지적 보육예산의 기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V. 보육예산의 돌봄부문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이 장에서는 2005년 이후 대폭 증가한 보육정책 예산이 보육부문 고용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보육부문의 고용현황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라기 보다는 눈에 띄게 증가한 보육예산이 직접 수혜자인 아동 뿐 아니라, 보육교사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연구질문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예산의 증가가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1명,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2명<sup>3)</sup>,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 등 총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보육부문의 고용현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부처의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자료와 함께 이를 활용하였다.

## 1. 보육교사의 증가와 처우개선 없는 보육예산의 증가

2003년 ~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변화추이는 보면 <표 V-1>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101,622에서 2007년 169,585명으로 약 6만8천명이 증가하였다. 이 증가인원을 보면 보육교사가 2003년 57,403명에서 2007년 122,262명으로 약 6만5천명 증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종사자 중 보육2교사의 증가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예산 중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의 증가 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평균 1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약 1조 2천억원의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가 2008년 1조 4천억으로 2천억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V-1>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2003년-2007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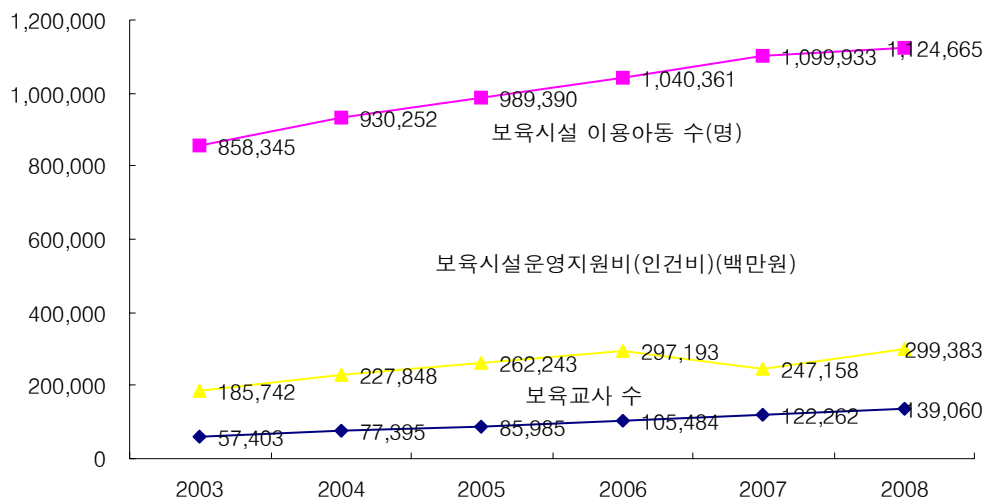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01,622	125,147	136,916	156,306	169,585
시설장	24,142	26,903	28,367	29,233	30,856
20인 이하 시설	-	-	11,627	12,115	13,541
40인 미만 시설	17,413	19,478	8,264	7,789	7,347
40인 이상 시설	6,729	7,425	8,476	9,329	9,968
보육교사	57,403	77,395	85,985	105,484	122,262
1급	30,812	47,495	45,956	56,834	68,470
2급	26,595	29,900	39,124	40,362	38,794
3급	-	-	-	7,124	13,699
특수교사	-	-	482	656	798
치료사	-	-	423	508	501
유치원교사유자격자	24,309	-	-	-	-
간호사	666	655	676	756	642
간호사	316	321	283	377	349
간호조무사	350	334	393	379	293
영양사	532	503	663	878	681
사무원	1,172	1,238	1,196	1,194	887
취사원	9,457	10,153	11,460	11,304	9,544
의사	217	145	101	71	25
의사	6	4	3	0	1
촉탁의사	211	141	98	71	24
사회복지사	-	-	138	123	4,688
운전기사 등 기타	8,033	8,155	8,330	7,263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보육통계」, 2007.

3) 민간보육시설은 법인시설과 법인의 시설 2곳의 보육교사를 인터뷰하였다.

<그림 V-1>에서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의 증가와 보육교사의 수 증가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금액이 증가추세에서 2007년 하락하다가 2008년 다시 증가추이를 보였다.

보육예산에서 보육시설운영지원 중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 방과후, 시간연장 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지원 수준은 “각 연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아동 대상별 인건비 지원 비율이 상이하여 보육교사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정도를 측정하긴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30%(보육교사)혹은 80%(시설장 혹은 특수 전담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주: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림 V-1> 보육교사 수와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그리고 보육시설기능지원비 변화추이

정부지원시설 보육종사자 인건비 증액과 보육교사 수 증가간의 관계를 보면 <표 V-2>에서 보듯이 보육교사의 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 정도를 보면 유사하게 연동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고시한 보육교사 인건비 대비 보육종사자 1인당 (국고)인건비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평균 57%를 지원하고 있고, 연도별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수 증감추이와 보육교사의 증감추이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지원비(인건비) 연동됨으로써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 보육교사 수 증가추이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추이('04~'08년)

(단위: 명,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아동수(명)(A)	242,866	237,731	235,208	237,352	237,299
(전년도 증감 수)		-5,135	-2,523	2,144	-53
보육시설 종사자 수(명)(B)	29,942	29,578	30,722	31,648	34,425
(전년도 증감 수)		-364	1,144	926	2,777
(국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금(백만)(C)	218,700	262,200	297,193	247,158	299,383
(전년도 증감액(백만))		43,500	34,993	-50,035	52,225
종사자1인당 월급여(원) =(C/B)/12	608,677	738,725	806,135	650,799	724,723
보육종사자 급여(1호봉 기준)	1,144,225	1,201,000	1,237,030	1,274,140	1,312,360
보육종사자 인건비 대비 국고 인건비 지원 비율(D)	53 %	62 %	65 %	51 %	55 %

주: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전됨으로써 통계자료의 출처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구분되는데 통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통합자료를 제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자료 출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통일함.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별 따른 보육교사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심층인터뷰 결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예산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 증가 또는 보육교사 임금 개선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 년차에 의한 증가분 이외 임금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희는 기준이 있는 호봉대로 급여를 받구요. 일년에 한번 간혹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임금이 인상될 때 같이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워낙 임금의 덩어리가 적다보니 큰폭으로 인상되지는 않구요 일년차 1호봉과 5호봉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년이 지나고 이년이 지나고 5호봉이 되도 거의 차이가 안나요. 제가 원감인데 5년차인데 일호봉을 가진 선생님들과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일호봉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140만원 정도(5년차)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과 대리 과장 정도의 차이가 나야되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과장인데 신입사원과 연봉차가 크더라구요. ....(중략).... 결혼을 해서 아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면서 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한평생을 던질만한 직업이나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회의를 느낄수 있는거죠(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이처럼 보육예산 증액이 보육교사 고용 또는 처우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미 안고 있는 낮은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보육교사의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었다. 특히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의 상승폭이 낮고 유사직종과의 임금격차가 큰 임금체계는 보육교사의 근로지속성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표 V-3>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육시설 종사자 급여를 보면 매년 월 급여의 상승

폭은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호봉순에 따라 1호봉인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 임금은 약 4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30호봉의 경우 약 8만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리고 호봉간 임금상승은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5년 이상 경력인 6호봉은 5호봉과 약 10만5천원 이상의 급여가 증가하지만 이 또한 유사직종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서문희(2006)는 전년대비 임금상승폭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경력에 대한 호봉간 격차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표 V-3> 2006년~2009년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

(단위: 원)

호봉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호봉간 차이
1	1,237,030	1,274,140	1,312,360	1,351,730	-
2	1,272,850	1,311,040	1,350,370	1,390,880	39,150
3	1,312,120	1,351,480	1,392,020	1,433,780	42,900
4	1,353,320	1,393,920	1,435,740	1,478,810	45,030
5	1,394,890	1,436,740	1,479,840	1,524,240	45,430
6	1,490,750	1,535,470	1,581,530	1,628,980	104,740
7	1,553,910	1,600,530	1,648,550	1,698,010	69,030
8	1,582,350	1,629,820	1,678,710	1,729,070	31,060
9	1,625,550	1,674,320	1,724,550	1,776,290	47,220
10	1,672,360	1,722,530	1,774,210	1,827,440	51,150
11	1,733,150	1,785,140	1,838,690	1,893,850	66,410
12	1,785,330	1,838,890	1,894,060	1,950,880	57,030
13	1,831,000	1,885,930	1,942,510	2,000,790	49,910
14	1,871,770	1,927,920	1,985,760	2,045,330	44,540
15	1,912,540	1,969,920	2,029,020	2,089,890	44,560
16	1,970,130	2,029,230	2,090,110	2,152,810	62,920
17	2,012,530	2,072,910	2,135,100	2,199,150	46,340
18	2,054,940	2,116,590	2,180,090	2,245,490	46,340
19	2,097,340	2,160,260	2,225,070	2,291,820	46,330
20	2,139,740	2,203,930	2,270,050	2,338,150	46,330
21	2,209,260	2,275,540	2,343,810	2,414,120	75,970
22	2,251,670	2,319,220	2,388,800	2,460,460	46,340
23	2,289,180	2,357,860	2,428,600	2,501,460	41,000
24	2,331,580	2,401,530	2,473,580	2,547,790	46,330
25	2,370,720	2,441,840	2,515,100	2,590,550	42,760
26	2,409,860	2,482,160	2,556,620	2,633,320	42,770
27	2,444,100	2,517,420	2,592,940	2,670,730	37,410
28	2,481,610	2,556,060	2,632,740	2,711,720	40,990
29	2,522,380	2,598,050	2,675,990	2,756,270	44,550
30	2,558,260	2,635,010	2,714,060	2,795,480	39,210

출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육시설 종사자 월 급여표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돌봄부문의 유사직종 내에서도 상대적 임금격차가 높아 보육교사의 상대적 박탈감 정도가 높다. 유사직종 내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급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종수당 등의 급여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월급여 뿐만 아니라 연봉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보면 <표 V-4>에서 유사직종과의 급여를 비교해보면 1호봉의 기준으로 볼 때 교사,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경우 국공립보육교사 임금보다 낮다. 하지만 연봉총액을 보면 국공립보육교사 연봉 1,440만원 대비 교사는 약 2배,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8배,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사와 비교해보면 2년제 유치원교사보다 보육교사 월 급여가 약 70만원 적고, 연봉으로 900만원이나 낮다.

<표 V-4> 유사 직종과의 급여 비교(2006년 기준)

직종	교사	국공립 유치원교사		국공립 보육교사	공무원 (9급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기준	공무원 보수규정	2년제 (6호봉)	4년제 (8호봉)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서울시 보수지급규정	종사자 수당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원	1,895,833원	1,974,833원	1,201,000원	792,900원	740,000원	771,000원
연봉 총액	23,437,280원	22,750,000원	23,698,000원	14,412,000원	20,724,700원	(서울시) 18,358,000원 (타지역) 16,000,000원	15,918,000원

\*주: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 기준이며, 유치원 교사(4년제)의 경우 비사범임. 사범계열의 경우 9호봉으로 월평균 1,974,833원임.

\*자료: 김종진, “보육, 사회복지, 자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참여복지시대,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공공연맹, 2006. 5

실제 보육교사는 면접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로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근로자의 경우, 기본 연봉은 저희 보육시설 종사자와 그렇게 크게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는거 같은데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원래 받는 급여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면에서 보면 근무의 수당이 저희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보육교사들이 저희같은 경우는 운영계획회의를 연초부터 진행을 하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일련의 행사도 있고 연말에 졸업식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야근을 하시거든요(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휴가지원비 등과 같은 법정외 급여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희 기관이 다른 기관하고 다른 부분은 시간외 수당이라는 부분이 도입되기 전에 추석이나 명절 여름휴가 가기 전이라던가.....연말이라던가 이럴 때 운영비에서 기관장님이 교사들한테 휴가비를 지급 해주셨어요. 그런것들이 다른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저희 기관의

힘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보육교사 임금이 증액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건 없는거 같아요(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표 V-5>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평균임금 비교(2008년)

(단위: 원)

구분	단가	국공립 보육시설 경력5년(6호봉)	유치원	유치원주임교사
			경력5년(11호봉)	14호봉
총 액		30,086,195	30,932,000	34,834,000
월액		1,581,530	2,577,667	2,902,833
봉급			14,671,200	16,580,400
호봉			1,222,600	1,381,700
제수당계			16,260,800	18,253,600
상여금			5,501,700	6,217,650
체력단련비			3,056,500	3,454,250
효도휴가비			1,222,600	1,381,700
정근수당	75%, 2회		1,222,600	1,381,700
특수업무수당			4,320,000	4,320,000
교직수당	250,000		3,000,000	3,000,000
담임수당	110,000		1,320,000	1,320,000
초과근무수당			1,207,080	1,351,080
시간외수당	6,706		100,590	112,590
실비수당			6,439,100	6,995,950
정액급식비	80,000		960,000	960,000
교통보조비	100,000		1,200,000	1,200,000
명절휴가비	50%, 2회		1,222,600	1,381,700
가계지원비	50%, 4~5회		3,056,500	3,454,250
보직수당				720,000
부담금			257,767	290,283
보험부담금		40,171		
국민연금		71,169		
고용보험		7,117		
퇴직금		131,794		
총월액		1,581,530	2,835,433	3,193,117

- 주: 1. 시간외 수당은 월 15시간 이내이며 총월액에서 제외됨.  
 2. 부담금 = 사학연금 + 건강보험비  
 3. 보육시설 종사자 총월액에는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포함된 액수임.

특히 유사한 직무를 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임금표를 비교해 보면 <표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 5년의 보육교사의 경우 기본급 이외 추가적인 수당, 비급여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반면 경력 5년의 유치원 교사의 경우 기본급이 보육교사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아 월급여에서 무려 140만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와 유사직종에서의 차별적 임금체계는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율, 낮은 근속기간,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 단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V-6>에서 보듯이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평균 근무경력을 보면 3년 3개월에 불과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경우 가장 긴 3년 11개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2년 6개월, 가정어린이집은 1년6개월로 매우 낮다. 이러한 낮은 근속기간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V-6>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평균근무경력 및 현재 호봉비교

시설유형	총 경력	현재 경력	이전 경력	현재호봉
전체	5년 1개월	3년 3개월	1년 10개월	4.6
국공립	6년 2개월	3년 11개월	2년 3개월	5.5
법인	5년 6개월	4년	1년 6개월	4.8
민간개인	4년 2개월	2년 6개월	1년 8개월	4.1
가정	2년 10개월	1년 4개월	1년 6개월	2.3

자료 : 유희정 외2인(2007)(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 육아정책개발센터)

결국 보육예산 상승이 보육교사의 고용 또는 처우개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낮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노동과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에서 보면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19분으로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어기고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연장근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특성상 아동이 하원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다보면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상회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제시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결국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저축을 받지 않는다.

<표 V-7> 시설유형 및 시설장 교사겸직여부별 보육교사 평일 근무시간

구분	시설장 구분		시설유형						전체
	전임	교사겸직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직장	가정	
평균	10시간 13분	11시간 2분	10시간	10시간 24분	10시간 32분	10시간 28분	10시간 10분	10시간 17분	10시간 19분
표준 편차	1시간 4분	1시간 40분	58분	51분	54분	1시간 8분	40분	2시간 18분	1시간 11분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2006

김현숙(2008)은 이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주당 평균적으로 55시간을 근무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에게 제공되는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6,706원으로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육 교사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보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초과근로 수당 받아본적 없구요. 당직하는 경우에는 6시까지의 보육시간이고 6시에서 7시 반까지는 통합교육하고 당직교사는 수당이 나오고 다른 교사들은 늦게 까지 있어도 ....수당이 나오는건 없어요(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 2. 모성보호정책의 역설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은 아동의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부모이자 직업적인 돌봄제공자라는 두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교사는 “내 아이는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 아이는 내가 보는” 돌봄종사자들의 역설을 보여준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터뷰).

<표 V-8>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보육시설 종사자 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받은 교사는 31.8%뿐이고 육아휴직은 13.6%만이 이용할 뿐이다. 더욱이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다른 기관 보다 출산휴가 이용율은 56.4%로 높지만 육아휴직은 경우는 다른 기관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율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야간근무로 부터 낮은 보호는 38.7%만이 임신후 근무를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즉, 열악한 모성보호 수준은 보육교사의 근로지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교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표 V-8〉 보육시설 제 특성별 모성보호 항목별 완전 보장한다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출산 후 유급 휴가	육아휴직	결혼 후 근무	임신 후 근무	임신한 교사 야간 및 휴일금지	(N)
전체	31.8	13.6	54.6	38.7	16.9	(306)
시설유형						
국공립	56.4	18.8	66.3	58.8	17.5	( 80)
법인	34.9	11.6	39.5	34.9	14.0	( 43)
법인외	32.3	12.9	45.2	32.3	19.4	( 31)
민간	17.0	12.3	49.1	27.4	16.0	(106)
직장	35.7	7.1	85.7	31.4	14.3	( 14)
가정	10.7	10.7	60.7	21.4	21.4	( 28)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2006.

보육교사들이 막상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체인력의 부족과 돌봄제 공자의 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정서에 끼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가 첫 번째 출산휴가 받은 첫 사례 아니 출산 전 퇴직을 하고 돌아온 첫 번째 사례 거든요. 기관차원에서 하지 말아라 한것도 아니고 출산휴가라는게 있다라고 제안은 받았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걸 알거든요. 3개월동안 아이들이 대체교사와 있어야 하고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모입장도 그렇고 교사로서도 책임감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임신하신 분들은 출산 즈음에 다 사직을 하셨어요. 저같은 경우는 학기중에 교사가 바뀌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9월에 출산을 해서 3월에 출산하는 해인 3월에 교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거예요. 한학기 지속한다고 해도 또 바뀌어야 되니까 그때 사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관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고 9개월동안 여기서 아이들을 임신한 상태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나 3-4분 정도 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다 사직하셨어요. 그리고 복직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비단 출산휴가제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 이용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낸다고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더 나아가 보육교사의 낮은 근로지속성의 문제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질적 서비스에 영향을 끼친다.

“고용보험료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은 생각 못했어요. 출산휴가는 고민을 했던거는 3개월 후면 복직하는거니까...육아휴직은 생각 못해봤어요 가장 큰 문제가 대체교사가 문제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세팅이 안되면 어려울것 같아요(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또한 자신의 직장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 도입이 자녀양육과 일을 양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희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교사의 자녀가 있는게 긍정적인 점수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 누를 끼칠수 없으니까 기관에서는 저를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고려해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고용되는 교사의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평가 인증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아이러니 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물론 교사의 자녀가 기관에 있으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힘들꺼 같더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렇다고 점수를 깎나.. 그런 얘기를 했었던거요. 일반적인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결혼이나 출산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기관에서 정작 교사의 아이는 키워주지 않는거에 대해서 그게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 한거 같아요. 내자식은 저쪽 기관에 놔두고 7시 반이 되도 못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무 이외의 시간을 연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게 굉장히 상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죠. 현장에서..(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 3. 기본보조금

기본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표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지원 금액의 상승과 대상 아동의 수가 증가하였다. 지원금액에 있어서 0세의 경우 249000원에서 2008년 34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원 아동 수 또한 2006년 191천명에서 254천명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도 2006년 942억원에서 2008년 약 2300억원으로 2.5배가 증가하였다.

<표 V-9> 기본보조금 지원 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금액 (천원)	0세	249	292	340	2009년에는 e-아이사랑 카드제도 도입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보조금의 성격으로 인해 분리 지원하기로 하였음 (예산이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아 미기재)
	1세	204	134	164	
	2세	69	86	109	
지원아동수 (천명)		191	200	민간영아: 254 (민간유아: 55,556명)	
예산(백만원)		94,200	132,729	229,763 (유아15000)	

출처: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본 연구에서는 ‘기본보조금’에 의한 민간보육시설 지원은 보육교사의 처우나 고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보조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보육시설운영비에 포함되고 영아반교사만 따로 주는 것은 없어요. 영아반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호봉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고 수당도 똑같이 나눠 받아요. 그래서 영아반 선생님도 호봉에 따라서 110만원 급여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어요(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아동에 대한 시설운영비이지 실재 꼬리표를 달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원금으로 합산되어 산정된다는 것이다.

“처음 도입할 때 원래 기본보조금 안에는 교사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정인원보다 초과했을 때 남은 금액을 6:4로 나눠서 교사인건비로 사용하라고 하지만 그거 같고 지도 점검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 교육지원비이지 교사 인건비 지원은 아니예요(민간보육시설 원장).”

그리고 반 규모면에서 선생님 1인당 영아 수가 적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시설장은 못 느낀다고 말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은 국공립보육시설보다 낮고, 이직율도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민간보육시설이 낮은 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5년 이상 근속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5년 이상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하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5년 이상의 경력 교사보다 오히려 좀 더 낮은 인건비를 지불 할 수 있는 5년미만 경력자로 교체하는 방안 또는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보육시설장은 “인건비를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8년 경력자가 있는데 우리 기관에 남아있는 것은 낮은 임금을 감수하니까 남아있는 거죠.”라고 말한다.

“5년 경력된 분의 임금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초봉과 별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여기 OO시는 17만원 처우개선비와 3년 이상 되면 3만원의 증액하여 20만원 받아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5년만 지나면 어린이집에서 대우 못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원장선생님의 부담이 커지니까요(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결국 이러한 보육시설 간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낮은 보육교사 처우도 일정부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보조금’제도인데 실제 기본보조금이 아동의 보육서비스 개선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효과는 없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민간보육시설에 정부가 공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때 성격이 불분명한 지원방식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지원에 따른 적합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획득하기 어렵다.

#### 4. 평가인증제

2005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인증 참여율 확대를 위해 평가 인증제가 시범실시를 토대로 2006년 전면 실시되었다. 2008년 기준 평가인증제를 시행한 시설은 총 7,556개소로 총 보육시설 수 대비 24.5%가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평가인증제도의 안착과정에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평가인증제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평가인증제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유희정, 2007)<sup>4)</sup>. 평가인증제도 실시 이후 효과 분석한 결과 더 좋아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설장은 54.4%, 교사는 62.2%, 학부모는 70.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가인증 통과 후 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적합 한 영역별

4) 유희정, 2007,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세미나 자료집.

활동을 제공하는 것의 변화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장의 경우 더 많아졌다는 응답이 81.4%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경우 매우 개선되었다와 조금 개선되었다가 각각 55.3%, 43.8%로 교사들의 활동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서 및 사회성 지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가, 교사 처우 개선, 휴직 및 안전한 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미 하고 있었던 전체적이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고 기관은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좋았어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울수 있고 정리도 되고 하여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좋은점은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니까.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나름대로 투자하게 되고 좀 더 나은 환경이 이루어지잖아요(민간보육시설 시설장).”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댕가로 하고 있다. 수업이나 아동에 위한 초과근로이외에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강도 높은 초과근로가 가중된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서 평가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는 정부가 보육교사 1인당 25만씩 2회기에 걸쳐 총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보육교사의 경우 이 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있는 다른 보육교사가 수령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이라는 것이 일한 만큼 보상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처음 인증을 준비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평가인증을 통과 하고 나서 교사들은 뭘 받았냐 하면....일인당 보너스 같은거를 받았어요. 6개월동안 고생한거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하죠. 그래도 교사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실레이긴 했으나 노력한거에 비하면 부족하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탁을 일주일에 한번씩 꼭 하는데 그걸 기록 해야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받아야 하고...이런것들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인증으로 인해 교사 업무가 늘어난건 사실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없는거죠. 그리고 평가를 또 준비해야하는데 새로 입사하신 선생님들은 늘어난 업무를 해야 하는거죠. 부정적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교사 처우라는 시각에서 보면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200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간을 기존 7~9개월에서 6~7개월로, 관찰기간을 2달에서 1달로 축소하였다. 하지만 기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평가인증 전담인력이 없어서 보육교사가 수업 이외 시간에 초과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인허가와 평가인증을 분리되어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평가인증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제안도 하고 있다(민간보육시설 원장 면접).

## VI. 잠정적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09년 동안의 보육예산의 추이분석을 통해, 현재 보육정책이 차등보육료를 비롯하여 아동보육에 필요한 현금지원에 예산의 76-79%(2008-200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보육예산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료지원의 성별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는 영유아보육료 수급 여부가 여성취업, 보육서비스 구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육예산의 성별영향 평가를 시도하였다. 첫째, 보육료 수급 없이 비취업 상태에 있던 모가 지원과 함께 취업 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극히 낮았다. 그러나 비취업/지원에서 취업/지원으로 갈 확률은 12%로 약간 높아 보육료 지원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보여준다. 보육료 지원과 여성 취업이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성 취업을 유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스스로 미취학 아동을 돌보았을 비취업 여성이 미취학 아동을 보육 시설에 맡기면서 교육 훈련이나 일자리 탐색에 시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계량분석 역시 잠정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모의 취업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보육료 수급의 여성취업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형의 약점으로, 보육료 수급과 여성 취업을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육료 수급의 영향은 인과 관계라기보다는 상관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보육료 수급에 동반하는 표본 선택 편의를 교정하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분석은 영유아 보육료 수급과 여성 취업과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데 보다 적절한 방법이다. 보육료 수급은 보육료를 수급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여타 다른 속성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보육료 수급이 여성취업에 긍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또한 본 연구는 보육료지원이 개별 가정에서 젠더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질적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질적연구 결과는 보육료 지원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육비용의 부담을 덜어 가게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육료지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가구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홀벌이 가정의 남성인 경우 보육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보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홀벌이 가정의 여성은 보육료를 지원

받음으로써, 그 동안 집에서 하루 종일 돌보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어서 돌봄노동을 경감시켜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홀벌이 가정의 미취업 여성들은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는 모자가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여성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이 모자가정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측면적인 지원의 효과가 있지만, 전액 보육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설 정규시간 이외의 양육과 그 비용 부담은 유연적인 노동형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질적연구 결과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은 일과 양육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남성에게는 자녀양육이 이직이나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여성들에게 자녀양육은 노동시장 참여에 큰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양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없는 현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성별분업 중심의 강한 모성 이데올로기와 비공식 돌봄제공자에게 의한 높은 의존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자녀양육 환경과 제한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육과 일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자녀양육만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돌봄부문 노동시장을 거의 점하고 있는 여성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동안 보육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보육부문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육료 지원 그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나 성역할 분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의 결론은 보육정책이 남성과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양육을 둘러싼 성역할 분업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양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면, 보육료 지원 이외의 공보육시설의 확대와 노동시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김현숙. (2008).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재정학연구. 1(2). pp.61-103.
- 백선희. (2005).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한국사회복지학. 57(1). pp.5-29.
- 서문희, 이미화, 구미진, 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 우석진, 2008,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재정포럼.
- 유희정, 2007, '보육정책의과제-어디로 가야하나', 젠더리뷰 2007년 4호
- 이석원 (2003).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에 의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37(3): 181-199

- 조병구, 조윤영, 김정호, 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KDI
- Blau, D. M. (2000). Child Care Subsidy Programs. NBER Working Paper Series(NBER Working Paper No. 7806).
- Gornick, Janet C. and Marcia K. Meyers, 2003, Families That Work,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Jenson, Jane, 2004, "Changing the Paradigm: Family Responsibility or Investing in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29(2): 169-192
- Lefebvre, P., Philip Merrigan, and Matthieu Verstraete. (2008). Dynamic Labour Supply Effects of Childcare Subsidies: Evidence from a Canadian Natural Experiment on Low-Fee Universal Child Care.
- Rosenbaum, P.R. and Rubin, D.B. (1985),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Using Multivariate Matched Sampling Methods that Incorporate the Propensity Score", The American Statistician 39(1), 33-38.
- Rosenbaum PR & D. B. Rubin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70:41-55.








사회재정치출의 성인지 분석

# 토론문

김현숙 (송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 토론문

김 현 속 (송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연구의 의의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몇 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육예산을 성인지 관점에서 처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보육예산의 성별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님
  - 영유아를 둔 가구에 가구단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보육예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움
  - 보육예산의 수혜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므로 수혜자에 대한 일차적인 효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부모 중 어머니의 노동공급이나, 가정 내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므로 보육예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임.
- 따라서 보육예산의 성인지 분석은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님

### □ 연구내용의 선정

- 저자는 성인지 예산분석의 내용으로 1)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 남성과 여성의 젠더관계의 변화, 3) 보육서비스 종사자 관련 성인지 분석으로 설정
- 저자가 선정한 세 가지 내용은 다시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분류되어 1)과 2)는 보육서비스 수요, 3)은 보육서비스 공급관련 부분으로 정리됨

### □ 보육서비스 수요분석

- Heckman의 이단계 추정법, 상향점수매치법을 이용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가구 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일부 영향은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결론
- 심층면접을 통해 보육예산이 가구내 남성과 여성의 젠더역할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에게 일정한 심리적인 효과는 나타났지만 한국의 성별분업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는 쉽게 변화하지 않고 있고 이를 변화시키기에는 현 정부의 보육료 지원수준이 미약하다는 결론

## □ 보육서비스 공급분석

- 주로 보육관련 지원(기본보조금 포함),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의 대다수 종사자인 여성의 인건비 개선을 포함한 처우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도출
  - 기본보조금처럼 서비스 개선명목으로 도입된 보조금조차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

## □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

- 보육서비스 수요 평가는 주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으로 집중되는 것이 적절함
  - 그런데 현 보육정책은 취업모 우선지원 정책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기혼여성 취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매우 낮아(김현숙, 2009)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취업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 큼
  - 따라서 현 기혼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단지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되기는 어려움
- 보육료 지원이 가정 내 젠더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젠더역할에 대한 변화는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가능한데 단지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가 가정 내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대한 변화까지 동반한다는 것은 불가능
  - 수가 적은 표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보육료 지원확대가 보육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수 표본을 이용한 심층분석을 통해 수행하기에는 부적절
  - 조운영의 연구결과에서는 기본보조금 도입이 교사의 처우개선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 실제로 기본보조금의 일부는 교사인건비와 연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교사처우는 개선되었어야 함.

## □ 연구내용에 대한 제안

- 보육료 지원이 젠더간 역할이나 가정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역할은 다소 그 범주나 분석내용이 모호함
- 따라서 연구내용에서 제외하거나 마지막 절로 보육예산을 통한 성인지 분석의 한계를 새롭게 추가하여 그 부분에서 보육료 지원이 젠더간 역할변화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한 서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됨



- 보육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연구는 보육수요에 대한 회귀분석처럼 회귀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 □ 보육예산을 통한 성인지 분석의 한계

- 이 글은 시작부터 분석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고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성인지 분석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제약을 수반함을 예측할 수 있음
- 즉 어떤 항목의 정부예산이 성인지적 분석을 수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산지출 목표에 이미 성인지적 관점이 내포되는 것이 일반적임
- 보육예산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성인지적 분석은 2차적인 분석에 국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보육예산을 통해 성인지적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 가족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의 일 부분으로 보육예산의 효과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

- 여성의 노동, 출산, 자녀양육등과 관련한 정부예산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보육예산이 아니라 일종의 “가족정책”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
- 가족정책 관련 예산에는 최소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관련 예산, 보육예산,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및 고용보험 예산 등이 포괄되어야 함.
- 또한 공식적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관련 예산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관련 예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니는 효과, 출산을 장려를 위한 예산 및 그 효과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 가정 내 자녀양육의 책임을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한다는 차원의 종합적 정책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정책 내 한 정책으로 보육정책이 적절히 자리잡을 때 성인지적 분석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2005년~2009년)」에 대한 토론

유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김경희 교수님의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논문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김경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부분의 논지에 동의하며 또 논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음을 말씀드린다. 다만 오늘 제가 무엇인가 토론을 하여야 하는 자리이므로 김경희 교수님께서 글을 펼쳐나가신 순서를 따라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충이 필요하거나 자료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 1. 보육예산의 추이분석에 대하여

‘보육’이라는 개념(용어)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5-2007년도 예산분석에서 문광부(보육시설 설치운영), 농림부(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여성가족부(보육)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2008-2009 보육예산으로는 보건복지부(보육), 농식품부(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노동부(직장보육), 국방부(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일반인 대상의 ‘보육예산’ 논의에서는 문광부, 농식품부, 국방부의 예산은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드시 돌봄노동으로 보육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면, 현재 취업모 지원을 위하여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예산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사회적 ‘육아지원’이라 할 때는 대표적으로 보육부의 보육, 교과부의 유아교육, 노동부의 직장보육, 농식품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렇게 확대된 돌봄노동, 혹은 육아지원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뒤에서 이어지는 심층면접 등 모든 연구진행이 돌봄노동의 개념으로 통일되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보육예산 논의에서 중앙정부의 예산만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표 1> 보육예산지원에서 국고 및 지방비 비중(2009)

사업명	서 울		지 방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보육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인건비 : 종사자인건비(국공립 법인,영아전담시설, 장애아전담시설, 방과후시설보육교사,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10%	90%	40%	60%
운영비 :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20%	80%	50%	50%
인프라 :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지방 보육정보센터 운영	30%	70%	60%	40%
시설비 :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50%	50%	50%	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보육사업안내.

<표 2>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5-2009)

단위: 억원, %

구 분		국 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2005	보육	6,004	10,046	16,050	0.198
	유아교육	966	5,512	6,478	0.080
	노동부	151		151	-
	농업인양육비	448		448	0.006
	계	7,345	15,558	23,127	0.285
2006	보육	7,913	12,441	20,354	0.240
	유아교육	2,056	6,370	8,426	0.099
	노동부	139		139	0.002
	농업인양육비	637		637	0.008
	계	10,745	18,811	29,556	0.349
2007	보육	10,435	12,483	22,918	0.254
	유아교육	2,171	7,524	9,695	0.108
	노동부	161		161	0.002
	농업인양육비	1,015		1,015	0.011
	계	13,782	2,007	33,789	0.375
2008	보육	14,678	15,300	29,978	0.317
	유아교육	2	10,119	10,121	0.107
	노동부	174		174	0.002
	농업인양육비	988		988	0.010
	계	15,842	25,419	41,261	0.437
2009	보육	17,104	18,782	35,886	
	유아교육	1	12,352	12,353	
	노동부	158		158	
	농업인양육비	812		812	
	계	18,075	31,134	49,209	

- GDP : 8,480,446억원(2006), 9,011,886억원(2007), 9,444,457억원(2008). 한국은행.

- 2002 - 2005년 :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 2006 - 2009년 : 국무총리실 내부자료

## 2. 보육예산이 여성 취업에 미친 영향 분석

보육료 지원과 여성취업의 관계를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복지패널자료로 점검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중 취업모의 자녀는 46.6%(2004)로 이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53.4%는 전업모의 자녀이다. 거꾸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하여 어떤 지원을 받는가라고 물었을 때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50.4%), 혈연(36.8%), 유치원(23.2%), 학원(15.1%) 순이다. 영아의 경우는 혈연(61.9%), 보육시설(25.8%) 등이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육시설들이 설치 목적대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제공과 여성취업의 인과관계 혹은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설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 <표 III-5, 22쪽>에서 대상 집단 모의 연간 근로소득이 2008년도 663만원으로 즉, 월수입 55만원인 점은 이들이 여성취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 3. 보육예산의 젠더관계에 미친 영향 분석

우선 심층 면접 대상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이 동일한 가구라고 가정할 때 0세에서 지원이 가장 많고 아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이 적어진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3-7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 0세 383,000원, 1세 337,000원, 2세 278,000원, 4세이상 172,000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50%, 60%, 70%에 따라 기준보육료의 100%, 60%, 30%를 지원). 특히 영아대상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조금(2009년도부터 기본보육료)이 크므로(0세 및 장애아 350,000원, 1세 169,000원, 2세 112,000원/월)이 크므로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총 영유아 수가 1,135,502명(2008.12)에 이르고 있어 12명 대상의 면접으로는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 4. 보육예산의 돌봄부문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육교사들은 98% 이상이 여성으로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2008년도 보육시설종사자는 191,103명으로 2005년 136,916명 대비 54,187명 증가, 2007년 169,585명 대비 21,518명이 증가하여 보육영유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 보육의 활성화는 여성 고용 증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수령하고 있는 낮은 임금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보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두 직종 모두 '국공립기관'일 때와 '민간/사립기관'일 때 재정운영 조건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여 국공립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 안정적이지만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측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인건비 차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와 직결된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논의는 인건비 자체가 총체적으로 적은 점과 그리고 그 안에서 '민간/사립기관' 취업자는 '국공립기관' 취업자에 비하여 더욱 열악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비교에서는 이들의 진입학력이 다른 점이 고려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5. 수치 검토, 자료 점검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 보육예산의 총액에 대한 검토 요구(표 II-1)
- 인건비 지원 내역 검토 요구(시설장 및 보육교사)
- 본문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9년도 현재 소득 수준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제는 보육료 지원이 저소득층 대상에서 일반 가구로까지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 소득수준 70%(3인 가구 378만원, 4인 가구 436만원, 5인 가구 488만원, 2009)
- 본문에서는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가 통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10, 13, 14쪽 등), 2009 보육사업안내에 의할 때 기본보조금은 명칭이 바뀌어 기본보육료로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이는 56쪽 설명과도 다름).
- “보육 사업 가운데 가장 예산이 큰 것은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4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용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14쪽)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는 2009년도 9월부터 ‘소득수준 70%로 변경되었음
- “국공립 정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8.3%정도로”(15쪽)
  - 국공립 이용 영유아(10.9%), 법인 이용(10.0%), 영아전담(1.0%), 장애아전담(0.1%)인 점을 감안할 때 국공립 정부시설을 이용은 10.9%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지원 시설로 할 때는 모두 합하여 22%임. 법인외(4.7%)를 포함하면 26.7%이나 통상 법인 외는 인건비지원시설 유형에서 제외함.
-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공식 보육 기관(국공립(국립, 시립, 구립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 이루어지므로,”(29쪽)
  - 사설놀이방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음. 유치원의 정규시간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음.
- “또한 자신의 직장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 도입이 자녀양육과 일을 양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희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교사의 자녀가 있는 게 긍정적인 점수가 안 나오더라구요. ... 우리가 그때 평가 인증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아이러니 하다는 말을 했거든요.”(55쪽)

→ 평가인증에서는 이런 조항 혹은 내규(?)가 없으므로 삭제바람.

## 6. 맺으면서

보육이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특히,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당초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점검이 요구된다. 즉, 전업모 자녀와 차이를 두어 취업모 자녀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김경희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여성으로 구성된 보육교사 집단의 열악한 임금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이 요구된다.

<표 3> 중앙정부 보육사업 내역(2009)

정책	대상	기준	지원금																																																															
보육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별 아동연령별 보육료 지원은 50%이하 전액지원, 60% 60%, 70% 30% 지원함.																																																																
		<table><tr><td></td><td colspan="2">하위50%</td><td colspan="2">60%</td><td colspan="2">70%이하</td><td colspan="2">기타</td></tr><tr><td></td><td>지원</td><td>미지원</td><td>지원</td><td>미지원</td><td>지원</td><td>미지원</td><td>지원</td><td>미지원</td></tr><tr><td>0세</td><td>383</td><td>733</td><td>229</td><td>579</td><td>114</td><td>465</td><td>0</td><td>350</td></tr><tr><td>1세</td><td>337</td><td>506</td><td>202</td><td>371</td><td>101</td><td>270</td><td>0</td><td>169</td></tr><tr><td>2세</td><td>278</td><td>390</td><td>166</td><td>278</td><td>83</td><td>195</td><td>0</td><td>112</td></tr><tr><td>3세</td><td></td><td>191</td><td></td><td>114</td><td></td><td>57</td><td></td><td>0</td></tr><tr><td>4세</td><td></td><td>172</td><td></td><td>103</td><td></td><td>52</td><td></td><td>0</td></tr></table>			하위50%		60%		70%이하		기타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0세	383	733	229	579	114	465	0	350	1세	337	506	202	371	101	270	0	169	2세	278	390	166	278	83	195	0	112	3세		191		114		57		0	4세		172		103		52		0
			하위50%		60%		70%이하		기타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0세	383	733	229	579	114	465	0	350																																																								
		1세	337	506	202	371	101	270	0	169																																																								
		2세	278	390	166	278	83	195	0	112																																																								
		3세		191		114		57		0																																																								
		4세		172		103		52		0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만5세아 장애아(만12세 이하) 두자녀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만 4세까지)  시간연장보육: 소득 하위 70% 이하  야간보육: 소득 하위 70%이하까지 24시간보육: 소득 하위 70%이하까지 휴일보육: 소득 하위 70%이하까지 방과후보육: 소득계층 하위 70%이하																																																																
보육료 전액지원(172천원) 보육료 전액지원 소득 하위 60% 이하: 40%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50% 지원 소득 하위 50%: 시간당 2,400원 소득 하위 60%: 시간당 1,440원 소득 하위 70%: 시간당 720원 장애아동 3,400원 지원 정부보육단가 정부보육단가의 150% 일보육료 150% 만5세아 보육료의 50%한도																																																																		
원장: 인건비의 80%지원 교사: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30% 지원																																																																		
원장: 인건비의 80%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개소당 연 2,400천원(월 20만원) 지원																																																																		
연간 50~120만원 차등지원																																																																		
양육수당	미이용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일정소득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아이돌보미 지원	이용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2,000원, 100% 이하는 8,000원 본인부담 (100% 초과는 전액 자부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및 내부자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 7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6

### II.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정책 동향 / 77

1. 장애여성의 일반적 특성 / 77
2.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실태 / 79
3.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정책 동향 / 83

### III. 의무고용제와 여성 / 84

1. 의무고용제의 현황 및 문제점 / 84
2.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 85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구조와 사업내용 / 85

### IV.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 86

1.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 추이 / 86
2. 기관특성별 분포 / 88
3. 개인특성별 분포 / 91

### V.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 93

1.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 / 93
2.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 96
3. 직업능력개발사업 / 97

### VI. 결론 및 성 형평성 제고방안 / 99

1. 결론 / 99
2. 성 형평성 제고방안 / 102

참고문헌 / 10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여성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246,965명으로 2차에 걸친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2000년(958,196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등록장애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여성인구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져 2000년 288,434명이던 장애여성 수가 2008년에는 3.1배 증가한 901,408명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등록장애인 중 2000년 30.1%였던 장애여성 비율은 2008년에는 40.1%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5%이며, 고용률은 23.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당시 국민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0.0%) 및 고용률(48.7%)과 비교해보면, 국민 전체 여성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남성(경제활동 참가율 52.1%, 고용률 47.6%)과 견주어도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이 장애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실업률(6.9%)은 장애남성(8.8%)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장애여성의 취업하려는 욕구가 장애남성에 못지않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2000년 이후 장애여성 중 취업자비율은 별 다른 변화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15세 이상 장애여성인구 대비 취업자비율인 고용률을 보면, 2000년 19.5%에서 5년이 지난 2005년에도 20.2%에 그쳐 15세 이상 장애여성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취업하는 매우 열악한 취업실태를 보여준다. 2008년에는 2005년 대비 3.5% 포인트 증가한 23.7%로 나타나 지난 5년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sup>5)</sup>, 이 또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통합은 국가·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을 토대로 1990년 우리나라에 의무고용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장애여성의 고용촉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성 중립적으로 운용되어,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하고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여성의 고용률이 20% 남짓에 불과할 뿐 아니라

5) 그러나 2000년과 200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2008년 조사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장애여성의 고용률 증가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장애남성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선언이 단순한 선언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장애인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장애여성 1% 의무고용할당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여성들의 이러한 요구와 바람은 정책이 슈로 가시화되어 2008년 8월 국회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인하여 장애인 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을 고용·채용함으로써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장애여성들의 요구가 정책화되고 장애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촉진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혜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용 실태를 성별로 분석하여 성별 수혜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성 형평성을 진단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성별 수혜 현황과 성 형평성을 진단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관심대상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다.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사업의 4개의 사업부문 중 장애인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장애인이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나 그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이 창출되는 유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부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관 운영을 비롯, 장애인 고용정보관리, 대외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운영지원사업은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자료 분석으로, 등록 장애인 실태와 정부부문 의무고용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공공 및 민간부문 2008년 의무고용자료와 2008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예산 집행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창출지원부, 기업지원부, 취업지원부, 능력개발부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각각의 부서로부터 담당하고 있는 기금관련 사업 실적에 관해 공단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학사DB, 기금DB, 결산자료 등을 활용한 성별 분리통계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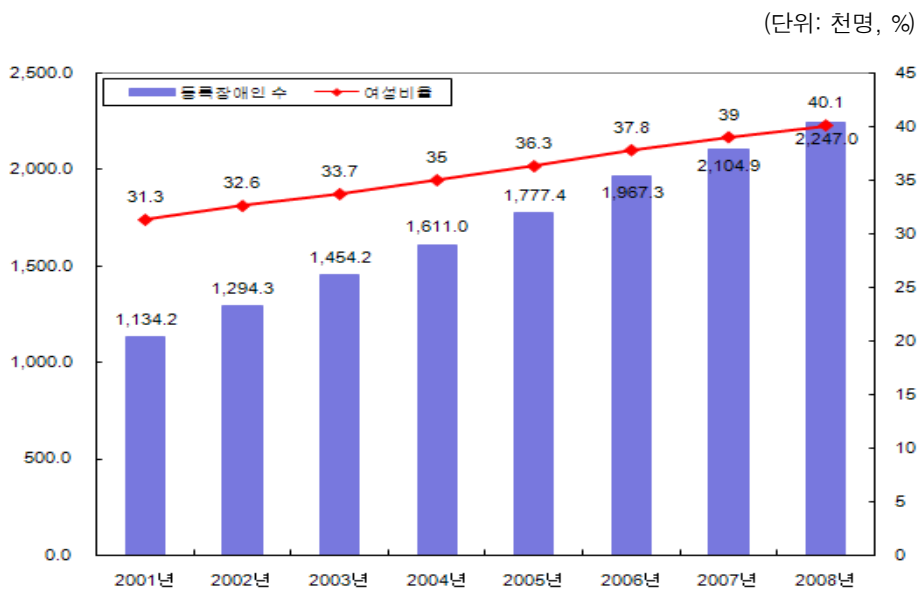
또한, 1차 자료 분석결과 얻어진 정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차원에서, 2곳의 지사와 1곳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지원, 취업알선 및 취업평가사와 직업훈련담당 책임자 등 총 9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 연구방향 설정과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 Ⅱ.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정책 동향

### 1. 장애여성의 일반적 특성

2008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총 2,246,965명이며, 이중 장애여성은 901,408명으로 40.1%를 차지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장애인 수가 성별에 관계없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장애여성인구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 현황(2001년~2008년)」.

<그림 1> 등록장애인 수 및 여성비율 변화추이

2001년 등록 장애인은 1,134,200명 수준이었지만, 2008년에는 2백 2십만 명을 넘어서 거의 두 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2001년 등록 장애인 중 장애여성의 비율이 31.3%에서 2008년에는 40.1%로 8.8% 포인트 증가하여, 장애남성보다 장애여성인구의 증가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장애여성들의 경우 장애남성에 비해 장애인등록률이 12% 포인트 정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장애인구중 장애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장애여성인구규모의 성장추세는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장애여성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2.7%인데 비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45.0%, 연소인구(14세 이하) 2.3%로 장애여성의 절반 정도가 부양인구에 속한다(표 1). 이에 비해 장애남성은 전체의 71.0%가 생산연령인구로 장애여성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하면, 장애여성의 경우 생산연령인구가 1.6% 포인트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2.6% 포인트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령화가 여성에게 있어서 장애문제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등록장애인의 성별 인구구조

(단위: 명(%))

	여 성				남 성			
	전체	연소연령	생산연령	노령인구	전체	연소연령	생산연령	노령인구
'07	828,800 (100.0)	19,780 (2.4)	449,967 (54.3)	351,053 (42.4)	1,284,089 (100.0)	36,126 (2.8)	910,132 (70.9)	337,831 (26.3)
'08	901,408 (100.0)	20,386 (2.3)	475,345 (52.7)	405,677 (45.0)	1,345,557 (100.0)	36,877 (2.7)	942,543 (71.0)	366,137 (27.3)

주 : 연소연령: 14세 이하, 생산연령: 15~64세, 노령인구: 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 현황(각년도 12월 말)」.

<표 2> 성별 학력분포

(단위: %)

	2005년						2008년		
	장애인			국민 전체			장애인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무학	28.1	7.9	16.0	7.7	2.9	5.3	28.9	7.8	16.5
초등학교	35.0	27.3	30.4	20.3	15.9	18.0	38.4	29.2	33.0
중학교	13.8	18.7	16.8	13.3	11.9	12.5	11.8	18.8	15.9
고등학교	18.0	31.6	26.2	32.6	32.2	32.2	16.4	30.1	24.4
대학 이상	5.0	14.6	10.7	26.1	37.1	32.0	4.6	14.4	1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5년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며 2008년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5, 2008)

2) 통계청(2005), 「인구총조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중 무학이 28.9%로 장애남성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67.3%에 달하는 반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여성은 4.6%로 나타났다(표 2). 이는 장애여성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고 장애남성에 비해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2.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실태<sup>6)</sup>

<표 3>을 보면, 2008년 현재 등록장애인 중 15세 이상 장애인구는 여성이 862천명, 남성이 1,210천명이고, 이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는 장애여성이 25.5%, 장애남성이 52.1%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민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50.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장애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남성의 70.9% 수준에 달하는 것이어서 장애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되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 전체 경활률
			취업	실업	계			
2000	여성	512	99	50	150	361	29.3	48.8
	남성	819	356	130	486	332	59.4	74.4
2005	여성	822	166	67	233	589	28.4 (24.7)	50.1
	남성	1,213	528	141	669	544	55.2 (52.1)	74.6
2008	여성	862	204	15	220	642	25.5	50.0
	남성	1,210	576	56	631	579	52.1	73.5

주: 2005년의 ( )는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2000, 2005, 2008).

2) 이금진(2006). 「장애인 경제활동분석」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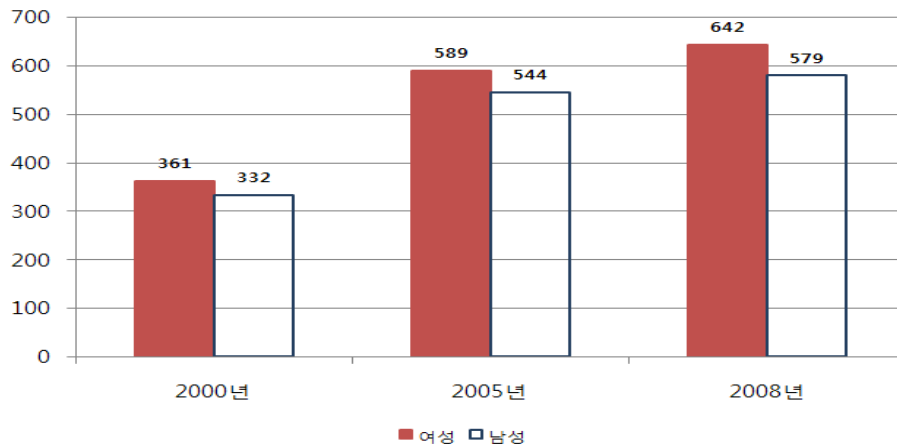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2005, 2008년).

이와 같은 장애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2). 2008년 현재 장애여성 중 비경제활동 인구는 642천명으로 2000년과 대비하여 1.8배 증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15세 이상 장애인구 규모에 있어서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348천명이나 더 적으나, 비경제활동 인구규모는 63천명이 더 많은 상황이 되고 있다.

성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를 담고 있는 <그림 3>을 보면,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3.7%로 2000년(19.3%)과 비교하면 4.4%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장애남성의 고용률(47.6%)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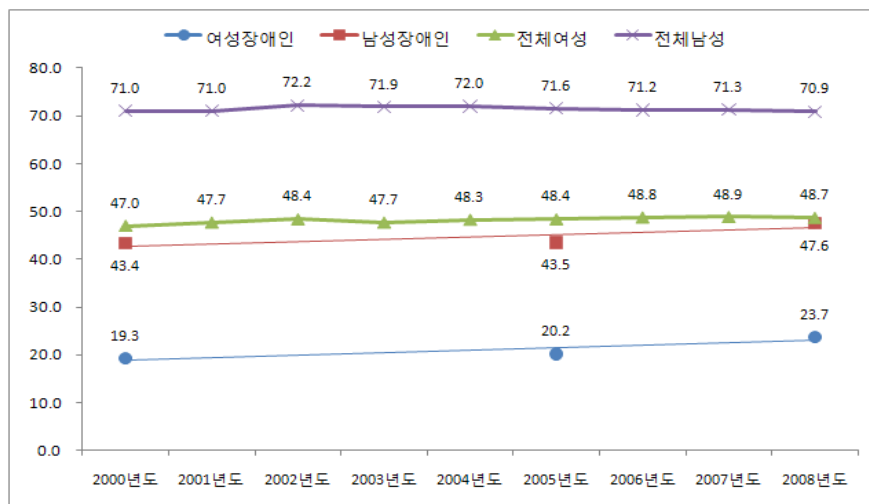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200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재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2008년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따라서 2008년과 조사결과와 2000년 및 2005년의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에는 주의가 필요함.

(단위: 천명)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2000, 2005, 2008).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2005, 2008년)

<그림 2>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2005, 2008)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2008년)

<그림 3>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한편,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표 4), 2008년 장애여성 중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43.4%는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5%, 일용근로자는 32.1%에 달하고 있다. 장애남성에 비해 장애여성 중 상용근로자는 8.4% 포인트 적은 반면 일용근로자는 두 배가 많아 장애여성 취업자의 고용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도 장애여성(24.1%)은 장애남성(2.8%)의 거의 9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lt;표 4&gt;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2005년				2008년			
		장애인		국민 전체		장애인		국민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11.7	27.0	25.6	41.1	18.5	26.9	30.2	44.2
	임시근로자	18.5	14.6	30.2	16.4	5.9	8.6	29.7	15.6
	일용근로자	21.7	18.0	11.3	12.9	32.1	16.2	9.9	8.3
비임금근로자		48.1	40.4	32.9	34.0	43.4	48.4	30.4	31.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2005, 2008)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 2008).

장애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34.8%가 단순노무종사자로 확인되었다(표 5). 장애남성 역시 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단순노무종사자가 27.5%로 가장 비중이 크나, 그 외의 직업별 분포에서 장애여성은 농림어업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장애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폭넓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lt;표 5&gt;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단위: %)

	2005년				2008년			
	장애인		국민 전체		장애인		국민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5	1.3	0.5	4.0	0.0	1.5	0.5	3.6
전문가	1.4	3.0	9.0	7.3	0.2	2.6	19.3	18.1
기술공 및 준전문가	3.4	6.0	8.0	12.0	2.7	3.0		
사무종사자	7.7	5.8	17.4	12.1	4.0	4.3	17.1	13.2
서비스종사자	12.5	5.6	21.7	6.7	16.0	7.5	18.1	6.3
판매종사자	11.1	8.2	15.2	9.1	18.4	9.4	15.5	10.8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23.6	17.7	8.0	7.1	19.5	24.9	7.0	6.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8	14.4	4.1	15.4	2.0	10.2	3.6	14.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2.9	11.9	3.7	16.6	2.4	8.9	3.3	16.5
단순노무종사자	32.2	26.1	12.4	9.7	34.8	27.5	15.5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2005, 2008)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 2008).

&lt;표 6&gt; 취업자의 성별 주당 근무시간

(단위: %)

	2005년				2008년			
	장애인		국민 전체		장애인		국민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8시간 미만 무급 가족종사자	4.9	0.6	-	-	4.5	1.4	5.3	2.4
1~35시간	36.5	27.7	16.8	9.0	45.5	36.7	14.1	8.8
36시간 이상	58.6	71.7	83.2	91.0	50.0	61.9	80.6	8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2005, 2008)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 2008).

또한 주당 근무시간을 성별로 비교해보면(표 6), 2008년의 경우 장애여성은 36시간 이상 50.0%, 1~35시간 미만 45.5%로 나타난 반면, 장애남성은 36시간 이상 61.9%, 1~35시간 미만 36.7%로, 장애여성 중 단시간 취업자 비율이 더 높다. 이를 2005년과 비교할 때, 장애여성과 남성 모두 전일제 근로자비율은 줄어들고 단시간 근로자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이 같은 주당 근무시간 분포는 국민 전체에 비해 주당 3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장애라는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장애여성은 1.8%로 장애남성(5.3%)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기회는 더욱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표 7). 특히 2005년과 비교해보면, 장애여성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자의 비율이 동일한 반면, 장애남성은 2005년 3.9%에서 2008년 5.3%로 1.4% 포인트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기회가 남성에게 더 많이 열려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lt;표 7&gt; 성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2005년			2008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예	1.8	3.9	3.1	1.8	5.3	3.9
훈련 중	0.2	0.4	0.3	0.1	0.4	0.3
아니오	98.0	95.6	96.6	98.0	94.2	9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2005, 2008).



### 3.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정책 동향

#### 1) 여성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여성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이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장애여성의 사회적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

장애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3억 52백만 원에서 2009년 9억 52백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상담지원과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 사업'과, 장애여성의 취업과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직종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사업'이 있다.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2008년부터 여성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예산을 분담하여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여성을 위한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지원 및 모성권 보호, 경제적 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총 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 유일하다. 이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기금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여성만이 아닌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2006년에 시작되어 2008년에는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10개 시도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도 시행되고 있다. 장애여성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특히 저소득·저학력 장애여성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 사업

2000년 10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인 2/9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온 것으로,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사업이 있다.

### Ⅲ. 의무고용제와 여성

#### 1. 의무고용제의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quota-levy system)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 또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을 강제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미 이행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성고가 부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함께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1.12)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의무고용제는 비록 완만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제의 정책 수혜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의무고용제를 통해 취업한 장애인 중 장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6년 12.2%, 2007년 12.8%, 2008년 13.4%로 변화하는데, 등록장애인 중 장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현재 40.1%이고 등록장애 여성 중 생산연령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2.7%(남성은 71%)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무고용제의 수혜를 받는 장애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무고용제가 성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장애여성의 낮은 의무고용 수혜율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경증위주의 장애남성의 고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의무고용제의 남성장애인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고용을 일정비율이 되도록 강제하거나 장애여성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인으로 산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의 도입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례로 현재 일본과 독일 등에서 더블카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중증신체장애인 및 중증지적장애인 1인을 경증장애인 2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근로자(주당 20-30시간 근무)인 중증신체장애인 및 중증지적장애인은 1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특정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중증장애인 2명 내지 3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복수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7)</sup>

7) 남용우(2007). 장애인고용의무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정립」 토론회 자료집.

## 2.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7.4.10 제정, 2008.4.11 시행, 이하 ‘장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의무고용제에 기초한 고용촉진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장차법이 제정됨으로서 의무고용정책과 차별금지정책이 병존하게 되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차법과 의무고용제의 병존이 기업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의무고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 존재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회평등을 지향하는 제도인 반면,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차별을 시정·보상하고 직업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내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이념과 성격은 서로 분명히 다르다. 비교법적으로도 프랑스와 독일 뿐 아니라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 두 제도를 병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제도가 각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주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 제도의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주가 동일할 경우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양 제도에 의한 보호로부터 모두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애인 그룹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장차법의 주 대상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이고, 의무고용제의 주 대상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객관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고용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임). 따라서 현행 의무고용제를 중증장애인 적용대상의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적용대상 기업, 의무고용률, 부담금, 고용보조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구조와 사업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미 이행한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영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금사업 중 장애인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장애인 고용 시 별도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주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유지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범주에는 고용환경개선, 표준사업장 지원, 고용유지사업, 고용보조금·장려금 제도, 장애인근로자용자 등이 포함되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우대된다(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는 1) 고용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구직자의 취업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통하여 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알선관리 사업’, 2) 장애인의 신체, 심리, 작업능력 등 직업적 제 특성과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장애인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직업능력평가센터운영 사업’, 3)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사업체 접근 기회 확보 및

직업적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 등이 있다.

그 외 기타사업에는 고용연구사업 및 연수사업, 기능장려사업이 포함되는데, 고용연구 사업은 연구개발(R&D)을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 및 고용관련 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고용개발,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IV.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 1.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 추이

2008년 현재 정부, 공공,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1.76%, 2.05%, 1.70%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 정부와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정부부문의 경우 2006년 적용제외 직종이 축소됨으로써 일시에 2.25%(2005년)에서 1.50%(2006년)로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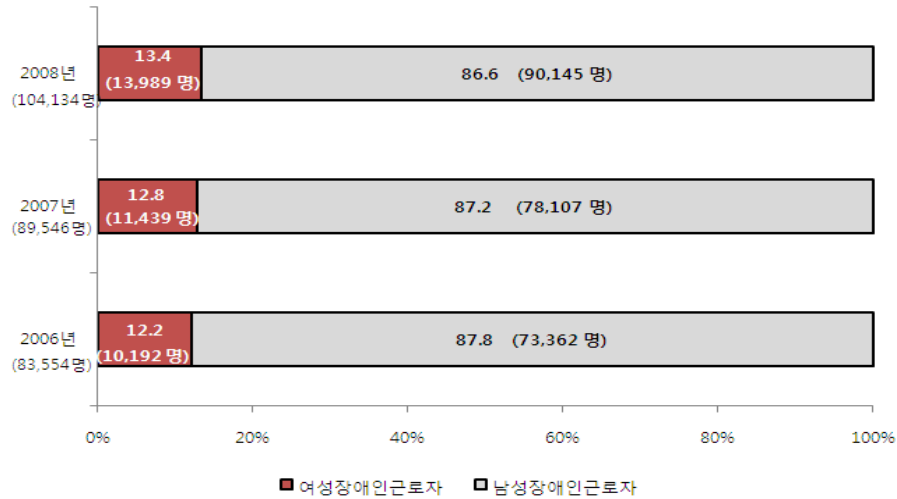
<표 8> 정부·민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정부	1.48	1.61	1.66	1.87	2.04	2.25	1.50	1.60	1.76
공공	-	-	1.94	1.66	2.01	2.49	2.16	1.96	2.05
민간	0.73	0.87	0.99	1.04	1.29	1.45	1.32	1.51	1.70

주 : '06년은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조치로 공공 및 민간부분 고용률 다소 하락  
'07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06년 136개→'07년 250개)되어 고용률 다소 하락

의무고용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2008년 총 104,134명으로 이 중 장애여성은 13.4%인 13,989명에 불과하여, 그 수혜 대상이 장애남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연도별 의무고용 장애인 중 여성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12.4%, 2007년 12.8%, 2008년 13.4%로 매년 0.4%~0.6%씩 늘어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장애인 중 여성 비중이 2006년 37.8%, 2007년 39%, 2008년 40.1%로 빠르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장애여성의 고용 증가 추세는 더딘 상황이다.



<그림 4>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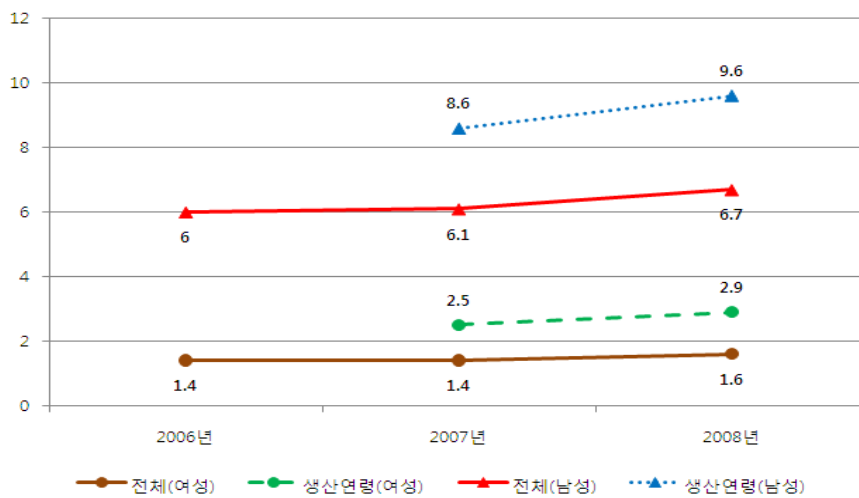
<표 9> 등록장애인의 성별 의무고용 수혜율

(단위: 명(%))

	등록장애인			생산연령 등록장애인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 08	2,246,965 (4.6)	901,408 (1.6)	1,345,557 (6.7)	1,417,888 (7.3)	475,345 (2.9)	942,543 (9.6)
' 07	2,104,900 (4.3)	820,800 (1.4)	1,284,100 (6.1)	1,360,099 (6.6)	449,967 (2.5)	910,132 (8.6)
' 06	1,967,400 (4.2)	743,700 (1.4)	73,362 (6.0)			

주: 의무고용 수혜율=의무고용 장애인/등록장애인\*100

단위: %



<그림 5> 등록장애인의 성별 의무고용 수혜율

<표 9>와 <그림 5>를 통해, 의무고용제도의 수혜를 받는 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4.6%로 매우 적은 수에 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여성의 수혜율은 1.6%로 장애남성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령층 인구비중이 높은 장애여성의 인구특성을 감안하여 생산연령인구만을 모집단으로 하여 의무고용 수혜율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장애여성은 2.9%로 장애남성 9.6%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현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취업자 78만명 중에 장애여성이 20만4천명, 장애남성이 57만6천명으로, 등록장애여성 취업자 중 의무고용제로 취업된 비율은 6.9%에 불과해 장애남성 15.7%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그 자체로도 장애인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지만, 특히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2. 기관특성별 분포

기관특성별로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정부기관의 의무고용 장애인은 총 14,470명이고 그 중 장애여성은 2,404명(16.6%)으로 장애남성의 1/5 수준이다(표 10). 장애여성 종사자 비중은 타 기관에 비해 교육청이 24.3%로 가장 높다. 이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여성비율이 13.0%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2006년 대비 장애여성 비율 증가폭에 있어서도 0.4% 포인트의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표 10> 정부기관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 추이

(단위: 명(%))

	'06			'07			'08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2,455 (100.0)	1,851 (14.9)	10,604 (85.1)	13,142 (100.0)	2,106 (16.0)	11,036 (84.0)	14,470 (100.0)	2,404 (16.6)	12,066 (83.4)
중앙행정 기관	3,322 (100.0)	418 (12.6)	2,904 (87.4)	3,488 (100.0)	492 (14.1)	2,996 (85.9)	3,774 (100.0)	490 (13.0)	3,284 (87.0)
헌법 기관	264 (100.0)	30 (11.4)	234 (88.6)	311 (100.0)	40 (12.9)	271 (87.1)	341 (100.0)	45 (13.2)	296 (86.8)
지방자치 단체	5,518 (100.0)	751 (13.6)	4,767 (86.4)	5,793 (100.0)	840 (14.5)	4,953 (85.5)	6,553 (100.0)	944 (14.4)	5,609 (85.6)
교육청	3,351 (100.0)	652 (19.5)	2,699 (80.5)	3,550 (100.0)	734 (20.7)	2,816 (79.3)	3,802 (100.0)	925 (24.3)	2,877 (75.7)

자료: 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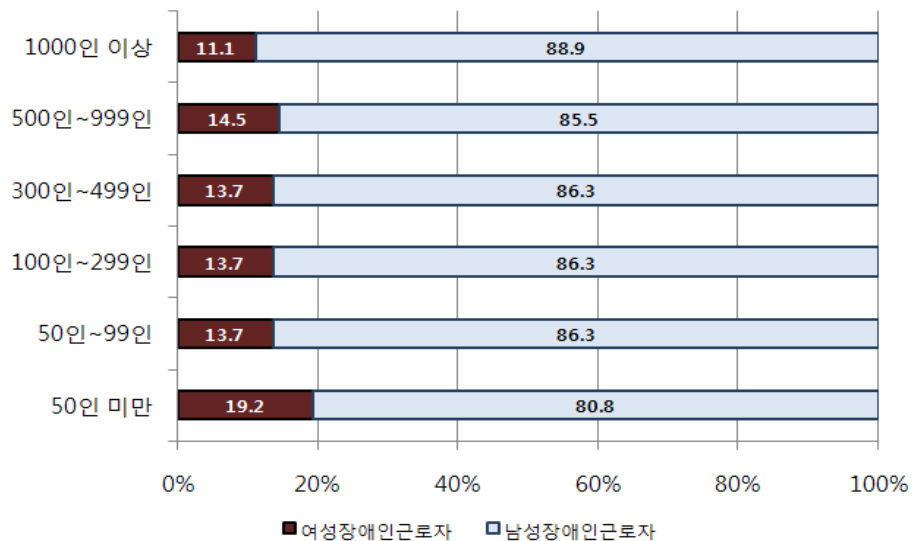
한편, 2008년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근로자 5,899명 중 여성은 7.4%인 436명에 그쳐 장애여성의 비중은 정부기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11). 장애여성 근로자 비중은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여성 비율은 각각 9.0%, 9.7%로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공기업은 4.1%에 불과하다.

<표 11> 공공기관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 추이

(단위: 명(%))

	'06			'07			'08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3,838 (100.0)	274 (7.1)	3,564 (92.9)	5,650 (100.0)	446 (7.9)	5,204 (92.1)	5,899 (100.0)	436 (7.4)	5,463 (92.6)
공기업	1,997 (100.0)	79 (4.0)	1,918 (96.0)	2,148 (100.0)	92 (4.3)	2,056 (95.7)	2,168 (100.0)	89 (4.1)	2,079 (95.9)
준정부 기관	176 (100.0)	9 (5.1)	167 (94.9)	1,885 (100.0)	180 (9.5)	1,705 (90.5)	1,980 (100.0)	178 (9.0)	1,802 (91.0)
기타 공공기관	1,665 (100.0)	186 (11.2)	1,479 (88.8)	1,617 (100.0)	174 (10.8)	1,443 (89.2)	1,751 (100.0)	169 (9.7)	1,582 (90.3)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업체 규모별로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 <그림 7>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된 장애여성 비중이 11.1%로 가장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해 대기업에 고용될 기회에서 더욱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사업체규모별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2008년)

산업별 분포를 보면(표 12), 장애여성과 남성 모두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나, 그 외 산업에서는 일정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장애여성의 경우 제조업(2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1%) 순으로 종사하고 있고, 장애남성은 제조업 다음으로 운수업(14.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3.7%)의 순서이다. 상위 3개 산업의 비중을 합하면 장애여성이 64.1%로, 59.4%인 장애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여성이 특정 산업에 더 편중되어 종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lt;표 12&gt; 산업별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2008년)

(단위: 명(%))

	전체	여성	남성
농업, 임업 및 어업	123(0.1)	17(0.1)	106(0.1)
광업	91(0.1)	2(0.0)	89(0.1)
제조업	27,354(30.5)	3,034(26.2)	24,320(3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77(0.8)	18(0.2)	659(0.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30(0.6)	28(0.2)	502(0.6)
건설업	4,019(4.5)	196(1.7)	3,823(4.9)
도매 및 소매업	5,597(6.2)	603(5.2)	4,994(6.4)
운수업	11,712(13.1)	308(2.7)	11,404(14.6)
숙박 및 음식점업	1,292(1.4)	402(3.5)	890(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54(4.3)	462(4.0)	3,392(4.3)
금융 및 보험업	3,860(4.3)	533(4.6)	3,327(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89(1.4)	175(1.5)	1,114(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7(3.4)	186(1.6)	2,821(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420(15.0)	2,756(23.8)	10,664(1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56(1.8)	252(2.2)	1,404(1.8)
교육 서비스업	3,168(3.5)	356(3.1)	2,812(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296(5.9)	1,637(14.1)	3,659(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35 (0.6)	47(0.4)	488(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165(2.4)	569(4.9)	1,596(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미 분류된 자가소비 생산활동	8(0.0)	1(0.0)	7(0.0)
국제 및 외국기관	11(0.0)	3(0.0)	8(0.0)
계	89,664(100.0)	11,585(100.0)	78,079(100.0)

주: 정부기관 의무고용장애인 제외

직업별 의무고용 분포에는 장애여성과 남성 간 더욱 뚜렷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데(표 13), 장애여성은 단순노무직(44.2%), 사무종사자(18.6%), 서비스 종사자(16.8%) 순으로 고용되어 있는 반면, 장애남성은 단순노무직(2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8.6%), 사무종사자(18.3%) 순서여서 장애여성에 비해 단순노무직 편중 현상이 심하지 않다. 이렇듯 전문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나머지 직업에서 장애여성 종사자 비중이 장애남성의 절반 내지 그 이하 수준으로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해 낮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장애여성에게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하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직업별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2008년)

(단위: 명(%))

	전체	여성	남성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478(1.6)	53(0.5)	1,425(1.8)
전문가	4,064(4.5)	394(3.4)	3,670(4.7)
기술공 및 준전문가	7,569(8.4)	287(2.5)	7,282(9.3)
사무종사자	16,428(18.3)	2,159(18.6)	14,269(18.3)
서비스종사자	10,634(11.9)	1,941(16.8)	8,693(11.1)
판매종사자	1,263(1.4)	121(1.0)	1,142(1.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27(0.3)	14(0.1)	213(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5,284(17.0)	784(6.8)	14,500(18.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92(11.5)	714(6.2)	9,578(12.3)
단순노무종사자	22,425(25.0)	5,118(44.2)	17,307(22.2)
계	89,664(100.0)	11,585(100.0)	78,079(100.0)

주: 정부기관 의무고용장애인 제외

### 3. 개인특성별 분포

2008년 현재 연령집단별, 성별 의무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분포를 보면(표 14), 40대가 31.2%로 가장 높고 이를 정점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으로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장애여성은 20대 근로자 비중이 17.8%로 같은 연령대의 장애남성(8.0%) 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장애남성은 40대 근로자가 32.2%로 장애여성(24.6%)에 비해 7.6%포인트나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 분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30대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40대 이상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이 유사한 양태를 보이지만, 장애여성은 20대 비중이 2004년 26.4%에서 2008년 17.8%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반면 장애남성은 20대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 또한 50대 장애여성 비중은 2004년 16.4%에서 2008년 24.2%로 7.8% 늘어난 반면 장애남성은 22.1%에서 25.6% 증가하여 장애여성보다 그 폭이 크지 않다. 60대 이상의 경우 장애여성과 장애남성 비중이 모두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lt;표 14&gt; 연령별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

(단위: 명(%))

		계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04	전체	46,674 (100.0)	219 (0.5)	5,052 (10.8)	12,481 (26.7)	15,824 (33.9)	10,013 (21.5)	3,085 (6.6)
	여성	5,260 (100.0)	95 (1.8)	1,389 (26.4)	1,340 (25.5)	1,322 (25.1)	865 (16.4)	249 (4.7)
	남성	41,414 (100.0)	124 (0.3)	3,663 (8.8)	11,141 (26.9)	14,502 (35.0)	9,148 (22.1)	2,836 (6.8)
'05	전체	55,009 (100.0)	217 (0.4)	5,912 (10.7)	14,302 (26.0)	18,523 (33.7)	12,226 (22.2)	3,829 (7.0)
	여성	6,340 (100.0)	89 (1.4)	1,598 (25.2)	1,684 (26.6)	1,514 (23.9)	1,141 (18.0)	314 (5.0)
	남성	48,669 (100.0)	128 (0.3)	4,314 (8.9)	12,618 (25.9)	17,009 (34.9)	11,085 (22.8)	3,515 (7.2)
'06	전체	67,261 (100.0)	220 (0.3)	6,994 (10.4)	16,528 (24.6)	22,098 (32.9)	15,624 (23.2)	5,797 (8.6)
	여성	8,067 (100.0)	91 (1.1)	1,811 (22.4)	2,003 (24.8)	1,993 (24.7)	1,578 (19.6)	591 (7.3)
	남성	59,194 (100.0)	129 (0.2)	5,183 (8.8)	14,525 (24.5)	20,105 (34.0)	14,046 (23.7)	5,206 (8.8)
'07	전체	76,404 (100.0)	207 (0.3)	7,531 (9.9)	17,475 (22.9)	24,646 (32.3)	18,686 (24.5)	7,859 (10.3)
	여성	9,333 (100.0)	94 (1.0)	1,875 (20.1)	2,126 (22.8)	2,339 (25.1)	2,034 (21.8)	865 (9.3)
	남성	67,071 (100.0)	113 (0.2)	5,656 (8.4)	15,349 (22.9)	22,307 (33.3)	16,652 (24.8)	6,994 (10.4)
'08	전체	89,664 (100.0)	196 (0.2)	8,279 (9.2)	19,438 (21.7)	27,987 (31.2)	22,812 (25.4)	10,953 (12.2)
	여성	11,584 (100.0)	73 (0.6)	2,061 (17.8)	2,488 (21.5)	2,853 (24.6)	2,803 (24.2)	1,307 (11.3)
	남성	78,080 (100.0)	123 (0.2)	6,218 (8.0)	16,950 (21.7)	25,134 (32.2)	20,009 (25.6)	9,646 (12.4)

주: 정부기관 의무고용장애인 제외

&lt;표 15&gt; 장애정도별 의무고용 장애인의 성별 분포

(단위: 명(%))

	전체	중증	경증	여성		남성	
				중증	경증	중증	경증
2004	46,674	8,206 (17.6)	38,468 (82.4)	1,848 (4.0)	3,412 (7.3)	6,358 (13.6)	35,056 (75.1)
2005	55,009	10,332 (18.8)	44,677 (81.2)	2,300 (4.2)	4,040 (7.3)	8,032 (14.6)	40,637 (73.9)
2006	67,261	12,417 (18.5)	54,844 (81.5)	2,762 (4.1)	5,305 (7.9)	9,655 (14.4)	49,539 (73.7)
2007	76,404	13,704 (17.9)	62,700 (82.1)	2,998 (3.9)	6,335 (8.3)	10,706 (14.0)	56,365 (73.8)
2008	89,664	15,933 (17.8)	73,731 (82.2)	3,557 (4.0)	8,028 (9.0)	12,376 (13.8)	65,703 (73.3)

주: 정부기관 의무고용장애인 제외

장애정도별로 분류할 경우, 의무고용 중증 장애인은 2008년 현재 15,933명으로 전체 의무고용 장애인의 17.8%에 불과하다(표 15). 이는 경증 장애인(73,731명) 의무고용률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중증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정도별 성별로 나눈 4개 집단의 비중은 경증 장애남성(73.3%) > 중증 장애남성(13.8%) > 경증 장애여성(9.0%) > 중증 장애여성(4.0%) 순으로, 경증 장애인보다 중증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장애여성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다.

## V.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2008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별 수혜 현황 및 성 형평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

#### 1) 성별 수혜 분석

<표 16>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의 성별 수혜분석

(단위: 백만원(%))

		사업비	성별 수혜액	
			여성	남성
전 체		147,991(100.0)	42,454(28.7)	105,537(71.3)
사업자 지원 사업	○ 장애인 고용장려금	115,353(100.0)	31,544(27.3)	83,809(72.7)
	○ 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용지원	381(100.0)	68(17.9)	313(82.1)
	○ 표준사업장설립 지원	6,786(100.0)	3,225(47.5)	3,561(52.5)
	○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2,900(100.0)	915(31.5)	1,985(68.5)
	○ 보조공학기기 지원	5,500(100.0)	2,309(42.0)	3,191(58.0)
	계	130,920(100.0)	38,061(29.1)	92,859(70.9)
장애인 지원 사업	○ 장애인 창업	· 영업장소 전대	5,598(100.0)	1,901(34.0)
		· 창업자금 융자	2,473(100.0)	390(15.8)
	○ 장애인근로자용자	9,000(100.0)	2,102(23.4)	6,898(76.6)
	계	17,071(100.0)	4,393(25.7)	12,678(74.3)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유지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기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 사업비로 사용된 예산은

총 1,479억 91백만원으로, 이 중 여성은 28.7%에 해당하는 424억 54백만원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이는 본 사업 예산 중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예산만이 장애여성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같이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장애 여성이 받은 수혜율은 29.1%이며, 장애인 개인이 직접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여성이 기금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비율은 25.7%로 장애인 지원사업에서의 여성 수혜율이 다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사업별로는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사업에서의 여성 수혜율이 4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업장소 전대사업으로 34.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창업자금 융자사업에서의 여성 수혜율은 1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2) 성 형평성 진단

정책 수혜대상 모집단에서의 장애여성 비율(40.1%)을 감안하여 본 사업 집행의 성 형평성을 진단해보면(표 17),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의 여성 수혜율은 28.7%로 모집단 여성 비율보다 11.4% 포인트 낮고, 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여성의 기금 수혜율은 등록장애인의 여성비율 대비 11.0% 포인트가 낮고, 장애인 지원사업에서는 14.4%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장애인 중 노령인구집단비율이 장애여성에게서 장애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의 성별 비율(여성 33.5%, 남성 66.5%)을 기준으로 수혜율을 진단해 보면(표 19), 장애여성의 기금 수혜율은 생산연령인구의 여성비율 대비 4.8% 포인트가 낮다. 사업종류별로 보면, 사업자 지원사업은 4.4% 포인트가, 장애인 지원 사업은 7.8% 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7>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의 성 형평성 분석

(단위: %)

		기금 수혜율		등록장애인 대비		생산연령인구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 체		28.7	71.3	-11.4	11.4	-4.8	4.8
사업자 지원 사업	○ 장애인 고용장려금	27.3	72.7	-12.8	12.8	-6.2	6.2
	○ 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용지원	17.9	82.1	-22.2	22.2	-15.6	15.6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47.5	52.5	7.4	-7.4	14.0	-14.0
	○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31.5	68.5	-8.6	8.6	-2.0	2.0
	○ 보조공학기기 지원	42.0	58.0	1.9	-1.9	8.5	-8.5
	계	29.1	70.9	-11.0	11.0	-4.4	4.4
장애인 지원 사업	○ 장애인 창업	34.0	66.0	-6.1	6.1	0.5	-0.5
	· 영업장소 전대						
	· 창업자금 융자	15.8	84.2	-24.3	24.3	-17.7	17.7
	○ 장애인근로자용자	23.4	76.6	-16.7	16.7	-10.1	10.1
계		25.7	74.3	-14.4	14.4	-7.8	7.8

따라서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부문에서 기금 집행에서의 성 형평성은 당초 기금 수혜율에서 나타난 남성 우위의 성간 격차처럼 두드러진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남성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자 지원 사업이 장애인 지원 사업보다 성 형평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촉진법 제30조)이나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동법 22조)과 같이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사업(동법 제21조)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가 법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가 법률적으로 명시된 사업들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사업은 여성 우대조치로 인해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만큼 여성 우대조치로서의 기능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중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은 여성 우대조치가 법률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여성에게 충분한 수혜가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방식 개선이 요망된다.

<표 18> 장애인 창업 지원 성별 수혜 분석

(단위: 명(%), 백만원(%))

지원내용	연인원 및 총 지급액	여성	남성
전체	인원	145(100.0)	37(25.5)
	지원금	8,071(100.0)	2,291(28.4)
영업장소 전대 지원	인원	81(100.0)	26(32.1)
	지원금	5,598(100.0)	1,901(34.0)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인원	64(100.0)	11(17.2)
	지원금	2,473(100.0)	390(15.8)

한편, 사업자 지원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 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장애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취약한 경제적 능력을 보완해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전대 지원'사업이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에서 가장 성 형평성이 높게 나타난 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창업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의 영업장소를 빌려주는 영업장소 전대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여성의 지원금 수혜율은 34.0%에 달한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 없이 장애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창업자금을 융자받도록 되어있는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사업에의 여성 수혜율은 15.8%로 영업장소 전대 지원사업 여성수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취약한 경제력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갖춰진 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은 성 평성이 높은 사업으로 나타난 데 비해 그렇지 못한 창업자금 융자사업은 가장 성 형평성이 낮은 사업으로 나타나,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뒷받침의 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 1) 성별 수혜 분석

2008년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비로 사용된 예산은 총 39억 89백만원으로, 이 중 여성은 32.2%에 해당하는 12억 84.5백만원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이는 본 사업 예산 중 3분의 1에 상당하는 예산이 장애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장애여성의 수혜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미취업 고학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고용'사업으로 장애 여성이 받은 수혜율은 45.5%에 달한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기관에 알선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알선 지원금' 사업 또한 장애여성의 수혜율이 44.8%에 달하는 높은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세부내역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로 인해 장애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시험고용'사업 보다 10배 이상 예산 규모가 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29.7%)이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사업(28.6%)은 장애여성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9> 2008년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의 성별 수혜분석

(단위 : 백만원(%))

	총 집행액	사업비	성별 수혜액	
			여성	남성
전 체	3,989	3,989 (100.0)	1,284.5 (32.2)	2,704.5 (67.8)
○ 취업알선사업	1,959	1,959 (100.0)	705.2 (36.0)	1,253.8 (64.0)
-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사업관리*	1,814.2	1,814.2 (100.0)	636.8 (35.1)	1,177.4 (64.9)
- 시험고용	116	116 (100.0)	53 (45.5)	63 (54.5)
- 취업알선 지원금	28.8	28.8 (100.0)	12.9 (44.8)	15.9 (55.2)
○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	830	830 (100.0)	238 (28.6)	592 (71.4)
○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1,200	1,200 (100.0)	356 (29.7)	844 (70.3)

주: \*사업체 고용의무 이행 지도 예산 포함

### 2) 성 형평성 진단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의 예산 집행결과를 토대로 성별 수혜의 형평성을 분석해보면(표 20), 등록장애인(여성 40.1%, 남성 59.9%)을 모집단으로 상정할 때, 취업알선 사업 전체에

대해 장애여성은 모집단에서의 여성비율보다 7.9% 포인트 더 낮은 수혜율인 32.2%를 보이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취업알선사업에서의 여성 수혜율은 등록장애여성 모집단 대비 4.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알선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시험고용'사업(5.4% 포인트)과 '취업알선 지원금'사업(4.7% 포인트)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사업(-11.5% 포인트)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10.4% 포인트)은 취업알선사업에 비해 여성의 수혜율이 등록장애여성 모집단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33.5%)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취업알선사업에서의 여성 수혜율은 모집단 대비 1.3% 포인트의 격차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취업알선사업은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에 비해 성 형평성있게 집행되었으며, 장애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비교적 형평성 있게 집행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처럼 취업알선사업이 성 형평성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할 때 35%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하는 노동부의 지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의 성 형평성 분석

(단위: %)

	기금 수혜율		등록장애인 대비		생산연령인구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 체	32.2	67.8	-7.9	7.9	-1.3	1.3
○ 취업알선사업	36.0	64.0	-4.1	4.1	2.5	-2.5
-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사업관리	35.1	64.9	-5.0	5.0	1.6	-1.6
- 시험고용	45.5	54.5	5.4	-5.4	12.0	-12.0
- 취업알선 지원금	44.8	55.2	4.7	-4.7	11.3	-11.3
○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	28.6	71.4	-11.5	11.5	-4.9	4.9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29.7	70.3	-10.4	10.4	-3.8	3.8

### 3. 직업능력개발사업

#### 1) 성별 수혜 분석

<표 21>은 2008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에 배분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집행된 예산 152억 24백만원 중 44억 69백만원은 장애여성에게 107억 55백만원은 장애남성에게 집행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장애여성의 수혜율은 29.4%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성별 수혜율을 보면,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집행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의 경우 장애여성의 수혜율은 27.6%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전체 평균 여성 수혜율(29.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성격이 약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를 제외할 경우 여성 수혜율은 23.1%에 불과하다. 여성 수혜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으로 36.9%에 달하며, 가장 낮은 여성 수혜율을 보이는 사업은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으로 여성 수혜율은 불과10.9%에 지나지 않는다.

<표 21> 2008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수혜분석

(단위 : 백만원(%))

	총 집행액	사업비	성별 수혜액	
			여성	남성
계	15,224	15,224(100.0)	4,469(29.4) <b>4,046(26.6)</b>	10,755(70.6) <b>11,178(73.4)</b>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9,400	9,400(100.0)	2,594(27.6) <b>2,171(23.1)</b>	6,806(72.4) <b>7,229(76.9)</b>
○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	110	110(100.0)	12(10.9)	98(89.1)
○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	2,634	2,634(100.0)	972(36.9)	1,662(63.1)
○ 특수학교 지원	149	149(100.0)	53(35.6)	96(64.4)
○ 개별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48	148(100.0)	42(28.4)	106(71.6)
○ 기능경기대회 지원	2,783	2,783(100.0)	796(28.6)	1,987(71.4)

주: 진한 글씨는 재활훈련을 제외한 기능훈련 참여자의 성별 비율을 적용한 것임.

## 2) 성 형평성 진단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사업 전체에서의 여성 수혜율은 등록장애인(여성 40.1%, 남성 59.9%)을 모집단으로 할 경우, 10.7% 포인트 낮고, 등록장애인 중 생산연령 인구집단을 모집단으로 할 경우에는 4.1% 포인트가 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취업알선 사업이 성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성 불균형성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에서 재활훈련 참가자를 제외할 경우 여성 수혜율이 낮아져 성 불균형성은 3개 사업 중 가장 커지게 된다.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세부사업별로 성 형평성을 살펴보면,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성 형평성을 보이는 반면,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의 여성수혜율은 10.9%로 등록장애인 중 여성비율보다 그 수혜율이 29.2% 포인트나 낮아 남성중심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여성 33.5%, 남성 66.5%)를 준거기준으로 성 형평성을 점검해보면, 특수학교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형평성을 보인다. 특히, 특수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보다 엄밀한 의미의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학교 고등부 학생 중 여학생비율(33.7%)을 기준으로 산출



하더라도 모집단의 성별 분포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은 생산연령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더라도 장애여성 수혜율이 22.6% 포인트나 낮아,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장애여성의 교육기회가 소외되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은 실제 기능훈련참여자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성 수혜율이 10.4% 포인트가 더 낮게 나타나, 성별 형평성이 이루어진 사업집행이라 하기 어렵다. 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이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보다 성 형평성이 더 낮을 뿐 아니라, 30% 이상 여성 직업훈련생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노동부 지침에도 미달하는 현실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 형평성 분석

(단위: %)

	기금 수혜율		등록장애인 대비		생산연령인구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계	29.4 (26.6)	70.6 (73.4)	-10.7 (-13.5)	10.7 (13.5)	-4.1 (-6.9)	4.1 (6.9)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27.6 (23.1)	72.4 (76.9)	-12.5 (-17.0)	12.5 (17.0)	-5.9 (-10.4)	5.9 (10.4)
○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	10.9	89.1	-29.2	29.2	-22.6	22.6
○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	36.9	63.1	-3.2	3.2	3.4	-3.4
○ 특수학교 지원	35.6	64.4	-4.5	4.5	2.1	-2.1
○ 개별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28.4	71.6	-11.7	11.7	-5.1	5.1
○ 기능경기대회 지원	28.6	71.4	-11.5	11.5	-4.9	4.9

주 : ( )안은 재활훈련을 제외한 기능훈련에서의 성별 분포를 적용한 것임.

## VI. 결론 및 성 형평성 제고방안

### 1.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제기되고 있는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용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별 수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 형평성을 진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은 생산연령인구집단을 모집단으로 하더라도 장애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무고용제의 남성 편향성은 장애인 고용률의 성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 지난 3년간(2006~2008) 등록장애인 중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은 1.4%에서 1.6%로 0.2% 포인트 증가한데 비해 장애남성은 6.0%에서 6.7%로 0.7% 포인트 증가하였고, 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해도 2007년 여성 2.5%, 남성 8.6%에서 2009년 여성 2.9%, 남성 9.6%로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 2008년 현재 등록된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3.7%로 남성(47.6%)의 절반수준이고, 등록장애인 취업자중 의무고용으로 취업된 비율은 여성 6.9%, 남성 15.7%로 장애여성들이 장애남성만큼 의무고용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낮은 취업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여성에게 다소 불이익한 면은 있으나 성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여성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고용제의 운영결과가 성 형평성을 상실하고 장애남성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시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더욱이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사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의무고용제의 수혜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장애여성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때만이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집행 그 자체가 성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금사업이 노동시장에서 성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중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고용촉진기금사업 중 일부 남성 편향적 집행을 보인 사업들은 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요 사업들이며, 기금 사업에서 장애여성의 수혜율이 낮은 원인은 장애여성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미비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세부사업들 중에 남성 편향적으로 집행된 사업들은 적게는 25억에서 많게는 94억에 이르는 큰 예산의 사업들이었고, 여성 편향적으로 집행된 사업들의 경우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사업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68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배정된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사업에서 여성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 장애인과 함께 장애여성을 우대한 법률 조항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창업지원 사업들 중 담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영업장소 전대사업은 수혜율에 있어서 비교적 성 형평성을 보여준데 반해, 제도적 개입 없이 장애인 개인의 여력에 맡겨놓은 창업자금 융자사업에서는 성별 격차가 크게 드러났다. 이는 장애 여성의 창업에 대한 욕구가 결코 작지 않으나, 이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여성의 고용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업능력개발기회가 장애남성에 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에서 장애여성에게 불이익한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장애남성에 비해 학력수준이 월등히 낮은 장애여성들에게 있어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충분한 훈련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예산의 61.7%를 차지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집행 실적을 보면, 기능훈련 수료생 중 여성비율은 27.6%(기능훈련 23.1%)로 노동부 권고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의 여성비율은 10.9%에 불과하다. 이 두 사업은 민간직업훈련기관이나 개별적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비해 훈련생 규모가 많고, 상대적으로 취업률도 높다는 점에서 장애여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직종선정평가에 응시한 장애여성의 학력을 보면, 초급대학 이상이 32.2%로 장애남성(27.7%)보다 오히려 더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의 기능훈련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음에도 이처럼 소수의 고학력 장애여성들만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낮은 학력수준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욕구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다수의 장애여성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갖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들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실어 줄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성 형평성 제고방안

앞서 논의된 결론을 토대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단순히 기금집행에서의 성 형평성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의무고용제 수혜의 성별 격차 해소

의무고용제의 수혜가 경증장애남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일자리 강제 할당’의 의미를 가지는 의무고용제에서도 장애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과, 장애여성의 노동권의 보장은 그녀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우선 현행 의무고용제의 개선이 절실하다.

- **의무고용 장애여성 채용목표제 실시**

채용목표제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목표제 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여성의 비율이 1%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동등한 조건일 경우에 장애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의무조항으로 신설한다.

- **장애여성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지난 9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증장애여성(9.0%), 중증 장애여성(4.0%)이 중증 장애남성(13.8%)보다도 고용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블카운트제도에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여성을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범주의 조정**

장차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증장애남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의무고용제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객관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고용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을 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원화된 의무고용제 운영 실적 통합관리**

의무고용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체 의무고용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 인지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등록장애인 중 생산연령인구의 여성비율을 성 형평성 점검 기준으로 활용

기금사업 집행 분석결과, 장애여성에 대한 우대가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남성편향성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여성 우대조항의 우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객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에 대한 성별 보고체계 구축 및 실적 관리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 취업알선사업,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 개 사업부문에서 추진되는 단위 사업별로 집행실적을 성별로 보고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별 분리 통계가 산출되어야만 기금의 집행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여성을 중시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장애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3)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기능훈련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훈련기회 확대

-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장애여성 기능훈련 확대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제도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이지만, 노동부의 30% 여성훈련생 지침도 유명무실해졌을 뿐 아니라, 지역 센터별로도 장애여성 비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요청된다<sup>8)</sup>.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개별 센터의 특성에 맞는 장애여성 기능훈련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각 센터가 센터의 특성과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여성의 기능훈련기회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직종 다양화와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수요 발굴 노력 강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기계, 전자, IT 등 국가기간산업 중심의 훈련종목들은 전통적으로 장애남성의 선호가 높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기반산업 훈련종목과 함께 여성들의 선호가 높고 구인 수요가 많은 훈련 직종을 발굴하여 장애여성들의 직업훈련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여성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8) 2003년 등록장애인중 여성은 전체의 33.7%인 489,852명으로 2008년의 등록장애여성 901,408명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노동부의 지침이 처음 시행된 2003년에는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장애여성비율은 2003년 31.4%에 달했으며, 2004년도 32.9%에 달했다.

- **기능훈련을 위한 파견교육장 운영으로 장애여성의 접근성 제고**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기능훈련은 최장 2년까지 센터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며 훈련을 받게 된다. 이처럼 오랜 기간 센터 기숙사에 머물며 훈련을 받는 것은 장애여성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여성들이 출·퇴근하면서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세권 등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곳에 파견교육장을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4)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장애여성전용 훈련과정 설치 및 통합교육지원체계 구축**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은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직종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증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 11개 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비율은 13.3%에 불과하고 이 중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수를 제외하면 10개의 한국폴리텍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처럼 남학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장애여성이 통합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sup>9)</sup>, 우선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을 장애여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기능사과정에는 장애여성전용과정 개설하는 한편, 산업학사과정에는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환경 및 학습지원체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증장애여성들에게 다양한 전문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sup>10)</sup>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 후에는 전국에 4개 권역별로 공공직업훈련기관 중 1개소씩을 지정하여 장애여성의 통합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하도록 한다.

#### **5) 장애여성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취업과 직업훈련 등 장애여성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낮은 학력수준이다.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기능훈련생 선발에 있어서 학력제한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고학력 여성이 주로 기능훈련에 응시하는 것은 대다수의 장애여성들이 거의 유일한 사회와의 교류통로인 학교교육마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가족의 보호아래 사회와 고립된 채<sup>11)</sup> 성장함으로써 직업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지식과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장애인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정원의 5% 이상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10) 2008년 현재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장애여성의 중도탈락률은 13.6%에 달하며, 이는 장애남성의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11) 2008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경우 월3회 이하로 외출하는 비율이 16.3%에 달하고 매일 외출하는 비율은 57.2%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장애남성은 73.3%가 매일 외출하며, 월 3회 이하 외출하는 비율은 9.5%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9).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등의 심리적 위축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생애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직업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장애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6) 무담보 창업자금 융자 지원제도 마련 및 창업지원 전담부서 신설


창업자금 융자사업은 장애인 개인의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여건이 더욱 열악한 장애여성들은 장애남성에 비해 창업자금 융자를 받는 비율(17.2%)도 낮고 융자금액(15.8%)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담보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담보 창업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강구하고, 창업자금 융자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소규모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장애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장소 전대사업과 같이 장애여성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줌으로써 장애여성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특수교육통계.  
 남용우(2007). 장애인고용의무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정립 토론회 자료집.  
 변용찬 외(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2009).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 현황(각년도).  
 통계청(2005). 인구총조사.  
 통계청 (2000, 2005, 2008). 경제활동인구연보.







# 사회재정치출의 성인지 분석 토론문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정성균**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장 명 숙((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1.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오래된 사회적 차별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책이 수립될 때 당사자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당사자의 존재감이나 현장성이 제외되었고 이는 수혜 대상자로만 취급되는 한계를 드러내며 오늘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성인지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지닌 각기 다른 생물학적인 경험의 차이와 사회 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요구나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남성중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책, 또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통계 등에 있어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다시 검토하자 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랫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것에 대하여 여성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시각을 바탕으로 있는 사안을 바라보고 검토해 보자는 관점을 말한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장애인과 우리사회 다양한 소수자들에게도 그 논리가 당연히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성장애인과 소수자 등은 종종 그 관점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과 결정, 평가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여성 사이의 차이도 차별로 드러나기도 한다.

장애인 정책은 주로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에 비해 남성이라는 이유로 덜 차별받고, 여성장애인은 더 빈곤하다. 그로인하여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에서의 차별도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장애인 정책 역시 성인지적 관점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장애인을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은 성별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차별 당했던 많은 영역이 재분석 되어야 하며 차별이 시정되어 실제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해결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바라건 데 이러한 정책포럼 등을 통하여 그 간극이 좁혀지길 기대한다.

## 2.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실태와 차별

### 1) 교육과 여성장애인

- 무학 : 28.9% : 남성장애인의 4배
- 초등학교 이하 : 67.3%
- 대학이상 : 4.6%

→ 교육은 단순히 지식에 관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교육에서의 소외는 개인 삶의 주기에선 매우 치명적인 현실로 이어진다.

### 2) 노동과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가 인구 : 25.5% (남성장애인 52.1%)
- 여성장애인 고용율 23.7%

→ 일하고 싶은 욕구는 모든 개인의 기본권이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취업의 기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3) 그 외 생애주기별 실태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한 교육과 노동에 대한 소외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의 연속성에서 감당해야 하는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로 점철된다. 이후 결혼과 비혼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현실과, 가족 속에서의 자리, 노후에 대한 것과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의 실제들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실태와 차별들이 함께 하며 이는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 3. 여성장애인의 정책동향

### 1) 관련부서

여성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 사업·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여성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자조모임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부의 입장을 담아 인권적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여성장애인의 예산 확대 필요

여성장애인이 고려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2) 의무고용

2008년 총 의무고용 인원 104,134명중 여성장애인은 13,989명으로 13.4%에 불과하며, 정부기관의 의무고용에서도 남성장애인에 비해 1/5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은 의무고용제의 정책 수혜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성별 수혜분석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장애인 취업알선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살펴볼 때 여성장애인은 성별수혜분석과 성 형평성 진단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 4. 맺으며

- 1)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 2) 여성장애인의 교육권·모성권·접근권·건강권에 대한 제도적으로 다양한 접근과 정착이 필요하다.
- 3) 장애 유형에 대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모색과 지원이 필요하다.
- 4)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더욱 높이고 그 중 50%를 여성장애인으로 할당해야 한다.
- 5) 여성장애인의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여성장애인 취업현황과 변화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 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7) 성인지적 예산편성과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성장애인 고용 대책

정 성 균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

### I. 서론

정부는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2%)를 부과하고, 고용의무 미이행시 부담금 징수를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한편, 동 재원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자기발전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II.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

여성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의 40.1%, 고용률<sup>12)</sup>은 32.2%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008년 12월 현재 2,247천명을 넘어섰으며, 여성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901천명으로 40.1%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2008) 결과를 분석해 볼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7.6%,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3.7%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용률 59.5% 및 여성 고용률 4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 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08년 실시한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만 15~6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인데 반해 여성은 36.5%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남성 56.4%, 여성 32.2%로 여성이 남성보다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업률은 남성 10.4%, 여성 11.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취업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장애인 고용률 : (등록장애인 중 취업인구/등록장애인수)\*100

【성별 경제활동상태】

성별	15~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활률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	실업					
남성	931,107	585,835	524,943	60,892	345,272	62.9	89.6	10.4	56.4
여성	417,124	152,277	134,200	18,077	264,847	36.5	88.1	11.9	32.2
전체	1,348,231	738,112	659,143	78,969	610,119	53.7	89.3	10.7	48.9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8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2) 취업률=(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4)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100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중 여성은 13.4%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의무고용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104,134명 중 여성장애인은 13,989명으로 13.4%에 불과하나 '07년 11,439명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의무고용제에 의한 여성장애인 고용이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성별 현황】

연도	상시근로자수 (A)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B/A)
		계(B)	남성	여성	
2006	5,801,788	79,480	69,562	9,918	1.37
2007	5,807,665	89,546	78,107	11,439	1.54
2008	6,036,152	104,134	90,145	13,989	1.73

주) 의무고용 여성장애인 '06년 9,918명→'07년 11,439명('06년 대비 1,521명, 15.3%증가)

'07년 11,439명→'08년 13,989명('07년 대비 2,550명, 22.3%증가)

## Ⅲ. 여성장애인 고용대책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현황

2008년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일반지출규모(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제외)는 2,191억원으로 이 중 기금운용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1,800억원이다. 이 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이 1,154억원으로 사업비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646억원으로 표준사업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지원, 영업장소전대, 장애인근로자용자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취업이 보다 어려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여성장애인 우대 관련 사항을 규정(<참고 1> 참조)하는 한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2. 취업지원 사업의 여성 할당목표제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고용 기회 제고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여성장애인 취업비율 목표를 35%로 세우고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취업 성공사례 보급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 \*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 고객상담원 직무, 텔레마케터 직무 개발
- \* 여성장애인 취업비율 : 36.4%('09.9 기준, 여성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 3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서비스 제공실적】

구 분	구 인	구 직	취업알선	취업		
				계	남성	여성
2008	36,099	65,233	18,303	12,141	7,821	4,320(35.6%)
2009.9월	50,882	59,151	14,424	9,924	6,312	3,612(36.4%)

## 3.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매년 5개 과정 이상을 여성 적합 직종으로 신규 개발하고 있으며, '09년부터 직업능력개발센터 및 민간훈련기관의 여성훈련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여성장애인의 기능양성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 여성장애인 훈련직종 : 마린디자인, 디지털미디어, 웹컨텐츠 에디터 등
- \* 직업능력개발센터 수료생 중 여성비율 : 36.3%('09.9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장애인 수료 비중】

연도	구분	전체수료인원	여성수료인원	여성비중
2008	계	3,684	1,049	28.5
	직업능력개발센터	2,264	625	27.6
	타훈련기관	1,420	424	29.9
2009.9월	계	2,919	1,040	35.6
	직업능력개발센터	1,437	521	36.3
	타훈련기관	1,482	519	35.0

주) 타훈련기관 :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특수학교, 개별적훈련



#### 4. 그 밖의 여성장애인 우대 조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융자 및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 선정시 여성장애인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남성에 비해 25% 높은 장려금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연도	구분	전체지원인원	여성인원	여성비중
2008	계	145	37	25.5
	창업자금융자	64	11	17.2
	영업장소전대지원	81	26	32.1
2009.9월	계	99	19	19.2
	창업자금융자	60	7	11.7
	영업장소전대지원	39	12	30.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 분	지 급 단 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고용률 30% 이하 인원	300,000	375,000	375,000	450,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IV. 앞으로의 정책 중점

정부는 2012년까지 장애인고용률 3%를 달성하고, 장애인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이 보다 쉽게 많이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훈련 욕구와 노동수요를 반영하여 적합 직종 및 틈새 직종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는 한편,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09.9.1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09.10.9. 공포('10.1.1. 시행)되었는 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취업기회도 보다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들이 사회에 파급되어 여성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맘껏 일하는 우리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상 여성장애인 우대 조항

조 문	내 용
국가·지자체의 책임(법 제3조)	국가·지자체는 중장애인 및 <b>여성장애인</b> 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함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법 제19조의2)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시 중증 및 <b>여성장애인</b> 고용시 우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법 제19조의3)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지원시 중증 및 <b>여성장애인</b> 고용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급기준(법 제30조 제3항)	중증장애인 및 <b>여성장애인</b> 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그 외의 장애인에 비해 2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경증남성 300천원, 경증여성 375천원, 중증남성 375천원, 중증여성 450천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영 제20조)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시 중증장애인 및 <b>여성장애인</b> 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참고 2〉

## □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p><b>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b>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b>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인지 예산의 개요</li> <li>2.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기대효과</li> <li>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p>
<p><b>부칙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b>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p>	

## □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09.4 기획재정부)

○ ‘10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양성평등사업 및 성별영향분석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

- ① 양성평등사업 : 양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추진 사업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권익증진사업
  - 기타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
    - \* 남녀평등기본계획(노동부), 여성농어민육성종합계획(농식품부) 등
- ② 성별영향분석사업 : 양성평등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 사업  
(기금 제외) 중 성별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



주제발표

# 3

## 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김 영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 1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1
2. 연구 방법 / 123
II. 본론 / 123
1.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123
2. 건강검진 수요조사 / 134
III. 결어 및 정책 제언 / 151
참고 문헌 / 15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40대 미만 전업주부들이 제외되어 이들의 건강검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40세 이상인 직장피부양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의 전업주부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는 남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보다 적고 수검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전체 수혜 대상자 중 남성은 55%(7,338,514명)이며 여성은 45%(5,961,327명)로 10% 차이로 여성 수혜 대상자는 남성보다 낮다. 수검률을 살펴보면 남성 대상 인원 중 수검률은 63%(4,619,850명)이며 여성은 56%(3,358,908명)로 7% 차이로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은 남성보다 낮다.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은 건강검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전체 수검인원 중 여성은 2003년에는 39.17%(2,174,412), 2004년에는 38.87%(2,666,399), 2005년에는 41.12%(2,642,909), 2006년에는 42.34%(3,580,993), 2007년에는 42.10%(3,358,908)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성비 불균형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는 40세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하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세대주의 지위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데 직장가입자와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수혜대상자로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에 피부양자들은 나이 40세 미만이면 건강검진 필요성이 있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건강검진의 수혜대상자 선정에서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로서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건강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35세와 39세사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이다.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직장피부양자 35세와 39세 사이의 여성은 783,821명인 데 반하여 남성은 155,869명이며 여성이 남성의 5배에 이른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35세와 39세사이의 여성은 593,789명인데 반하여 남성은 215,078명이며 여성이 남성의 2.7배에 이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이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 평등(Gender Equality)한 사례에 위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를 성인지

적으로 고려하고 성인지적 예산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 건강검진 사각지대 규모 추정, 사각지대 완화 소요 예산 추계를 실시하였다.

진찰 및 상담, 체중 및 비만도와 혈압, 시각,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 검사들이 최근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사 항목들이다. 1차 검사 이후 질병발병 의심환자로 판정될 경우 2차 검사가 실시된다. 2008년 기준으로 2차 검사 항목에는 당뇨, 고혈압성 질환, 간장질환, 이상지질증질환, 신장질환, 흉부질환, 빈혈증 등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 주요 만성퇴행성 질환(생활습관병)은 발병율이 증가 추세이고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러한 질환들을 일반건강검진 대상 질환에 포함시켜 예방 및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건강검사의 선별 검사(screening test)는 질병의 증세는 보이지 않으나 질병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대상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최근 전업주부들의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반건강검진의 진단 검사 항목들은 전업주부들의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가정에서 다중 역할로 인한 전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 발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 중반 및 후반 연령대인 전업 주부의 일반건강검진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40대 미만 저소득층의 전업주부일 경우 질병 발병의 징후가 있어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에 자궁경부암 발병을 연령대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에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30대의 전업주부에게도 무료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혜택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 조정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전업 주부에게 일반 건강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로 하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목표 질환이 심뇌혈관과 결핵으로 한정되었을 경우 고혈압, 비만, 결핵 검사의 연령은 20세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원철, 2006).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40세의 건강상태와 35세-39세 사이의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를 활용하여 건강검진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40세에서의 건강상태와 40세미만, 특히 35세-39세 사이의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40세의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근거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자료 제한성 및 건강검진 자료의 질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기존연구에서 40세 기준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30대의 전업주부들의 일반건강검진 인지도 및 요구도 등은 기존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40세 기준의 보건학적 근거 타당성과 35세-39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전업주부의 성인지적 예산 추계를 통하여 일반건강검진 혜택 방안 마련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3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인지도 및 요구도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건강검진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2007)를 활용하여 만 30-35세 사이의 전업주부의 건강상태와 건강검진 현황을 만 40세의 전업전부의 건강상태와 건강검진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400명의 35세-39세 사이의 저소득층 지역 거주자 중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건강검진 인지도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네 번째로, 건강검진 대상자 연령을 40세 연령 미만(35세-39세)으로 재조정 시 전업주부 대상 예산 지출 분석(연령,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 인원, 수검률에 따른 Simulation 실시)을 실시하고 현행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II. 본 론

### 1.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타당성

보건학적인 근거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만 35-39세사이의 전업주부와 만 40세의 전업주부의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현황을 각 연령별 및 35세-39세와 40-44세 연령 집단별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건학적 근거 유무를 증명하려 한다. 이러한 각 연령별대 분석 비교는 35세와 40세, 36세와 40세, 38세와 40세, 39세와 40세 및 연령 집단인 35-39세와 40-44세 사이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검진 현황을 비교분석 하였다. 전업주부 만 40세 연령에서 전업주부 40세미만이며 가까이 있는 연령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건강상태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비교 분석이다. 이는 40세 건강 검진 기준에 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수준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2007)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의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통계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구를 기본으로 하고 연령대별 인구비율비례로 총 29개층으로 나뉘 전국 표본설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건강설문 조사, 검진 조사, 영양 조사로 나누어져 있다. 건강설문조사에서는 가구조사, 질병이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손상 및 사고 중독, 의료 이용, 정신 건강, 교육 및 경제 활동, 건강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검진 조사는 신체 계측, 혈압 측정, 임상 검사를 실시하여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건강설문조사와 건강 검진 자료를 활용하여 전업주부의 건강상태 및 건강 검진 현황을 조사하였다(제 4기 1차년도 원시자료 이용 지침서,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4차(2007)는 2,300가구 6,455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참여자 수는 4,594명이다. 검진과 건강설문조사 참여자 수는 4,246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표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대표 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중치를 활용하여 35-44세 여성이며 취업이 되지 않았고 결혼상태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전업주부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sup>13)</sup>.

<표 1>에서 35세 전업주부와 40세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35세 주부가 13.6%로 40세 주부(7.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도 35세 주부의 6.5%가 예라고 대답해 40세 주부(4.4%)보다 2.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35세 주부보다 40세 주부가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35세 37.4%, 40세 29.3%), '대단히 많이 느낀다'에 답한 비율은 40세 주부가 35세 주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통의 경우에 40세 주부가 20.1%로 35세 주부(1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의 경우는 35세 주부(21.5%)가 40세 주부(4.4%)보다도 17.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과 갑상선 장애 유병율의 경우에는 35세 주부 보다 40세 주부가 조금 높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요실금, 11.2% vs 11.4%; 갑상선 장애 10.3% vs 11.4%).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40세 주부가 7.3%이나 35세 주부의 경우에는 한 명의 주부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고혈압의 경우 35세 주부와 40세 주부 중 40세 주부가 고혈압 전단계가 조금 더 높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35세 주부 정상 14.2%, 40세 주부 13.0%). 비만의 경우 40세의 전업주부(35.2%)가 35세(16.5%)보다도 18.7% 더 많았다. 만성폐쇄성 질환에 있어서 40세 주부(12.5%)가 35세 주부(6.0%)보다 제한성폐쇄성 질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혈의 유병여부도 40세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35세 23.8%, 40세 25.1%).

<표 1> 전업주부 35세와 40세의 건강상태 비교

	35세	40세
<b>주관적 건강상태</b>		
매우 좋음	0%(0)	4.5%(9580)
좋음	21.6%(27071)	20.0%(42667)
보통	64.8%(81242)	68.2%(145385)
나쁨	13.6%(16990)	7.3%(15568)
<b>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b>		
예	6.5%(8083)	2.9%(6171)
아니오	93.5%(117220)	97.1%(207029)
<b>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b>		
대단히 많이 느낀다	0%(0)	4.4%(9397)
많이 느끼는 편이다	37.4%(46867)	29.3%(62477)
조금 느끼는 편이다	59.2%(74217)	60.7%(129416)
거의 느끼지 않는다	3.4%(4219)	5.6%(11910)
<b>요통 유병여부</b>		
있음	11.6%(14581)	20.1%(42782)
없음	88.4%(110722)	79.9%(170418)

13)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인 세대주와 세대원 관련 변수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결과 분석에서 35세-39세 전업주부 건강보험 건강검진율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업 주부가 세대주일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35세	40세
<b>우울증 유병여부</b>		
있음	21.5%(26905)	4.4%(9397)
없음	78.5%(98397)	95.6%(203803)
<b>요실금 유병여부</b>		
있음	11.2%(14031)	11.4%(24393)
없음	88.8%(111272)	88.6%(188806)
<b>갑상선 장애 유병여부</b>		
있음	10.3%(12925)	11.4%(24393)
없음	89.7%(112378)	88.6%(188806)
<b>유방암 유병여부</b>		
없음	100%(125303)	100%(213220)
<b>자궁경부암 유병여부</b>		
있음	0%(0)	7.3%(15568)
없음	100%(125303)	92.7%(197632)
<b>&lt;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gt;</b>		
<b>고혈압 유병여부</b>		
정상	85.8%(107465)	87.0%(185539)
고혈압 전단계	14.2%(17838)	13.0%(27661)
<b>당뇨병 유병여부</b>		
정상	100%(125303)	86.5%(174496)
당뇨병	0%(0)	13.5%(27227)
<b>비만 유병여부</b>		
저체중	28.4%(35647)	0%(0)
정상	55.0%(68972)	64.8%(128818)
비만	16.5%(20683)	35.2%(70009)
<b>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b>		
폐기능정상	72.8%(91198)	81.7%(174251)
제한성폐쇄성질환	6.0%(7549)	12.5%(26606)
판정불능	21.2%(26556)	5.8%(12342)
<b>빈혈 유병여부</b>		
있음	23.8%(29794)	25.1%(53562)
없음	76.2%(95509)	74.9%(159638)

36세 전업주부와 40세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표 2>)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세는 15.4%, 40세는 7.3%로 36세 주부가 40세 주부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비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을 살펴봐도 36세 주부가 40세 주부보다 더 높았는데,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여부에 대해 36세 주부는 12.1%가 예라고 대답한 반면 40세 주부는 2.9%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36세 주부가 40세 주부 보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36세 23.7%, 40세 29.3%), '대단히 많이 느낀다'에 답한 비율도 36세 주부가 40세 주부보다 낮게 나타났다.

요통은 40세 주부가 36세 주부보다 유병율이 높았는데, 40세 주부가 20.1%, 36세 주부가 7.4%로 40세 주부가 약 2.8배 이상 많았다. 우울증은 36세 주부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36세 주부(13.6%)의 우울증 유병율이 40세 주부(4.4%)보다 9.2%나 높게 나타났다. 요실금 유병율(36세 9.7%, 40세 11.4%)와 갑상선 장애 유병율(36세 9.7%, 40세 11.4%)은 40세 주부가 36세 주부보다 유병여부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40세 주부가 7.3%이나

36세 주부의 경우에는 한 명의 주부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에 있어서 고혈압 전단계가 36세 주부(15.1%)가 40세(13.0%)보다 2.1% 높게 나타났다. 비만 여부에 있어서는 40세 주부가 비만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36세 주부의 14.5%가 비만인 반면 40세 주부는 35.2%나 비만으로 약 2.5배 이상 높았다. 만성폐쇄성 질환 여부를 보면 36세 여성의 경우 만성폐쇄성질환 유병여부가 4.3%였고(40세는 0%임), 제한성폐쇄성 질환의 경우는 40세가 더 높았는데 40세가 12.5%로 36세(4.4%)보다 8.1% 높게 나타났다. 빈혈도 40세 주부가 유병여부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40세 주부의 빈혈 유병여부는 25.1%, 36세 11.8%로 40세 주부가 13.3% 더 높았다.

<표 2> 전업주부 36세와 40세의 건강검진 상태 비교

	36세	40세
<b>주관적 건강상태</b>		
매우 좋음	0%(0)	4.5%(9580)
좋음	20.0%(74570)	20.0%(42667)
보통	64.6%(240242)	68.2%(145385)
나쁨	15.4%(57202)	7.3%(15568)
<b>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b>		
예	12.1%(45137)	2.9%(6171)
아니오	87.9%(326887)	97.1%(207029)
<b>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b>		
대단히 많이 느낀다	0%(0)	4.4%(9397)
많이 느낀다	23.7%(87983)	29.3%(62477)
조금 느낀다는 편이다	71.1%(264586)	60.7%(129416)
거의 느끼지 않는다	5.2%(19445)	5.6%(11910)
<b>요통 유병여부</b>		
있음	7.4%(27477)	20.1%(42782)
없음	92.6%(344537)	79.9%(170418)
<b>우울증 유병여부</b>		
있음	13.6%(50712)	4.4%(9397)
없음	86.4%(321302)	95.6%(203803)
<b>요실금 유병여부</b>		
있음	10.7%(39813)	11.4%(24393)
없음	89.3%(332201)	88.6%(188806)
<b>갑상선 장애 유병여부</b>		
있음	9.7%(36199)	11.4%(24393)
없음	90.3%(335815)	88.6%(188806)
<b>유방암 유병여부</b>		
없음	100%(372014)	100%(213220)
<b>자궁경부암 유병여부</b>		
있음	0%(0)	7.3%(15568)
없음	100%(372014)	92.7%(197632)
<b>&lt;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gt;</b>		
<b>고혈압 유병여부</b>		
정상	84.9%(315838)	87.0%(185539)
고혈압 전단계	15.1%(56176)	13.0%(27661)
<b>당뇨병 유병여부</b>		
정상	97.3%(301152)	86.5%(174496)
공복혈당장애	2.7%(8366)	0%(0)
당뇨병	0%(0)	13.5%(27227)

	36세	40세
<b>비만 유병여부</b>		
저체중	2.6%(9280)	0%(0)
정상	83.0%(300435)	64.8%(128818)
비만	14.5%(52433)	35.2%(70009)
<b>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b>		
폐기능정상	75.2%(265954)	81.7%(174251)
제한성폐쇄성질환	4.4%(15435)	12.5%(26606)
만성폐쇄성질환	4.3%(15348)	0%(0)
판정불능	16.1%(57086)	5.8%(12342)
<b>빈혈 유병여부</b>		
있음	11.8%(40568)	25.1%(53562)
없음	88.2%(303975)	74.9%(159638)
<b>B형간염항원 양성여부</b>		
없음	100%(344543)	100%(213220)

<표 3>에서 37세 전업주부와 40세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는 37세 주부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세보다 높았는데, 37세 15.0%, 40세 7.3%로 37세 주부가 7.7%나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37세 주부가 40세 주부 보다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7세 9.0%, 40세 4.4%), '많이 느낀다'에 답한 비율인 경우 37세 주부가 40세 주부보다 낮게 나타났다(19.0% vs 29.3%).

요통의 유병여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37세 21.0%, 40세 20.1%). 우울증은 37세 주부에게서 유병율이 더 높았는데, 37세 주부의 9.1%, 40세 주부의 4.4%로 37세 주부가 2배 이상이나 우울증 유병여부가 높았다. 요실금 유병여부는 40세 주부(11.4%)가 37세 주부(5.6%)보다 5.8% 더 높았으며 갑상선 장애의 유병율은 비슷했다(37세 11.3%, 40세 11.4%).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를 보면 고혈압의 유병여부에 있어서는 고혈압 전단계의 비율이 37세 주부(18.9%)가 40세 주부(13.0%)보다 6.9% 높았다. 당뇨병 유병여부를 비교해보면 37세 주부는 92%가 정상이고 8.0%가 공복혈당장애가 있고 당뇨병 유병율이 0%였으나, 40세 주부의 경우는 공복혈당장애가 0%이며 당뇨병 유병율은 13.5%였다. 비만 여부 역시 40세 주부가 더 높았는데 37세 주부는 9.5%만이 비만인 반면 40세 주부는 35.2%가 비만으로 25.7%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만성폐쇄성 질환에 있어서 제한성폐쇄성질환의 경우 37세 주부는 유병율이 0%였으나 40세 주부는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의 경우 37세 주부는 7.1%만이 빈혈인 반면 40세 주부는 25.1%로 37세 주부보다 1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업주부 37세와 40세의 건강상태 비교

	37세	40세
<b>주관적 건강상태</b>		
매우 좋음	2.1%(3458)	4.5%(9580)
좋음	25.6%(42151)	20.0%(42667)
보통	57.2%(94073)	68.2%(145385)
나쁨	15.0%(24706)	7.3%(15568)

	37세	40세
<b>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b>		
예	0%(0)	2.9%(6171)
아니오	100%(164388)	97.1%(207029)
<b>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b>		
대단히 많이 느낀다	9.0%(14830)	4.4%(9397)
많이 느낀다	19.0%(31264)	29.3%(62477)
조금 느낀다	28.3%(46525)	60.7%(129416)
전혀 느끼지 않는다	43.7%(71769)	5.6%(11910)
<b>요통 유병여부</b>		
있음	21.0%(34492)	20.1%(42782)
없음	79.0%(129896)	79.9%(170418)
<b>우울증 유병여부</b>		
있음	9.1%(15022)	4.4%(9397)
없음	90.0%(149365)	95.6%(203803)
<b>요실금 유병여부</b>		
있음	5.6%(9280)	11.4%(24393)
없음	94.4%(155107)	88.6%(188806)
<b>갑상선 장애 유병여부</b>		
있음	11.3%(18561)	11.4%(24393)
없음	88.7%(145827)	88.6%(188806)
<b>유방암 유병여부</b>		
없음	100%(164388)	100%(213220)
<b>자궁경부암 유병여부</b>		
있음	0%(0)	7.3%(15568)
없음	100%(164388)	92.7%(197632)
<b>&lt;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gt;</b>		
<b>고혈압 유병여부</b>		
정상	81.1%(133392)	87.0%(185539)
고혈압 전단계	18.9%(30996)	13.0%(27661)
<b>당뇨병 유병여부</b>		
정상	92.0%(144241)	86.5%(174496)
공복혈당장애	8.0%(12473)	0%(0)
당뇨병	0%(0)	13.5%(27227)
<b>비만 유병여부</b>		
저체중	0%(0)	0%(0)
정상	90.5%(141393)	64.8%(128818)
비만	9.5%(14830)	35.2%(70009)
<b>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b>		
폐기능정상	65.0%(100886)	81.7%(174251)
제한성폐쇄성질환	0%(0)	12.5%(26606)
판정불능	35.0%(54222)	5.8%(12342)
<b>빈혈 유병여부</b>		
있음	7.1%(11624)	25.1%(53562)
없음	92.9%(152764)	74.9%(159638)
<b>B형간염항원 양성여부</b>		
없음	100%(164388)	100%(213220)

<표 4>에서 37세 전업주부와 40세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대답한 비율은 37세가 높았으며(37세 34%, 40세 20%), 나쁘다고 대답한 비율은 40세 주부가 7.3%, 37세 주부가 2.7%로 40세 주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에 있어서는 38세가 32.3%가 예라고 대답한 반면 40세의 경우 2.9%만이 예라고 대답해 38세가 29.4%나 더 2주간 몸이 불편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38세 주부가 40세 주부 보다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38세 8.7%, 40세 4.4%), ‘많이 느낀다’에 답한 비율인 경우 38세 주부가 40세 주부보다 낮게 나타났다(19.0% vs 29.3%). 요통의 유병여부는 38세 12.2%, 40세 20.1%로 40세가 7.9%나 높았다. 우울증은 38세 주부(7.0%)의 유병 여부에서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0세(4.4%)보다 2.6% 더 높게 나타났다. 갑상선 장애 유병여부는 40세 주부(11.4%)가 38세 주부(4.3%)보다 7.1% 더 높았다.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고혈압의 유병여부에 있어서 38세 주부의 경우 1.9%만이 고혈압 전단계였으나 40세 주부는 13.0%로 11.1%나 고혈압 전단계 비율이 높았다. 비만 여부에 있어서도 40세 주부의 35.2%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38세 주부(14.7%)보다 10.5% 더 높았다. 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에 있어서는 38세 주부의 경우 제한성폐쇄성 질환은 40세 주부가 높았고(38세 11.4%, 40세 12.5%)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8세 주부가 더 높게 나타났다(38세 4.3%, 40세 0%). 빈혈은 38세 주부에게서 유병여부가 더 높았는데 38세 주부의 44.9%, 40세 주부의 25.1%로 38세 주부가 19.8% 더 많이 빈혈 유병 여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업주부 38세와 40세의 건강상태 비교

	38세	40세
<b>주관적 건강상태</b>		
매우 좋음	0%(0)	4.5%(9580)
좋음	34.0%(76782)	20.0%(42667)
보통	63.3%(142894)	68.2%(145385)
나쁨	2.7%(6148)	7.3%(15568)
<b>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b>		
예	32.3%(72940)	2.9%(6171)
아니오	67.7%(152885)	97.1%(207029)
<b>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b>		
대단히 많이 느낀다	8.7%(19576)	4.4%(9397)
많이 느낀다	14.0%(31682)	29.3%(62477)
조금 느낀다	68.6%(154973)	60.7%(129416)
전혀 느끼지 않는다	8.7%(19593)	5.6%(11910)
<b>요통 유병여부</b>		
있음	12.2%(27535)	20.1%(42782)
없음	87.8%(198289)	79.9%(170418)
<b>우울증 유병여부</b>		
있음	7.0%(15782)	4.4%(9397)
없음	93.0%(210042)	95.6%(203803)
<b>요실금 유병여부</b>		
있음	0%(0)	11.4%(24393)
없음	100%(22584)	88.6%(188806)
<b>갑상선 장애 유병여부</b>		
있음	4.3%(9501)	11.4%(24393)
없음	95.8%(216323)	88.6%(188806)
<b>유방암 유병여부</b>		
없음	100%(22584)	100%(213220)

	38세	40세
<b>자궁경부암 유병여부</b>		
있음	0%(0)	7.3%(15568)
없음	100%(22584)	92.7%(197632)
<b>&lt;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gt;</b>		
<b>고혈압 유병여부</b>		
정상	98.1%(221606)	87.0%(185539)
고혈압 전단계	1.9%(4219)	13.0%(27661)
<b>당뇨병 유병여부</b>		
정상	97.2%(219478)	86.5%(174496)
당뇨병	2.8%(6346)	13.5%(27227)
<b>비만 유병여부</b>		
저체중	14.2%(32712)	0%(0)
정상	70.8%(159870)	64.8%(128818)
비만	14.7%(33242)	35.2%(70009)
<b>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b>		
폐기능정상	84.3%(185230)	81.7%(174251)
제한성폐쇄성질환	11.4%(24946)	12.5%(26606)
만성폐쇄성폐질환	4.3%(9501)	0%(0)
판정불능	0%(0)	5.8%(12342)
<b>빈혈 유병여부</b>		
있음	44.9%(101490)	25.1%(53562)
없음	55.1%(24335)	74.9%(159638)
<b>B형간염항원 양성여부</b>		
없음	100%(22584)	100%(213220)

<표 5>를 통해 39세 전업주부와 40세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39세의 주부(좋은 36%)가 40세 주부(좋은 20%)보다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수도 39세 5.9%, 40세 7.3%로 39세 주부가 낮았다. 그러나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9세 주부가 더 높았는데 39세 11.5%, 40세 2.9%가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39세 주부가 약 4배 정도 더 많았다.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39세 주부가 40세 주부 보다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답한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39세 3.4%, 40세 4.4%), ‘많이 느낀다’에 답한 비율인 경우 39세 주부가 40세 주부보다 낮게 나타났다(4.4.0% vs 29.3%). 우울증도 유병여부도 39세 주부(9.7%)가 40세 주부(4.4%)보다 5.3% 더 높았다. 요통과 요실금, 갑상선 장애 유병여부는 40세 주부가 상대적으로 유병여부에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요통은 39세 12.9%, 40세 20.1%로 40세 주부가 7.2% 높았으며 요실금은 9.4% 높았다(39세 2.0%, 40세 11.4%).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를 보면 고혈압의 경우 39세 주부(26.2%)가 40세 주부(13%)보다 2배 이상 고혈압 전단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당뇨병의 경우는 40세 주부의 13.5%가 당뇨병인 반면 39세 주부는 2.1%에 그쳤다. 비만에 있어서도 40세 주부 비율이 높았는데 39세 30.5%, 40세 35.2%로 40세 주부가 4.7% 정도 더 비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에 있어서는 제한성폐쇄성 질환의 유병여부에서 있다는 대답이 39세 주부 7.3%, 40세 주부 12.5%로 40세 주부가 5.2% 더 높았다. 빈혈도 40세 주부가 유병여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39세 주부의 9.7%, 40세 주부는 1/4인 25% 정도가 빈혈로 빈혈 유병여부가 약 2.5배 이상 높았다. B형간염여부인 경우 39세의 주부 중 3.9%, 40세의 주부 경우 존재하지 않았다.



<표 5> 전업주부 39세와 40세의 건강상태 비교

	39세	40세
<b>주관적 건강상태</b>		
매우 좋음	0%	4.5%(9580)
좋음	36.0%(68963)	20.0%(42667)
보통	58.1%(111355)	68.2%(145385)
나쁨	5.9%(11252)	7.3%(15568)
<b>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b>		
예	11.5%(21943)	2.9%(6171)
아니오	88.5%(169627)	97.1%(207029)
<b>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b>		
대단히 많이 느낌	3.4%(6586)	4.4%(9397)
많이 느낀다	4.4%(8383)	29.3%(62477)
조금 느낀다	78.6%(150635)	60.7%(129416)
전혀 느끼지 못함	13.6%(25966)	5.6%(11910)
<b>요통 유병여부</b>		
있음	12.9%(24645)	20.1%(42782)
없음	87.1%(166925)	79.9%(170418)
<b>우울증 유병여부</b>		
있음	9.7%(18505)	4.4%(9397)
없음	90.3%(173065)	95.6%(203803)
<b>요실금 유병여부</b>		
있음	2.0%(3846)	11.4%(24393)
없음	98.0%(187724)	88.6%(188806)
<b>갑상선 장애 유병여부</b>		
있음	0%(0)	11.4%(24393)
없음	100%(191570)	88.6%(188806)
<b>유방암 유병여부</b>		
없음	100%(191570)	100%(213220)
<b>자궁경부암 유병여부</b>		
있음	0%(0)	7.3%(15568)
없음	100%(191570)	92.7%(197632)
<b>&lt;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gt;</b>		
<b>고혈압 유병여부</b>		
정상	73.8%(141435)	87.0%(185539)
고혈압 전단계	26.2%(50135)	13.0%(27661)
<b>당뇨병 유병여부</b>		
정상	96.4%(178295)	86.5%(174496)
공복혈당장애	1.5%(2843)	0%(0)
당뇨병	2.1%(3846)	13.5%(27227)
<b>비만 유병여부</b>		
저체중	9.7%(18561)	0%(0)
정상	59.9%(114657)	64.8%(128818)
비만	30.5%(58353)	35.2%(70009)
<b>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b>		
폐기능정상	79.2%(151638)	81.7%(174251)
제한성폐쇄성질환	7.3%(13992)	12.5%(26606)
판정불능	13.5%(25940)	5.8%(12342)
<b>빈혈 유병여부</b>		
있음	9.7%(18561)	25.1%(53562)
없음	90.3%(173010)	74.9%(159638)
<b>B형간염항원 양성여부</b>		
있음	3.9%(7406)	0%(0)
없음	96.1%(184165)	100%(213220)

35-39세 전업주부와 40-44세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표 6>),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35-39세 주부가 40-44세 주부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나쁨 35-39세 10.8%, 40-44세 10.5%).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여부는 40세 주부가 조금 더 높았는데 35-39세 주부의 13.7%, 40-44세 주부의 15.2%가 2주간 몸이 불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40-44세 주부가 약 1.5% 더 높았다.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35세-39세 주부가 40세-44세 주부 보다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답한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35세-39세 3.8%, 40세 5.7%), '많이 느낀다'에 답한 비율인 경우 35세-39세 주부가 40세-44세 주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19.1% vs 24.1%). 요통도 0.6%, 40-44세 주부가 유병여부가 더 높았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35-39세 11.9%, 40-44세 12.5%). 요실금 또한 40-44세 주부의 유병여부가 높았는데 40-44세 주부의 17.8%. 35-39세 주부의 6.2%가 유병여부가 있어 40-44세 주부 집단이 약 2.5배 정도 많았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40-44세 주부는 유병여부가 있었으며 각각 1.3%, 4.1%였다.

건강검진을 통해 나타난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우선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가 40-44세 주부(7.7%)보다 35-39세 주부(14.8%)에서 7.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유병여부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40-44세 주부가 약 2.5% 유병율이 높았다(35-39세 1.0%, 40-44세 3.5%). 비만은 40-44세 주부가 다소 높았는데 35-39세 주부의 16.9%, 40-44세 주부의 30.2%가 비만으로 40-44세 주부가 13.3%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만성폐쇄성 질환은 35-39세 주부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율이 존재하며 40-44세 주부의 경우는 없었다(35-39세 2.4%, 40-44세 0%). 빈혈의 유병여부는 35-39세 주부가 조금 더 높았는데 35-39세 19.2%, 40-44세 주부 18.6%가 빈혈로 35-39세 주부가 비슷한 수준에서 약 0.6% 소폭 높았다. B형간염항원 양성 여부에 있어서는 40-44세 주부의 8.1%가 있다고 응답해 35-39세 주부(0.7%)보다 7.4%나 높았다.

<표 6> 전업주부 35-39세와 40-44세의 건강상태 비교

	35-39세	40-44세
<b>주관적 건강상태</b>		
매우 좋음	0.3%(3458)	2.4%(18645)
좋음	26.8%(289537)	28.6%(225737)
보통	62.1%(669806)	58.5%(462121)
나쁨	10.8%(116298)	10.5%(82846)
<b>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b>		
예	13.7%(148102)	15.2%(119845)
아니오	86.3%(930997)	84.8%(669504)
<b>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b>		
대단히 많이 느낀다	3.8%(40992)	5.7%(44809)
많이 느낀다	19.1%(206179)	24.1%(190484)
조금 느낀다	64.0%(690936)	62.8%(495921)
전혀 느끼지 않는다	13.1%(140992)	7.4%(58134)
<b>요통 유병여부</b>		
있음	11.9%(128730)	12.5%(99011)
없음	88.1%(950369)	87.5%(690338)
<b>우울증 유병여부</b>		
있음	11.8%(126928)	8.0%(62825)
없음	88.2%(952171)	92.0%(726524)

	35-39세	40-44세
<b>요실금 유병여부</b>		
있음	6.2%(66920)	17.9%(141323)
없음	93.8%(1012129)	82.1%(648026)
<b>갑상선 장애 유병여부</b>		
있음	7.2%(77185)	9.0%(71120)
없음	92.8%(1001914)	91.0%(718229)
<b>유방암 유병여부</b>		
있음	0%(0)	1.3%(10074)
없음	100%(1079099)	98.7%(779275)
<b>자궁경부암 유병여부</b>		
있음	0%(0)	4.1%(32240)
없음	100%(1079099)	95.9%(757109)
<b>&lt;건강검진에 의한 건강상태&gt;</b>		
<b>고혈압 유병여부</b>		
정상	85.2%(919736)	82.0%(647377)
고혈압 전 단계	14.8%(159364)	7.7%(60545)
고혈압	0%(0)	10.3%(81427)
<b>당뇨병 유병여부</b>		
정상	96.6%(968469)	94.1%(728266)
공복혈당장애	2.4%(23682)	2.4%(18512)
당뇨병	1.0%(10192)	3.5%(27227)
<b>비만 유병여부</b>		
저체중	9.1%(96200)	3.5%(27150)
정상	74.0%(785327)	66.3%(513759)
비만	16.9%(179541)	30.2%(234067)
<b>만성폐쇄성 질환 유병여부</b>		
폐기능정상	76.0%(794906)	79.3%(625748)
제한성폐쇄성질환	5.9%(61921)	9.0%(71040)
만성폐쇄성폐질환	2.4%(24849)	0%(0)
판정불능	15.7%(163804)	11.7%(92560)
<b>빈혈 유병여부</b>		
있음	19.2%(202036)	18.6%(146719)
없음	80.8%(849592)	81.4%(642630)
<b>B형간염항원 양성여부</b>		
있음	0.7%(7406)	8.1%(64297)
없음	99.3%(1044222)	91.9%(725052)

<표 7>에서 35-39세 전업주부와 40-44세 전업주부의 건강검진률을 비교해보면, 건강검진 수진률에 있어서 35-39세 주부의 26.8%, 40-44세 주부의 57.5%가 건강검진을 받아 40-44세 주부가 35-39세 주부보다 두배 이상 건강검진 수진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본인부담에 있어서는 35-39세 주부의 12.1%가 본인부담이었고, 40-44세 주부의 경우는 14.4%가 본인부담이었다.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검진을 보면 40세 주부의 42.7%는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35-39세 주부는 7.4%만이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암검진 여부에 있어서는 35-39세 주부의 57.6%, 40-44세 주부의 56.5%가 암검진을 받은 여부가 있어 검진률이 비슷한 수준에서 35-39세 주부가 약 1.1% 검진률이 높았다. 그러나 암검진의 본인부담에 있어서는 35-39세 주부가 더 높았는데 35-39세 36.6%, 40-44세 29%로 35-39세 주부들이 7.6% 정도 암검진에서 본인 부담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 전업주부 35-39세와 40-44세의 건강검진을 비교

	35-39세	40-44세
<b>건강검진 수진 여부</b>		
예	26.7%(288606)	57.5%(454200)
아니오	73.3%(790494)	42.5%(335149)
<b>건강검진 본인부담</b>		
예	12.1%(130058)	14.7%(158548)
아니오	10.0%(79004)	47.5%(375196)
비해당	73.3%(790494)	42.5%(335149)
<b>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검진</b>		
예	7.4%(79353)	42.7%(337371)
아니오	19.4%(209252)	14.8%(116829)
비해당	73.3%(790494)	42.5%(335149)
<b>2년간 암검진 여부</b>		
예	57.6%(621852)	56.5%(445909)
아니오	42.4%(457247)	40.1%(316213)
모름	0%(0)	3.4%(27227)
<b>암검진 본인부담</b>		
예	36.6%(394787)	29.0%(228710)
아니오	21.0%(227605)	27.5%(217199)
비해당	42.4%(457247)	43.5%(343440)

## 2. 건강검진 수요조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40대 미만 전업 주부 대상 일반건강검진에 관하여 인지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40세 미만 전업 주부이나 본 조사의 표본 집단은 서울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호번호부상의 가구 내 30-39세 전업주부 400명을 무작위로 선출하였다. 건강보험의 무료건강검진의 혜택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처할 위험이 높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11-30등급에 해당되는 집단에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2007). 또한 연구 목적상 지역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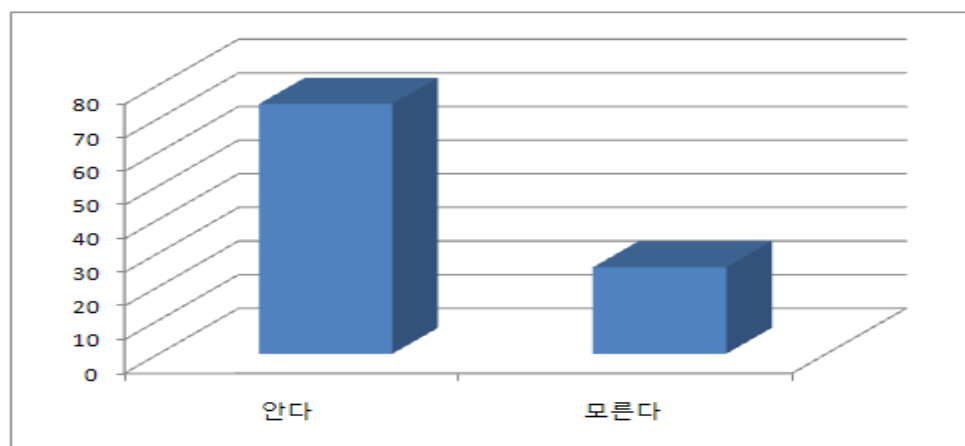
표집 방법은 1 차와 2 차 표집방법으로 나눈다. 1 차 표집으로 서울시 내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선출하였다. 강남구의 대치, 수서 1, 수서 6 단지, 강서구의 가양, 가양 4, 5, 주공 1, 주공 4, 주공 7, 주공 9, 방화 6 단지, 노원구의 하계 5, 중계 3. 주공 1, 주공 9 단지를 선정되었다. 해당 단지에서 동단위로 다시 좁혀 지역을 선정하였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일원 1동, 수서동, 강서구에서는 가양 2동, 등촌 3동, 방화 3동, 노원구에서는 하계 2동, 중계동, 월계 2동이 선정되었다. 또한 기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인근 지역을 선정하였다. 강서구에 화곡동, 관악구에 신림 7동, 동작구에 사당 3동, 영등포구에 대림 3동,

도림동, 문래동, 신도림동이 선정되었다. 기타 지역 외에 동 작구, 서초구, 금천구, 중랑구, 성북구, 강동구, 광진구, 강북구, 중구, 용산구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역들이 선정된 후 2차 표집으로 해당지역의 전화번호부를 표집틀로 하여 30-39세 전업주부 400명을 임의 표집<sup>14)</sup>을 하였다. 본 조사에서 전업주부라 함은 3개월 전부터 조사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기혼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시급이나 일당을 받는 임시직 임금노동에 참여한 기혼 여성도 전업주부에 포함되었다.

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30대의 전업주부의 최종학력이 중졸이하는 7명으로 1.8%, 고졸은 109명으로 27.3%, 대졸이상은 283명으로 70.8%으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초반(30-34세)인 경우 181명으로 45.3%, 30대 후반(35-39세)인 경우 216명으로 54.0%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9명으로 2.3%, 100-200만원 미만이 119명으로 29.8%, 200-300만원 미만이 97명으로 33.3%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고, 300-400만원 미만이 97명으로 24.3%, 400만원 이상이 41명으로 10.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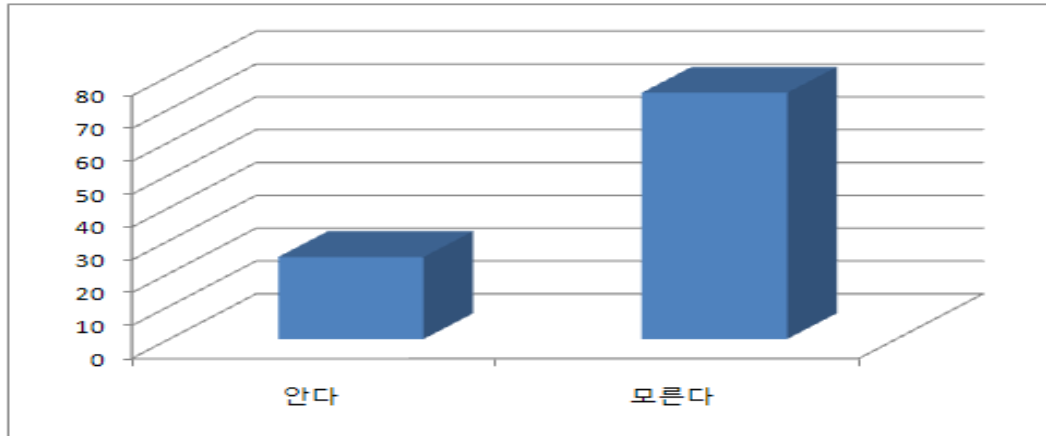
설문 문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일반건강검진에 대하여 인지 유무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 중 74.3%(297)가 안다고 답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검진 인지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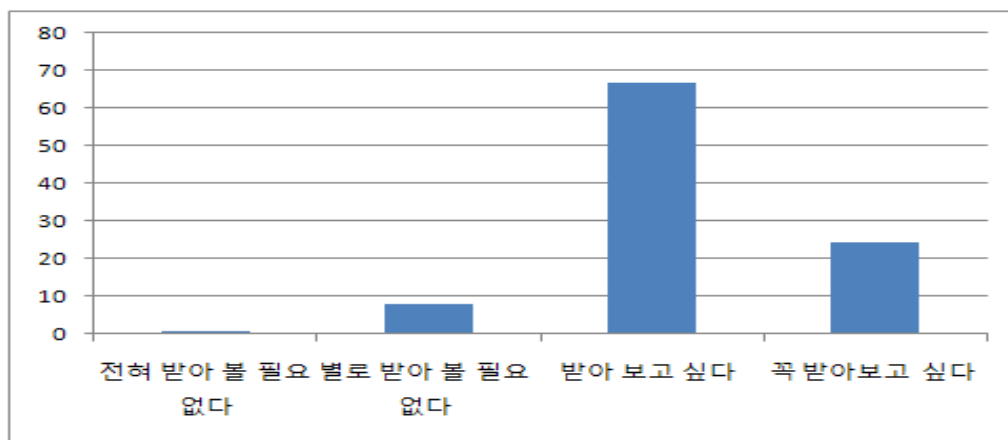
두 번째로, 만30세 이상 전업주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암검진이 무료라는 사실에 관한 인지 유무를 묻는 질문에 25%(100)만이 안다고 답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건강검진 유무 정도만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 되어진다(<그림 2, 참조).

14) 본 조사가 모수를 측정해야 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며 설문 조사의 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표집틀로 하여 30대 전업주부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는 임의표집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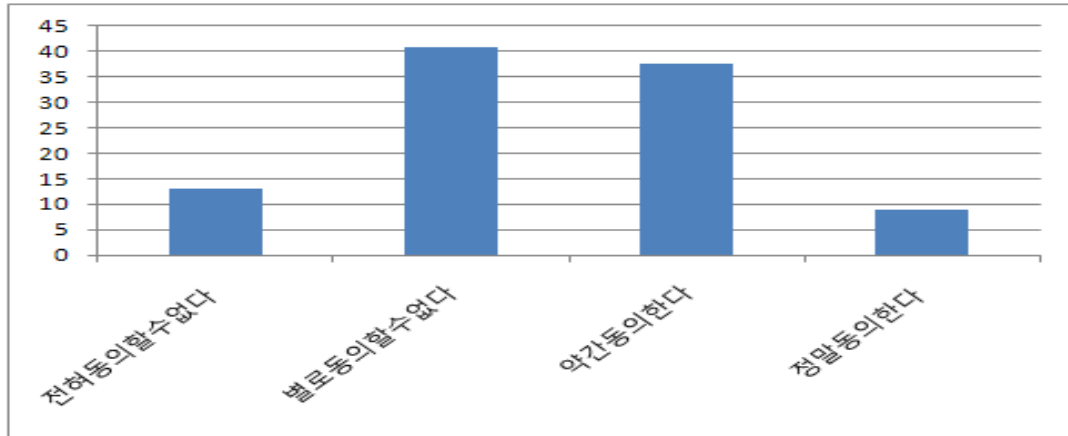
<그림 2> 자궁경부암 관련 건강검진 인지 정도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만40세 이상만이 무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제한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무료 일반건강검진 수요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 중 66.8%(267)가 '받아보고 싶다'로 대답한 전업주부가 제일 높은 분포를 나타내며 '꼭 받아보고 싶다' 라고 대답한 전업주부는 24.5%(98), '별로 받아 볼 필요없다' 라고 대답한 전업주부는 8.0%, '전혀 받아 볼 필요 없다' 라고 대답한 전업주부는 0.8%(3)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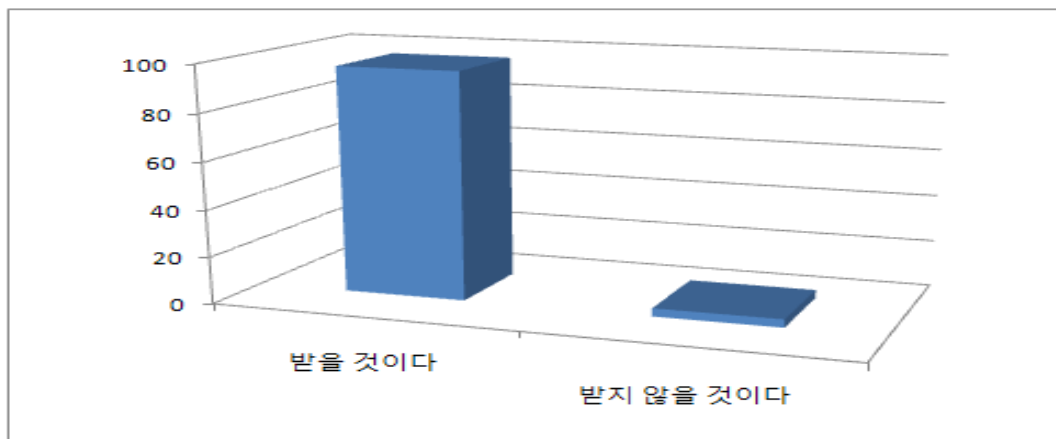
<그림 3> 일반건강검진 수요 정도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만40세 이상 기준에 관한 근거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 중 13.0%(52)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40.8%(163) '별로 동의할 수 없다', 37.5%(150)가 '약간 동의한다', 8.8%가 '정말 동의한다'에 답하고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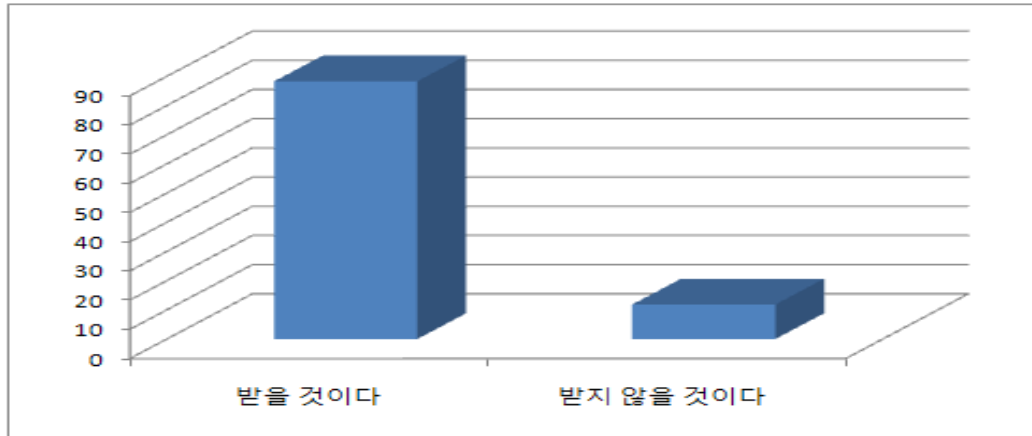
<그림 4> 건강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기준 동의 정도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4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수요 정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중 96.5%(386)가 ‘받을 것이다’라고 답한 반면에 3.5%(14)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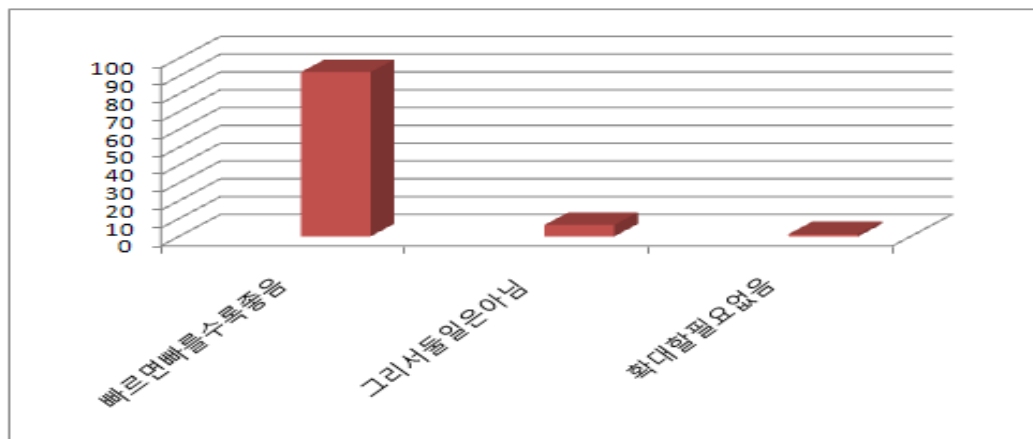
<그림 5> 건강검진 대상자 40세 미만으로 확대 시 건강검진 수요 정도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4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하나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건강검진 수요 정도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 중 88.3%(353) ‘받을 것이다’라고 답한 반면에 11.8%(47)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최소한의 건강검진 비용 본인 부담 시 건강검진 수요 정도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40세 이상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제도를 4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은 조사대상자 중 92.3%(369)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6.5%(26)가 ‘그리 서둘일은 아니다’, 1.3%(5)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하고 있다(그림 IV-7, 참조).



<그림 7> 일반건강검진 40세 미만 확장 제도 시기 정도

#### 다. 사각지대 규모 및 소요 예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35-39세의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는 40세의 전업주부 보다 건강상태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건강상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에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전업주부들은 일반건강검진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35-39세의 전업주부는 40세 이상의 연령 제한으로 일반건강검진 수혜대상자에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라고 고려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이 아닌 건강 보험료를 지급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40세 미만의



35-39세 사이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원 중 전업 주부를 다시 구분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불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전업주부라고 추측된다.

또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8호) 제 4조의 의거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라는 용어는 고시 기준에 정해진 지역가입자 월72,000원 이하 및 직장가입자 월 60,000원을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따른 성별 35세-39세 사이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의 인원을 파악하였다.

만 35세와 만 39세 사이의 성별 및 연령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인원을 살펴보면 만 35-39세 사이의 여성 인원 총합계가 783,821명인 반면 남성 인원은 155,869 명이다. 이는 여성의 총 인원이 남성의 총 인원 보다 무려 5배에 달한다. 또한 만 35세와 39세 사이의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납부액 60,000원 이하 인원은 여성이 239,959명인데 반하여 남성은 100,680 명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 보다 2.3배 많다.

만 35세와 만 39세 사이의 성별 및 연령별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인원을 살펴보면 만 35-39세 사이의 여성 인원 총합계가 593,877명인 반면 남성 인원은 215,078명이다. 이는 여성의 총 인원이 남성의 총 인원 보다 2.7배에 달한다. 또한 만 35세와 39세 사이의 지역가입자 세대원 보험료 납부액 72,000원 이하 인원은 여성이 266,346명인데 반하여 남성은 128,634 명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 보다 2.07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 설정 및 검사항목 개선을 중심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2차 검사항목 통합·조정하였다. 구체적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으로 실시하고, 두 번째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70세와 74세 인지기능저하(치매) 검사 실시하고, 세 번째로, 1차검진 수검자에게 '건강위험평가' 결과 제공하고 네 번째로, 2차 검진은 보건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은 삭제하고 의사의 상담을 통한 고혈압·당뇨병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 항목별 비용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차 건강검진 총 비용은 37,980원이며 2차 건강검진 총 비용은 17,970원이나 70세와 74세 인지기능저하(치매) 검사 실시하는 만 35세-39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2차 건강검진 총비용은 15,520원이다.

1차 일반건강검진 및 2차 건강검진 비용을 활용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40세 미만인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의 대상인원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를 실시하였다. 건강검진 대상자 연령을 40세 연령 미만(35세-39세)으로 재조정 시 전업주부 대상 예산 지출 분석(연령,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인원, 수검률에 따른 Simulation 실시)을 실시하였다.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의 만 35세-39세 사이의 각 연령별 1차 수검율은 10% 단위로 2차 수검율은 25% 단위로 하여 예산 추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만 35세와 39세 사이의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납부액 60,000원 이하 인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보험료 납부액 72,000원 이하 인원인에 따른 만 35세-39세 사이의 각 연령별 1차 수검율은 10% 단위로 2차 수검율은 25% 단위로 하여 예산 추계를 실시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연령 35세-39세 기준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세대원 일반건강검진(1차, 2차) 대상 인원 및 소요 예산 중 35세 경우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14,713,302,500 - 1,151,212,790 원, 36세 경우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14,389,199,500 - 1,125,854,002 원, 37세 경우 15,187,633,500 - 1,188,325,866 원, 38세 경우 14,687,676,000 - 1,149,207,696 원, 39세 경우 14,724,323,500 - 1,152,075,106 원이다.

또한 35세-39세 구간의 기준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세대원 일반건강검진(1차, 2차) 대상 인원 및 소요 예산의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73,702,135,000 - 5,766,675,460 원이다. 최근 2007년 기준 1차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수검율이 30%를 고려하면 아래의 표에서 가장 근접한 1차 수검율 50%와 2차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에 따르면 총 소요예산은 28,833,377,300 원이다.

<표 7> 연령 35세-39세 기준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세대원의 일반건강검진(1차·2차)  
총 소요예산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총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총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35세	100%	100%	8,768,275,500	5,945,027,000	14,713,302,500
		75%	8,132,370,660	5,513,873,640	13,646,244,300
		50%	7,496,465,820	5,082,720,280	12,579,186,100
		25%	6,860,560,980	4,651,566,920	11,512,127,900
	90%	100%	7,891,447,950	5,350,524,300	13,241,972,250
		75%	7,319,133,594	4,962,486,276	12,281,619,870
		50%	6,746,819,238	4,574,448,252	11,321,267,490
		25%	6,174,504,882	4,186,410,228	10,360,915,110
	80%	100%	7,014,620,400	4,756,021,600	11,770,642,000
		75%	6,505,896,528	4,411,098,912	10,916,995,440
		50%	5,997,172,656	4,066,176,224	10,063,348,880
		25%	5,488,448,784	3,721,253,536	9,209,702,320
	70%	100%	6,137,792,850	4,161,518,900	10,299,311,750
		75%	5,692,659,462	3,859,711,548	9,552,371,010
		50%	5,247,526,074	3,557,904,196	8,805,430,270
		25%	4,802,392,686	3,256,096,844	8,058,489,530
	60%	100%	5,260,965,300	3,567,016,200	8,827,981,500
		75%	4,879,422,396	3,308,324,184	8,187,746,580
		50%	4,497,879,492	3,049,632,168	7,547,511,660
		25%	4,116,336,588	2,790,940,152	6,907,276,740
	50%	100%	4,384,137,750	2,972,513,500	7,356,651,250
		75%	4,066,185,330	2,756,936,820	6,823,122,150
		50%	3,748,232,910	2,541,360,140	6,289,593,050
		25%	3,430,280,490	2,325,783,460	5,756,063,950
	40%	100%	3,507,310,200	2,378,010,800	5,885,321,000
		75%	3,252,948,264	2,205,549,456	5,458,497,720
		50%	2,998,586,328	2,033,088,112	5,031,674,440
		25%	2,744,224,392	1,860,626,768	4,604,851,160
	30%	100%	2,630,482,650	1,783,508,100	4,413,990,750
		75%	2,439,711,198	1,654,162,092	4,093,873,290
		50%	2,248,939,746	1,524,816,084	3,773,755,830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총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총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25%	2,058,168,294	1,395,470,076	3,453,638,370
	20%	100%	1,753,655,100	1,189,005,400	2,942,660,500
		75%	1,626,474,132	1,102,774,728	2,729,248,860
		50%	1,499,293,164	1,016,544,056	2,515,837,220
		25%	1,372,112,196	930,313,384	2,302,425,580
	10%	100%	876,827,550	594,502,700	1,471,330,250
		75%	813,237,066	551,387,364	1,364,624,430
		50%	749,646,582	508,272,028	1,257,918,610
		25%	686,056,098	465,156,692	1,151,212,790
36세	100%	100%	8,380,721,500	6,008,478,000	14,389,199,500
		75%	7,772,923,380	5,572,722,960	13,345,646,340
		50%	7,165,125,260	5,136,967,920	12,302,093,180
		25%	6,557,327,140	4,701,212,880	11,258,540,020
	90%	100%	7,542,649,350	5,407,630,200	12,950,279,550
		75%	6,995,631,042	5,015,450,664	12,011,081,706
		50%	6,448,612,734	4,623,271,128	11,071,883,862
		25%	5,901,594,426	4,231,091,592	10,132,686,018
	80%	100%	6,704,577,200	4,806,782,400	11,511,359,600
		75%	6,218,338,704	4,458,178,368	10,676,517,072
		50%	5,732,100,208	4,109,574,336	9,841,674,544
		25%	5,245,861,712	3,760,970,304	9,006,832,016
	70%	100%	5,866,505,050	4,205,934,600	10,072,439,650
		75%	5,441,046,366	3,900,906,072	9,341,952,438
		50%	5,015,587,682	3,595,877,544	8,611,465,226
		25%	4,590,128,998	3,290,849,016	7,880,978,014
	60%	100%	5,028,432,900	3,605,086,800	8,633,519,700
		75%	4,663,754,028	3,343,633,776	8,007,387,804
		50%	4,299,075,156	3,082,180,752	7,381,255,908
		25%	3,934,396,284	2,820,727,728	6,755,124,012
	50%	100%	4,190,360,750	3,004,239,000	7,194,599,750
		75%	3,886,461,690	2,786,361,480	6,672,823,170
		50%	3,582,562,630	2,568,483,960	6,151,046,590
		25%	3,278,663,570	2,350,606,440	5,629,270,010
	40%	100%	3,352,288,600	2,403,391,200	5,755,679,800
		75%	3,109,169,352	2,229,089,184	5,338,258,536
		50%	2,866,050,104	2,054,787,168	4,920,837,272
		25%	2,622,930,856	1,880,485,152	4,503,416,008
	30%	100%	2,514,216,450	1,802,543,400	4,316,759,850
		75%	2,331,877,014	1,671,816,888	4,003,693,902
		50%	2,149,537,578	1,541,090,376	3,690,627,954
		25%	1,967,198,142	1,410,363,864	3,377,562,006
	20%	100%	1,676,144,300	1,201,695,600	2,877,839,900
		75%	1,554,584,676	1,114,544,592	2,669,129,268
		50%	1,433,025,052	1,027,393,584	2,460,418,636
		25%	1,311,465,428	940,242,576	2,251,708,004
	10%	100%	838,072,150	600,847,800	1,438,919,950
		75%	777,292,338	557,272,296	1,334,564,634
		50%	716,512,526	513,696,792	1,230,209,318
		25%	655,732,714	470,121,288	1,125,854,002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총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총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37세	100%	100%	8,681,284,500	6,506,349,000	15,187,633,500
		75%	8,051,688,540	6,034,486,680	14,086,175,220
		50%	7,422,092,580	5,562,624,360	12,984,716,940
		25%	6,792,496,620	5,090,762,040	11,883,258,660
	90%	100%	7,813,156,050	5,855,714,100	13,668,870,150
		75%	7,246,519,686	5,431,038,012	12,677,557,698
		50%	6,679,883,322	5,006,361,924	11,686,245,246
		25%	6,113,246,958	4,581,685,836	10,694,932,794
	80%	100%	6,945,027,600	5,205,079,200	12,150,106,800
		75%	6,441,350,832	4,827,589,344	11,268,940,176
		50%	5,937,674,064	4,450,099,488	10,387,773,552
		25%	5,433,997,296	4,072,609,632	9,506,606,928
	70%	100%	6,076,899,150	4,554,444,300	10,631,343,450
		75%	5,636,181,978	4,224,140,676	9,860,322,654
		50%	5,195,464,806	3,893,837,052	9,089,301,858
		25%	4,754,747,634	3,563,533,428	8,318,281,062
	60%	100%	5,208,770,700	3,903,809,400	9,112,580,100
		75%	4,831,013,124	3,620,692,008	8,451,705,132
		50%	4,453,255,548	3,337,574,616	7,790,830,164
		25%	4,075,497,972	3,054,457,224	7,129,955,196
	50%	100%	4,340,642,250	3,253,174,500	7,593,816,750
		75%	4,025,844,270	3,017,243,340	7,043,087,610
		50%	3,711,046,290	2,781,312,180	6,492,358,470
		25%	3,396,248,310	2,545,381,020	5,941,629,330
	40%	100%	3,472,513,800	2,602,539,600	6,075,053,400
		75%	3,220,675,416	2,413,794,672	5,634,470,088
		50%	2,968,837,032	2,225,049,744	5,193,886,776
		25%	2,716,998,648	2,036,304,816	4,753,303,464
	30%	100%	2,604,385,350	1,951,904,700	4,556,290,050
		75%	2,415,506,562	1,810,346,004	4,225,852,566
		50%	2,226,627,774	1,668,787,308	3,895,415,082
		25%	2,037,748,986	1,527,228,612	3,564,977,598
	20%	100%	1,736,256,900	1,301,269,800	3,037,526,700
		75%	1,610,337,708	1,206,897,336	2,817,235,044
		50%	1,484,418,516	1,112,524,872	2,596,943,388
		25%	1,358,499,324	1,018,152,408	2,376,651,732
	10%	100%	868,128,450	650,634,900	1,518,763,350
		75%	805,168,854	603,448,668	1,408,617,522
		50%	742,209,258	556,262,436	1,298,471,694
		25%	679,249,662	509,076,204	1,188,325,866
38세	100%	100%	8,167,738,000	6,519,938,000	14,687,676,000
		75%	7,575,386,160	6,047,090,160	13,622,476,320
		50%	6,983,034,320	5,574,242,320	12,557,276,640
		25%	6,390,682,480	5,101,394,480	11,492,076,960
	90%	100%	7,350,964,200	5,867,944,200	13,218,908,400
		75%	6,817,847,544	5,442,381,144	12,260,228,688
		50%	6,284,730,888	5,016,818,088	11,301,548,976
		25%	5,751,614,232	4,591,255,032	10,342,869,264
	80%	100%	6,534,190,400	5,215,950,400	11,750,140,800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총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총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75%	6,060,308,928	4,837,672,128	10,897,981,056
		50%	5,586,427,456	4,459,393,856	10,045,821,312
		25%	5,112,545,984	4,081,115,584	9,193,661,568
	70%	100%	5,717,416,600	4,563,956,600	10,281,373,200
		75%	5,302,770,312	4,232,963,112	9,535,733,424
		50%	4,888,124,024	3,901,969,624	8,790,093,648
		25%	4,473,477,736	3,570,976,136	8,044,453,872
	60%	100%	4,900,642,800	3,911,962,800	8,812,605,600
		75%	4,545,231,696	3,628,254,096	8,173,485,792
		50%	4,189,820,592	3,344,545,392	7,534,365,984
		25%	3,834,409,488	3,060,836,688	6,895,246,176
	50%	100%	4,083,869,000	3,259,969,000	7,343,838,000
		75%	3,787,693,080	3,023,545,080	6,811,238,160
		50%	3,491,517,160	2,787,121,160	6,278,638,320
		25%	3,195,341,240	2,550,697,240	5,746,038,480
	40%	100%	3,267,095,200	2,607,975,200	5,875,070,400
		75%	3,030,154,464	2,418,836,064	5,448,990,528
		50%	2,793,213,728	2,229,696,928	5,022,910,656
		25%	2,556,272,992	2,040,557,792	4,596,830,784
	30%	100%	2,450,321,400	1,955,981,400	4,406,302,800
		75%	2,272,615,848	1,814,127,048	4,086,742,896
		50%	2,094,910,296	1,672,272,696	3,767,182,992
		25%	1,917,204,744	1,530,418,344	3,447,623,088
	20%	100%	1,633,547,600	1,303,987,600	2,937,535,200
		75%	1,515,077,232	1,209,418,032	2,724,495,264
		50%	1,396,606,864	1,114,848,464	2,511,455,328
		25%	1,278,136,496	1,020,278,896	2,298,415,392
	10%	100%	816,773,800	651,993,800	1,468,767,600
		75%	757,538,616	604,709,016	1,362,247,632
		50%	698,303,432	557,424,232	1,255,727,664
		25%	639,068,248	510,139,448	1,149,207,696
39세	100%	100%	7,936,404,000	6,787,919,500	14,724,323,500
		75%	7,360,829,280	6,295,636,740	13,656,466,020
		50%	6,785,254,560	5,803,353,980	12,588,608,540
		25%	6,209,679,840	5,311,071,220	11,520,751,060
	90%	100%	7,142,763,600	6,109,127,550	13,251,891,150
		75%	6,624,746,352	5,666,073,066	12,290,819,418
		50%	6,106,729,104	5,223,018,582	11,329,747,686
		25%	5,588,711,856	4,779,964,098	10,368,675,954
	80%	100%	6,349,123,200	5,430,335,600	11,779,458,800
		75%	5,888,663,424	5,036,509,392	10,925,172,816
		50%	5,428,203,648	4,642,683,184	10,070,886,832
		25%	4,967,743,872	4,248,856,976	9,216,600,848
	70%	100%	5,555,482,800	4,751,543,650	10,307,026,450
		75%	5,152,580,496	4,406,945,718	9,559,526,214
		50%	4,749,678,192	4,062,347,786	8,812,025,978
		25%	4,346,775,888	3,717,749,854	8,064,525,742
	60%	100%	4,761,842,400	4,072,751,700	8,834,594,100
		75%	4,416,497,568	3,777,382,044	8,193,879,612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총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총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50%	4,071,152,736	3,482,012,388	7,553,165,124
		25%	3,725,807,904	3,186,642,732	6,912,450,636
	50%	100%	3,968,202,000	3,393,959,750	7,362,161,750
		75%	3,680,414,640	3,147,818,370	6,828,233,010
		50%	3,392,627,280	2,901,676,990	6,294,304,270
		25%	3,104,839,920	2,655,535,610	5,760,375,530
	40%	100%	3,174,561,600	2,715,167,800	5,889,729,400
		75%	2,944,331,712	2,518,254,696	5,462,586,408
		50%	2,714,101,824	2,321,341,592	5,035,443,416
		25%	2,483,871,936	2,124,428,488	4,608,300,424
	30%	100%	2,380,921,200	2,036,375,850	4,417,297,050
		75%	2,208,248,784	1,888,691,022	4,096,939,806
		50%	2,035,576,368	1,741,006,194	3,776,582,562
		25%	1,862,903,952	1,593,321,366	3,456,225,318
	20%	100%	1,587,280,800	1,357,583,900	2,944,864,700
		75%	1,472,165,856	1,259,127,348	2,731,293,204
		50%	1,357,050,912	1,160,670,796	2,517,721,708
		25%	1,241,935,968	1,062,214,244	2,304,150,212
	10%	100%	793,640,400	678,791,950	1,472,432,350
		75%	736,082,928	629,563,674	1,365,646,602
		50%	678,525,456	580,335,398	1,258,860,854
		25%	620,967,984	531,107,122	1,152,075,106
통합(35세+36세+37세+38세+39세)	100%	100%	73,702,135,000	41,934,423,500	73,702,135,000
		75%	68,357,008,200	38,893,198,020	68,357,008,200
		50%	63,011,881,400	35,851,972,540	63,011,881,400
		25%	57,666,754,600	32,810,747,060	57,666,754,600
	90%	100%	66,331,921,500	37,740,981,150	66,331,921,500
		75%	61,521,307,380	35,003,878,218	61,521,307,380
		50%	56,710,693,260	32,266,775,286	56,710,693,260
		25%	51,900,079,140	29,529,672,354	51,900,079,140
	80%	100%	58,961,708,000	33,547,538,800	58,961,708,000
		75%	54,685,606,560	31,114,558,416	54,685,606,560
		50%	50,409,505,120	28,681,578,032	50,409,505,120
		25%	46,133,403,680	26,248,597,648	46,133,403,680
	70%	100%	51,591,494,500	29,354,096,450	51,591,494,500
		75%	47,849,905,740	27,225,238,614	47,849,905,740
		50%	44,108,316,980	25,096,380,778	44,108,316,980
		25%	40,366,728,220	22,967,522,942	40,366,728,220
	60%	100%	44,221,281,000	25,160,654,100	44,221,281,000
		75%	41,014,204,920	23,335,918,812	41,014,204,920
		50%	37,807,128,840	21,511,183,524	37,807,128,840
		25%	34,600,052,760	19,686,448,236	34,600,052,760
	50%	100%	36,851,067,500	20,967,211,750	36,851,067,500
		75%	34,178,504,100	19,446,599,010	34,178,504,100
		50%	31,505,940,700	17,925,986,270	31,505,940,700
		25%	28,833,377,300	16,405,373,530	28,833,377,300
	40%	100%	29,480,854,000	16,773,769,400	29,480,854,000
		75%	27,342,803,280	15,557,279,208	27,342,803,280
		50%	25,204,752,560	14,340,789,016	25,204,752,560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총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총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30%	25%	23,066,701,840	13,124,298,824	23,066,701,840
		100%	22,110,640,500	12,580,327,050	22,110,640,500
		75%	20,507,102,460	11,667,959,406	20,507,102,460
		50%	18,903,564,420	10,755,591,762	18,903,564,420
		25%	17,300,026,380	9,843,224,118	17,300,026,380
	20%	100%	14,740,427,000	8,386,884,700	14,740,427,000
		75%	13,671,401,640	7,778,639,604	13,671,401,640
		50%	12,602,376,280	7,170,394,508	12,602,376,280
		25%	11,533,350,920	6,562,149,412	11,533,350,920
	10%	100%	7,370,213,500	4,193,442,350	7,370,213,500
		75%	6,835,700,820	3,889,319,802	6,835,700,820
		50%	6,301,188,140	3,585,197,254	6,301,188,140
		25%	5,766,675,460	3,281,074,706	5,766,675,460

<표 8>을 살펴보면 연령 35세-39세 기준 직장피부양자와 지역세대원 일반건강검진(1차, 2차)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대상 인원 중 35 세인 경우 총 소요 예산의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5,703,100,000 - 446,227,600 원이다. 36 세인 경우 총 소요 예산의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5,358,453,000 - 419,261,388 원이다. 37 세인 경우 총 소요 예산의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5,513,763,500 - 431,413,346 원이다. 38 세인 경우 총 소요 예산의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5,272,906,500 - 412,567,974 원이다. 39 세인 경우 총 소요 예산의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5,239,094,500 - 409,922,422 원이다.

또한 35세-39세 구간의 기준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세대원 일반건강검진(1차, 2차)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대상 인원 대상 인원 및 소요 예산의 최대액과 최소액의 범위는 27,087,317,500 - 2,119,392,730 원이다. 최근 2007년 기준 1차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 대이고 2차 수검율이 30%를 고려하면 아래의 표에서 가장 근접한 1차 수검율을 50%와 2차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에 따르면 총 소요예산은 10,596,963,650 원이다.

<표 8> 연령 35세-39세 기준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세대원의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대상 인원일반건강검진(1차·2차) 총 소요예산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35세	100%	100%	2,914,359,000	2,788,741,000	5,703,100,000
		75%	2,702,999,880	2,586,492,120	5,289,492,000
		50%	2,491,640,760	2,384,243,240	4,875,884,000
		25%	2,280,281,640	2,181,994,360	4,462,276,000
	90%	100%	2,622,923,100	2,509,866,900	5,132,790,000
		75%	2,432,699,892	2,327,842,908	4,760,542,800
		50%	2,242,476,684	2,145,818,916	4,388,295,600
		25%	2,052,253,476	1,963,794,924	4,016,048,400
	80%	100%	2,331,487,200	2,230,992,800	4,562,480,000
		75%	2,162,399,904	2,069,193,696	4,231,593,600
		50%	1,993,312,608	1,907,394,592	3,900,707,200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25%	1,824,225,312	1,745,595,488	3,569,820,800
	70%	100%	2,040,051,300	1,952,118,700	3,992,170,000
		75%	1,892,099,916	1,810,544,484	3,702,644,400
		50%	1,744,148,532	1,668,970,268	3,413,118,800
		25%	1,596,197,148	1,527,396,052	3,123,593,200
	60%	100%	1,748,615,400	1,673,244,600	3,421,860,000
		75%	1,621,799,928	1,551,895,272	3,173,695,200
		50%	1,494,984,456	1,430,545,944	2,925,530,400
		25%	1,368,168,984	1,309,196,616	2,677,365,600
	50%	100%	1,457,179,500	1,394,370,500	2,851,550,000
		75%	1,351,499,940	1,293,246,060	2,644,746,000
		50%	1,245,820,380	1,192,121,620	2,437,942,000
		25%	1,140,140,820	1,090,997,180	2,231,138,000
	40%	100%	1,165,743,600	1,115,496,400	2,281,240,000
		75%	1,081,199,952	1,034,596,848	2,115,796,800
		50%	996,656,304	953,697,296	1,950,353,600
		25%	912,112,656	872,797,744	1,784,910,400
	30%	100%	874,307,700	836,622,300	1,710,930,000
		75%	810,899,964	775,947,636	1,586,847,600
		50%	747,492,228	715,272,972	1,462,765,200
		25%	684,084,492	654,598,308	1,338,682,800
	20%	100%	582,871,800	557,748,200	1,140,620,000
		75%	540,599,976	517,298,424	1,057,898,400
		50%	498,328,152	476,848,648	975,176,800
		25%	456,056,328	436,398,872	892,455,200
	10%	100%	291,435,900	278,874,100	570,310,000
		75%	270,299,988	258,649,212	528,949,200
		50%	249,164,076	238,424,324	487,588,400
		25%	228,028,164	218,199,436	446,227,600
36세	100%	100%	2,635,624,000	2,722,829,000	5,358,453,000
		75%	2,444,479,680	2,525,360,280	4,969,839,960
		50%	2,253,335,360	2,327,891,560	4,581,226,920
		25%	2,062,191,040	2,130,422,840	4,192,613,880
	90%	100%	2,372,061,600	2,450,546,100	4,822,607,700
		75%	2,200,031,712	2,272,824,252	4,472,855,964
		50%	2,028,001,824	2,095,102,404	4,123,104,228
		25%	1,855,971,936	1,917,380,556	3,773,352,492
	80%	100%	2,108,499,200	2,178,263,200	4,286,762,400
		75%	1,955,583,744	2,020,288,224	3,975,871,968
		50%	1,802,668,288	1,862,313,248	3,664,981,536
		25%	1,649,752,832	1,704,338,272	3,354,091,104
	70%	100%	1,844,936,800	1,905,980,300	3,750,917,100
		75%	1,711,135,776	1,767,752,196	3,478,887,972
		50%	1,577,334,752	1,629,524,092	3,206,858,844
		25%	1,443,533,728	1,491,295,988	2,934,829,716
	60%	100%	1,581,374,400	1,633,697,400	3,215,071,800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75%	1,466,687,808	1,515,216,168	2,981,903,976
		50%	1,352,001,216	1,396,734,936	2,748,736,152
		25%	1,237,314,624	1,278,253,704	2,515,568,328
	50%	100%	1,317,812,000	1,361,414,500	2,679,226,500
		75%	1,222,239,840	1,262,680,140	2,484,919,980
		50%	1,126,667,680	1,163,945,780	2,290,613,460
		25%	1,031,095,520	1,065,211,420	2,096,306,940
	40%	100%	1,054,249,600	1,089,131,600	2,143,381,200
		75%	977,791,872	1,010,144,112	1,987,935,984
		50%	901,334,144	931,156,624	1,832,490,768
		25%	824,876,416	852,169,136	1,677,045,552
	30%	100%	790,687,200	816,848,700	1,607,535,900
		75%	733,343,904	757,608,084	1,490,951,988
		50%	676,000,608	698,367,468	1,374,368,076
		25%	618,657,312	639,126,852	1,257,784,164
	20%	100%	527,124,800	544,565,800	1,071,690,600
		75%	488,895,936	505,072,056	993,967,992
		50%	450,667,072	465,578,312	916,245,384
		25%	412,438,208	426,084,568	838,522,776
	10%	100%	263,562,400	272,282,900	535,845,300
		75%	244,447,968	252,536,028	496,983,996
		50%	225,333,536	232,789,156	458,122,692
		25%	206,219,104	213,042,284	419,261,388
37세	100%	100%	2,605,664,000	2,908,099,500	5,513,763,500
		75%	2,416,692,480	2,697,194,340	5,113,886,820
		50%	2,227,720,960	2,486,289,180	4,714,010,140
		25%	2,038,749,440	2,275,384,020	4,314,133,460
	90%	100%	2,345,097,600	2,617,289,550	4,962,387,150
		75%	2,175,023,232	2,427,474,906	4,602,498,138
		50%	2,004,948,864	2,237,660,262	4,242,609,126
		25%	1,834,874,496	2,047,845,618	3,882,720,114
	80%	100%	2,084,531,200	2,326,479,600	4,411,010,800
		75%	1,933,353,984	2,157,755,472	4,091,109,456
		50%	1,782,176,768	1,989,031,344	3,771,208,112
		25%	1,630,999,552	1,820,307,216	3,451,306,768
	70%	100%	1,823,964,800	2,035,669,650	3,859,634,450
		75%	1,691,684,736	1,888,036,038	3,579,720,774
		50%	1,559,404,672	1,740,402,426	3,299,807,098
		25%	1,427,124,608	1,592,768,814	3,019,893,422
	60%	100%	1,563,398,400	1,744,859,700	3,308,258,100
		75%	1,450,015,488	1,618,316,604	3,068,332,092
		50%	1,336,632,576	1,491,773,508	2,828,406,084
		25%	1,223,249,664	1,365,230,412	2,588,480,076
	50%	100%	1,302,832,000	1,454,049,750	2,756,881,750
		75%	1,208,346,240	1,348,597,170	2,556,943,410
		50%	1,113,860,480	1,243,144,590	2,357,005,070
		25%	1,019,374,720	1,137,692,010	2,157,066,730
	40%	100%	1,042,265,600	1,163,239,800	2,205,505,400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75%	966,676,992	1,078,877,736	2,045,554,728
		50%	891,088,384	994,515,672	1,885,604,056
		25%	815,499,776	910,153,608	1,725,653,384
	30%	100%	781,699,200	872,429,850	1,654,129,050
		75%	725,007,744	809,158,302	1,534,166,046
		50%	668,316,288	745,886,754	1,414,203,042
		25%	611,624,832	682,615,206	1,294,240,038
	20%	100%	521,132,800	581,619,900	1,102,752,700
		75%	483,338,496	539,438,868	1,022,777,364
		50%	445,544,192	497,257,836	942,802,028
		25%	407,749,888	455,076,804	862,826,692
	10%	100%	260,566,400	290,809,950	551,376,350
		75%	241,669,248	269,719,434	511,388,682
		50%	222,772,096	248,628,918	471,401,014
		25%	203,874,944	227,538,402	431,413,346
38세	100%	100%	2,388,186,500	2,884,720,000	5,272,906,500
		75%	2,214,987,180	2,675,510,400	4,890,497,580
		50%	2,041,787,860	2,466,300,800	4,508,088,660
		25%	1,868,588,540	2,257,091,200	4,125,679,740
	90%	100%	2,149,367,850	2,596,248,000	4,745,615,850
		75%	1,993,488,462	2,407,959,360	4,401,447,822
		50%	1,837,609,074	2,219,670,720	4,057,279,794
		25%	1,681,729,686	2,031,382,080	3,713,111,766
	80%	100%	1,910,549,200	2,307,776,000	4,218,325,200
		75%	1,771,989,744	2,140,408,320	3,912,398,064
		50%	1,633,430,288	1,973,040,640	3,606,470,928
		25%	1,494,870,832	1,805,672,960	3,300,543,792
	70%	100%	1,671,730,550	2,019,304,000	3,691,034,550
		75%	1,550,491,026	1,872,857,280	3,423,348,306
		50%	1,429,251,502	1,726,410,560	3,155,662,062
		25%	1,308,011,978	1,579,963,840	2,887,975,818
	60%	100%	1,432,911,900	1,730,832,000	3,163,743,900
		75%	1,328,992,308	1,605,306,240	2,934,298,548
		50%	1,225,072,716	1,479,780,480	2,704,853,196
		25%	1,121,153,124	1,354,254,720	2,475,407,844
	50%	100%	1,194,093,250	1,442,360,000	2,636,453,250
		75%	1,107,493,590	1,337,755,200	2,445,248,790
		50%	1,020,893,930	1,233,150,400	2,254,044,330
		25%	934,294,270	1,128,545,600	2,062,839,870
	40%	100%	955,274,600	1,153,888,000	2,109,162,600
		75%	885,994,872	1,070,204,160	1,956,199,032
		50%	816,715,144	986,520,320	1,803,235,464
		25%	747,435,416	902,836,480	1,650,271,896
	30%	100%	716,455,950	865,416,000	1,581,871,950
		75%	664,496,154	802,653,120	1,467,149,274
		50%	612,536,358	739,890,240	1,352,426,598
		25%	560,576,562	677,127,360	1,237,703,922
	20%	100%	477,637,300	576,944,000	1,054,581,300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75%	442,997,436	535,102,080	978,099,516
		50%	408,357,572	493,260,160	901,617,732
		25%	373,717,708	451,418,240	825,135,948
	10%	100%	238,818,650	288,472,000	527,290,650
		75%	221,498,718	267,551,040	489,049,758
		50%	204,178,786	246,630,080	450,808,866
		25%	186,858,854	225,709,120	412,567,974
39세	100%	100%	2,293,973,000	2,945,121,500	5,239,094,500
		75%	2,127,606,360	2,731,531,380	4,859,137,740
		50%	1,961,239,720	2,517,941,260	4,479,180,980
		25%	1,794,873,080	2,304,351,140	4,099,224,220
	90%	100%	2,064,575,700	2,650,609,350	4,715,185,050
		75%	1,914,845,724	2,458,378,242	4,373,223,966
		50%	1,765,115,748	2,266,147,134	4,031,262,882
		25%	1,615,385,772	2,073,916,026	3,689,301,798
	80%	100%	1,835,178,400	2,356,097,200	4,191,275,600
		75%	1,702,085,088	2,185,225,104	3,887,310,192
		50%	1,568,991,776	2,014,353,008	3,583,344,784
		25%	1,435,898,464	1,843,480,912	3,279,379,376
	70%	100%	1,605,781,100	2,061,585,050	3,667,366,150
		75%	1,489,324,452	1,912,071,966	3,401,396,418
		50%	1,372,867,804	1,762,558,882	3,135,426,686
		25%	1,256,411,156	1,613,045,798	2,869,456,954
	60%	100%	1,376,383,800	1,767,072,900	3,143,456,700
		75%	1,276,563,816	1,638,918,828	2,915,482,644
		50%	1,176,743,832	1,510,764,756	2,687,508,588
		25%	1,076,923,848	1,382,610,684	2,459,534,532
	50%	100%	1,146,986,500	1,472,560,750	2,619,547,250
		75%	1,063,803,180	1,365,765,690	2,429,568,870
		50%	980,619,860	1,258,970,630	2,239,590,490
		25%	897,436,540	1,152,175,570	2,049,612,110
	40%	100%	917,589,200	1,178,048,600	2,095,637,800
		75%	851,042,544	1,092,612,552	1,943,655,096
		50%	784,495,888	1,007,176,504	1,791,672,392
		25%	717,949,232	921,740,456	1,639,689,688
	30%	100%	688,191,900	883,536,450	1,571,728,350
		75%	638,281,908	819,459,414	1,457,741,322
		50%	588,371,916	755,382,378	1,343,754,294
		25%	538,461,924	691,305,342	1,229,767,266
	20%	100%	458,794,600	589,024,300	1,047,818,900
		75%	425,521,272	546,306,276	971,827,548
		50%	392,247,944	503,588,252	895,836,196
		25%	358,974,616	460,870,228	819,844,844
	10%	100%	229,397,300	294,512,150	523,909,450
		75%	212,760,636	273,153,138	485,913,774
		50%	196,123,972	251,794,126	447,918,098
		25%	179,487,308	230,435,114	409,922,422

연령	가상수검율		직장피부양자 소요예산(I)	지역세대원 소요예산(II)	총예산(I+II)
	1차	2차			
통합(35세+36세+ 37세+38세+39세)	100%	100%	12,837,806,500	14,249,511,000	27,087,317,500
		75%	11,906,765,580	13,216,088,520	25,122,854,100
		50%	10,975,724,660	12,182,666,040	23,158,390,700
		25%	10,044,683,740	11,149,243,560	21,193,927,300
	90%	100%	11,554,025,850	12,824,559,900	24,378,585,750
		75%	10,716,089,022	11,894,479,668	22,610,568,690
		50%	9,878,152,194	10,964,399,436	20,842,551,630
		25%	9,040,215,366	10,034,319,204	19,074,534,570
	80%	100%	10,270,245,200	11,399,608,800	21,669,854,000
		75%	9,525,412,464	10,572,870,816	20,098,283,280
		50%	8,780,579,728	9,746,132,832	18,526,712,560
		25%	8,035,746,992	8,919,394,848	16,955,141,840
	70%	100%	8,986,464,550	9,974,657,700	18,961,122,250
		75%	8,334,735,906	9,251,261,964	17,585,997,870
		50%	7,683,007,262	8,527,866,228	16,210,873,490
		25%	7,031,278,618	7,804,470,492	14,835,749,110
	60%	100%	7,702,683,900	8,549,706,600	16,252,390,500
		75%	7,144,059,348	7,929,653,112	15,073,712,460
		50%	6,585,434,796	7,309,599,624	13,895,034,420
		25%	6,026,810,244	6,689,546,136	12,716,356,380
	50%	100%	6,418,903,250	7,124,755,500	13,543,658,750
		75%	5,953,382,790	6,608,044,260	12,561,427,050
		50%	5,487,862,330	6,091,333,020	11,579,195,350
		25%	5,022,341,870	5,574,621,780	10,596,963,650
	40%	100%	5,135,122,600	5,699,804,400	10,834,927,000
		75%	4,762,706,232	5,286,435,408	10,049,141,640
		50%	4,390,289,864	4,873,066,416	9,263,356,280
		25%	4,017,873,496	4,459,697,424	8,477,570,920
	30%	100%	3,851,341,950	4,274,853,300	8,126,195,250
		75%	3,572,029,674	3,964,826,556	7,536,856,230
		50%	3,292,717,398	3,654,799,812	6,947,517,210
		25%	3,013,405,122	3,344,773,068	6,358,178,190
	20%	100%	2,567,561,300	2,849,902,200	5,417,463,500
		75%	2,381,353,116	2,643,217,704	5,024,570,820
		50%	2,195,144,932	2,436,533,208	4,631,678,140
		25%	2,008,936,748	2,229,848,712	4,238,785,460
	10%	100%	1,283,780,650	1,424,951,100	2,708,731,750
		75%	1,190,676,558	1,321,608,852	2,512,285,410
		50%	1,097,572,466	1,218,266,604	2,315,839,070
		25%	1,004,468,374	1,114,924,356	2,119,392,730

### Ⅲ. 결어 및 정책 제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는 남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보다 적고 수검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은 건강검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만 40 세 이상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기준이 성비 불균형 현상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데 직장가입자와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수혜대상자로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에 피부양자들은 나이 만 40세 미만이면 건강검진 필요성이 있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건강검진의 수혜대상자 선정에서 여성, 특히 35-39세의 전업주부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35세-39세의 전업주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35세-39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로 많으며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여성이 남성 보다 2배 정도로 많다. 다시 말해, 35세-39세 사이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많은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만 40세 이상의 연령 제한으로 무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의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업주부의 건강 상태 및 건강검진율을 만 35세-39세 각 연령과 만 40세와 비교 분석하고 만 35세-39세와 만 40세-44세 구간의 전업주부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만 40세 기준은 보건학적 근거로 설정되었다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만 35세-39세 사이의 개별 연령별과 만 40세의 전업주부의 비교 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이환율(2 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우울증인 경우 전반적으로 35세-39세의 전업주부가 40세 전업 주부보다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만 35세-39세 사이의 전업주부가 몸이 아픈 경험이 늘어나고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 양육, 돌봄 관련 스트레스는 각종 만성 질환 및 암으로의 전환 및 발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질병 조기예방측면에서 만 35-39세 사이의 전업주부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요통, 갑상선 장애 유병율의 경우에는 만 35-39세와 만 40세-44세 연령대의 전업주부간의 소폭의 차이가 존재하나, 만 35세-39세 사이에 이미 유병율이 나타나고 있어 35세-39세 사이 혹은 이전에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 예방이 필요로 하다. 또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의 경우 만 40-44에서 유병율이 나타나고 있어 35세-39세 사이에서 조기 검진이 필요로 하다. 최근에는 실제로 30대에 자궁경부암 발병율이 나타나고 있어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대상이 30대로 낮춰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 상태에서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고혈압 전단계에 있는 만 35세-39세의 전업주부(14.8%)가 만 40세-44세의 전업주부(7.7%) 보다 거의 두 배나 높게 나타난다. 당뇨병과 관련된 공복혈당장애의 경우 두 그룹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만 35-39세, 2.4% vs. 만 40세-44세, 2.4%) 또한 만성폐쇄성질환일 경우에도 오히려 만 35-39세 집단이 만 40-44세 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2.4% vs. 0%). 이는 만성질환 예방적인 측면에서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상담이 35세-39세의 나이에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건강검진율을 살펴보면 만 35세-39세 전업주부들이 만 40세-44세 보다 건강검진율이 낮다(26.7% vs. 57.4%). 또한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진단율(7.4% vs. 42.7%)은 만 35세-39세의 전업주부가 만 40세-44세 전업주부 보다 상당히 낮은 반면 암검진 본인 부담율은 35세-39세 전업주부가 만 40세 전업 주부 보다 높다(36.6% vs. 29.0%).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인 세대주와 세대원 관련 변수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결과 분석에서 35세-39세 전업주부 건강보험 건강검진율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업 주부가 세대주일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건강검진율들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에 의한 무료 일반건강검진에 대상자를 만 40세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정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만 35-39세 사이의 전업주부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서울시내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 대상의 전화 조사에서도 4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66.8%(267)가 무료 일반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24.5%(98)가 '꼭 받아보고 싶다' 라고 대답하였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만 4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수요 정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중 96.5%(386)가 '받을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40세 이상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제도를 4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은 조사대상자 중 92.3%(369)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차 일반건강검진 및 2차 건강검진 비용을 활용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40세 미만인 여성 중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연령의 대상인원을 파악하고 대상인원과 수검률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최근 2007년 기준 1차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수검율이 30%에 따라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수검율 50%와 2차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예산은 28,833,377,300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기준 총 예산 집행액 3,272 억 중 약 8%에 해당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여성을 위한 만 35세-39세 구간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와 지역 세대원 일반건강검진(1차, 2차)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대상 인원 중 2007년 기준 1차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수검율이 30%에 따라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수검율 50%와 2차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예산은 10,596,963,650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기준 총 예산 집행액 3,272 억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도별 암 검진을 제외한 일반건강검진의 예산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인원 및 수검율의 증가에 따라 2004년에 1,497억, 2005년 1,798억, 2006년 2,2224억, 2007년 2,495억, 2008년 3,272억으로 증가 추세이다(건강검진 사업 현황, 2009). 그러나 본 연구의 일반 건강검진 현황(2003-2007)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의 대상인원 및 수검율이 낮아 예산 지급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을 것이라고 유추될 수 있어 성인지적 예산 성비 불균형 해소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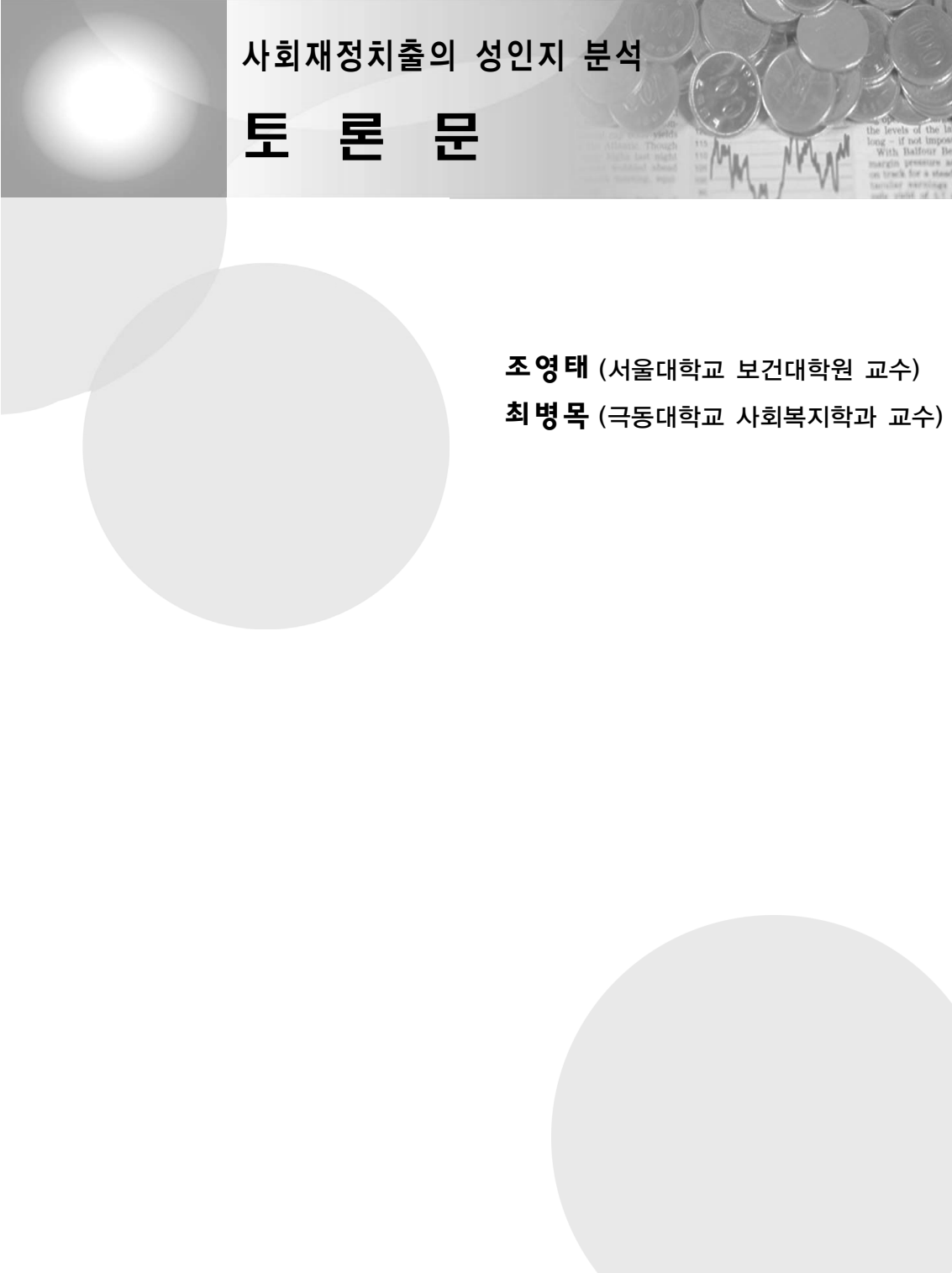
그러한 방법 중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35세-39세사이의 여성, 특히 전업주부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연령 40세 이상 기준을 35세 이상으로 낮추고 앞에서 언급된 신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기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40세 미만의 35세-39세의 전업주부가 건강하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전체 사회 구성원의 건강 수준과 생산력이 증진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제 4기 1차년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검진 결과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건강검진 결과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건강검진 결과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검진 자료, 만 35세-39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인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 검진 사업 현황.
- 이원철. 2006.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II).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건강 증진사업단.
- 질병관리본부. 2008. 만성병조사팀, 김영택. 대한예방의학회 동계심포지엄.







사회재정치출의 성인지 분석

# 토론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병목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조 영 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검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설정한 사업 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되어 무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집단의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점에서, 국가에게는 질병 예방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자원의 절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검진 대상자들의 수검률도 연령별로 다르지만 대략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여성의 큰 비중이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에서는 현재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구집단으로 35-39세 피부양자 여성들 가운데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선정하고, 이들의 건강상태를 40대 이상 여성들과 비교하고, 간단한 전화 설문을 통해 이들의 건강검진 욕구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35세부터 각 연령이 무료건강검진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을 때 현재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을 산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현재 35-39세 여성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40세 이상의 여성들에 비해 적지 않고, 이들의 건강 수준도 40세 이상 여성들에 비해 크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건강검진은 현재의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인데, 경제적인 수준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35세 이상 피부양자 여성 모두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미만 가구의 피부양자 여성만을 새롭게 검진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든 피부양자가 1차와 2차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는 가정하면 약 2백 7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사실 질환의 발병을 기준으로 볼 때, 35-39세는 가장 “안정기”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의 확대는 지나친 예산의 낭비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질병과 이환은 모든 연령층으로 통해 누적되는 영향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건강과 질병의 생애주기

적인 관점에서 볼 때 35-39세가 그 이후 연령대에 비해 특별히 “누적 효과”가 적다고만 볼 수 없다. 특히 연구에서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층의 여성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계층 간 건강의 격차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 계층의 효과는 연령의 효과를 넘어서고 있다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 결국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연령층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경험을 했는지가 노년기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보면 낮은 계층의 삶의 경험은 부모가 아닌 본인의 자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20대 중후반부터 높은 계층의 그것과 차별되고, 특히 가정을 이루고 어린 자녀의 양육과 보육이 진행되는 30대 중후반에는 그 차별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악화되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노동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자체가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정내에서 보육과 가사노동의 거의 전부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35-39세 저소득층 여성 인구의 삶의 경험은 이 연령대에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병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건강검진의 대상을 35-39세 저소득층 피부양자 여성에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 모두가 건강검진을 최대한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백 7십억 원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면 건강검진의 대상을 이들 인구집단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건강검진 수진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주가입자와 피부양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피부양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현재에도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높지 않은 형편인데, 건강검진 대상자를 3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만으로 확대 적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의 수검율이 소득 계층별로 다르고 낮은 계층의 수검율이 낮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3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인구를 포함하도록 검진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더라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 대상자의 35-39세 저소득 여성들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소득 계층의 수검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지, 특히 피부양자들의 수검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상 확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검진의 대상을 35-39세 저소득층 피부양자로 확대하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바로 검진의 내용이다. 현재 건강검진의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에 자세하게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신체적인 건강상태의 점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연령대 여성들의 건강은 신체적인 차원만을 고려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연령대 여성들은 신체보다는 정신/정서적인 질병과 생활스트레스에 노출된 경

우가 많은데, 이러한 노출은 누적되어 수십 년 후 정신은 물론 신체적인 만성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만일 검진의 대상이 확대된다면, 이들 인구집단에 적절한 건강검진의 형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여성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질 것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비록 수명은 길지만 오랜 시간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인구집단의 만성질환 발병 시기를 하루라도 뒤로 늦추거나 질환의 중증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일은 이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35-39세 저소득층 여성들로 확대되고 이들의 수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보다는 20-30년 후 국가의 사회적 지출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 사각지대 성인지적 분석” 토론문

최 병 목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전체 사회구성원의 보다 나은 건강수준과 그에 따른 생산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 1. 문제점

남녀 성별로 나누어 볼 때 건강검진 수혜대상자에서 성비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잠정적인 무료 건강검진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조기검진으로 조기에방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무료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병을 키워서 치료를 받게 되므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커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무료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외대상에 대한 폭을 넓혀 수혜혜택을 받게 함으로 예산사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조기에방을 통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만들고, 사회통합에도 일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 연구대상에 대한 확대요구

연령적으로 볼 때, 그동안 수혜대상은 만 40세 이상이라는 적용 제한이 있어왔다. 정부가 내세운 만 40세 이상이라는 보건학적 적용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다. 2007년도 전국 규모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분석(총 분석대상 표본수: 338,523명, 그 중에 35-39세: 125,303명, 40세 이상: 213,220명)에 따르면 건강검진결과 여성의 만 35-39세가 오히려 주관적 건강상태,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으로 본 질환이환율, 우울증 등이 40세 이상 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다.

즉 35-39세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있는 많은 전업주부가 건강검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적용기준인 만 40세 이상의 연령 제한으로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35-39세 주부는 40세 이상 주부보다 상대적으로 가사와 자녀양육, 돌봄 스트레스,

각종 만성질환, 암으로의 전환 및 발진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그래서 40세로 넘어가기 이전단계인 35-39세에 조기진단을 통한 질병예방을 권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이 필요하고, 고혈압 전단계, 당뇨병, 만성폐쇄성질환에 예방측면의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상담이 35-39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건강검진 대상자인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인 직장피부양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의 전업주부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연구자는 정당화 근거를 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만 40세 이하인 만 35-39세의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하자는 논리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대상 수요조사 연구결과에서도 12명 중에서 11명의 30대 전업주부들이 무료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 연령기준을 40세 미만으로 확대적용과 시기적으로도 가급적 빨리 받기를 97%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상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화의 근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울러 적용대상 확대 시의 여성 대상인원과 수검율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산추계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만 35-39세 여성의 경우는 2008년 기준 총 3,272억원 중에 288억원으로 약 8% 규모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105억원으로 약 3%에 해당된다. 이를 성인지적 측면에서 예산을 보더라도 성비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는 성인지적 예산 성비 불균형해소 방법을 요구한다. 토론자도 연구자의 주장인 35-39세 여성으로 전업주부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도록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연령 35세로 낮추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더 보완되었으면 한다.

연구자가 사용한 다양한 분석방법 및 결과로 제시한 유효한 자료정리는 연구자의 노고가 많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의 것으로는 원고 작성에 있어 한 문장에 1개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도록 문장을 간단 명료하게 다듬었으면 한다.